

성과관리 전략계획 (2011 ~ 2015)

2011. 4.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2011~2015)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관리담당관실(02-750-1641, 16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2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향후 정책추진방향	38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54
1. 일반현황	55
2. 전략계획 개요	57
III. 세부 추진계획	60
전략목표 I. 스마트 성장동력 창출	61
전략목표 II. 스마트 경쟁체제 정착	108
전략목표 III. 스마트 생활문화 형성	134
전략목표 IV. 스마트 방송통신행정 구현	159

성과관리전략계획

[2011 ~ 2015]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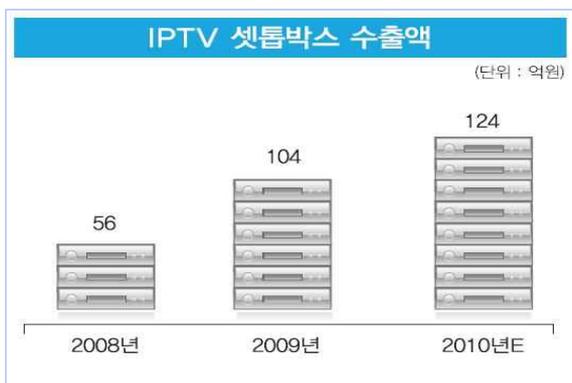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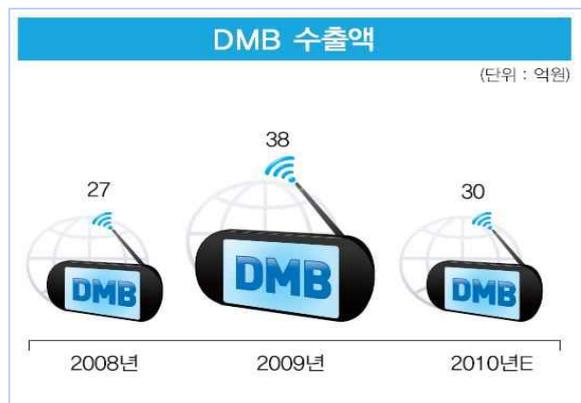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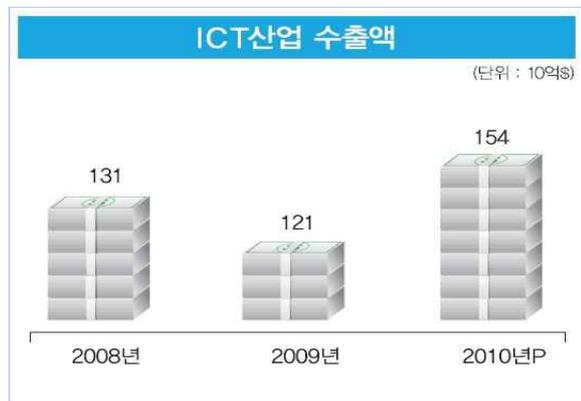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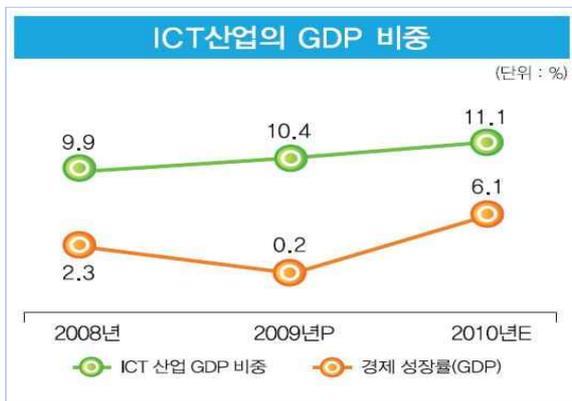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1) 그림으로 보는 방송통신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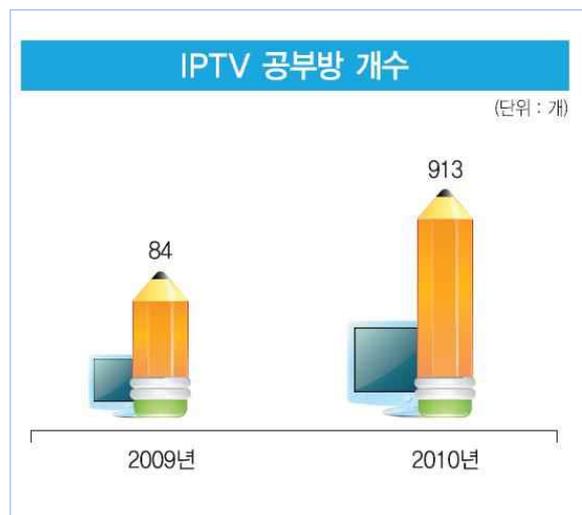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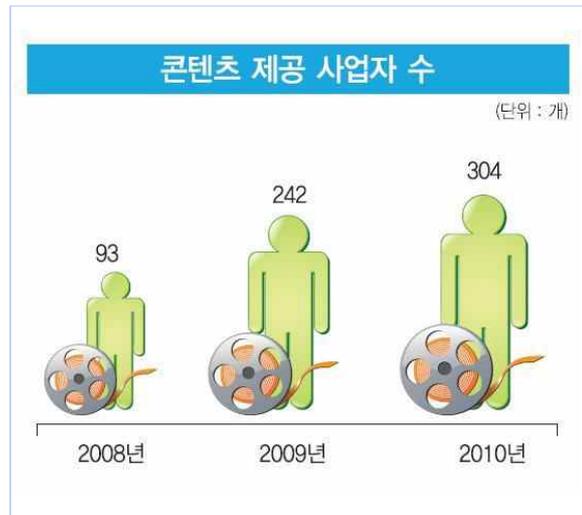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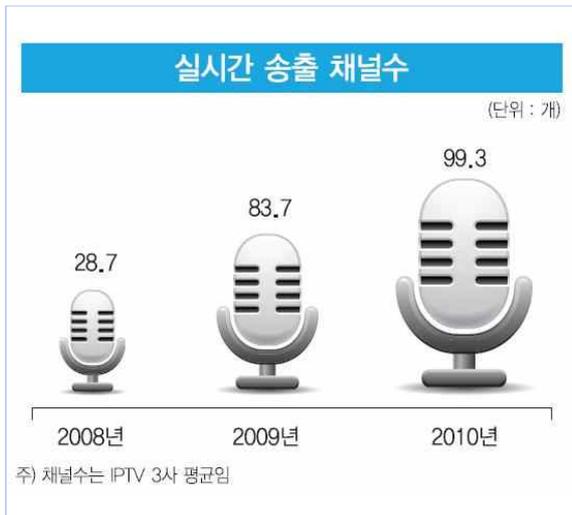
① 방송통신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o WiBro, 셋톱박스, 방송콘텐츠 등 방송통신 분야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IC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9.9%에서 2010년 11.1%로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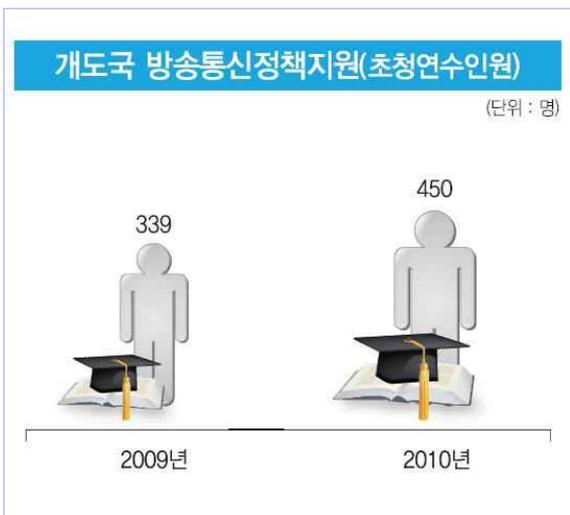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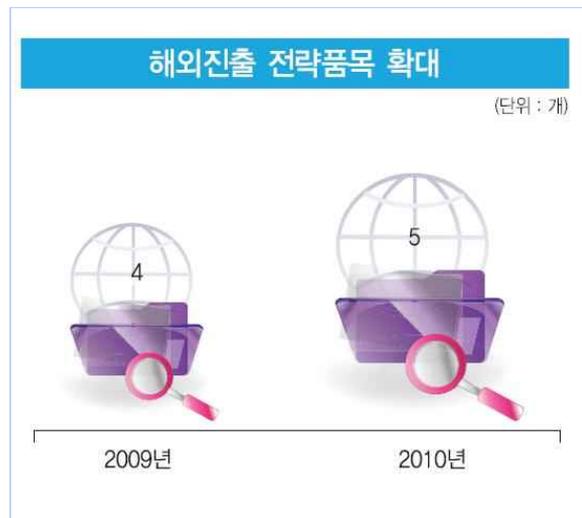
② IPTV 서비스를 확대하여 방송통신융합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IPTV는 서비스 개시 2년만에 365만명(실시간 308만명, Pre-IPTV 5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였습니다.
-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수는 2008년 93개사에서 2010년 304개사로 증가하였으며, 실시간 송출 채널수는 2009년 84개에서 2010년 99개로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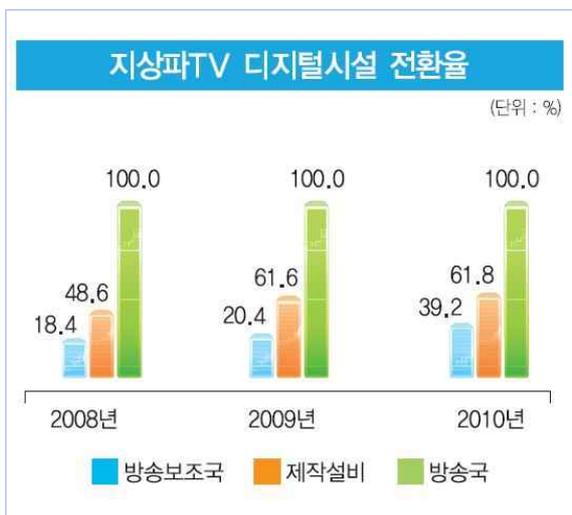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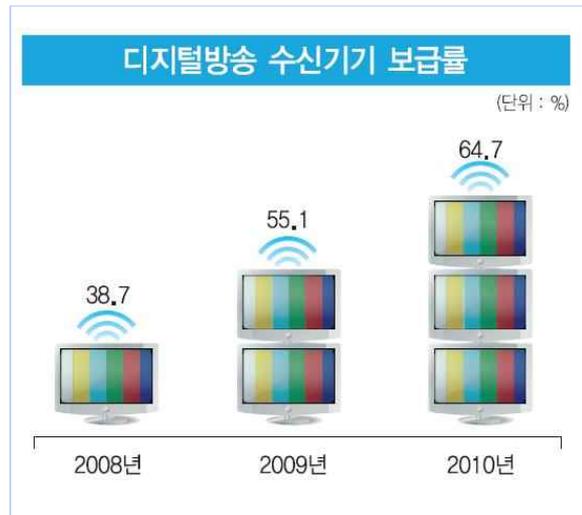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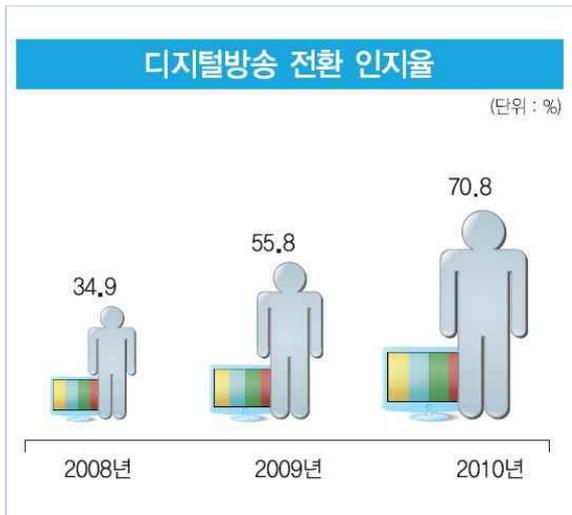
③ 방송통신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국가를 2009년 22개에서 25개 국가로 확대하였고, 해외진출 전략품목도 5개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지원을 위한 초청연수 인원은 339명에서 450명으로 증가하였고, 방송콘텐츠 해외 공동제작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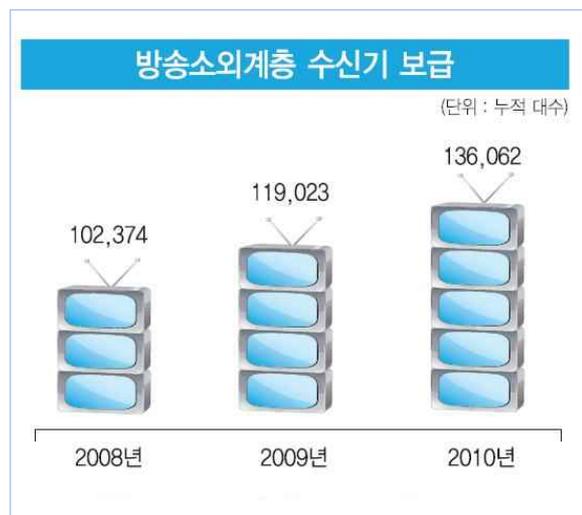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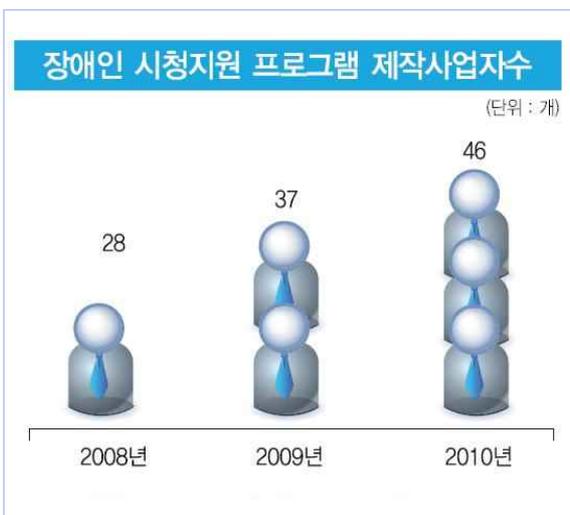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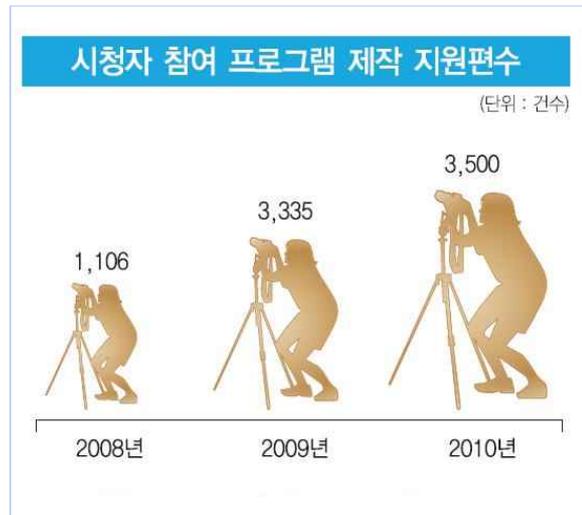
④ 방송의 차질없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대국민 인지율은 2008년 34.9%에서 2010년 70.8%로,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도 38.7%에서 64.7%로 상승하였습니다.
- 차질없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용자지원도 2008년 140억원에서 2010년 22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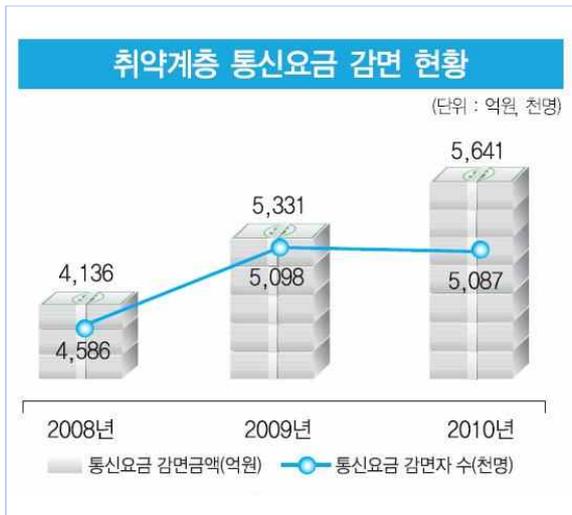
⑤ 소외계층의 방송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시청자 복지를 증진 하였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 16만명에 달하였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편수도 3,500편까지 늘렸습니다.
-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수신기 보급은 2010년 말까지 13만 6천대로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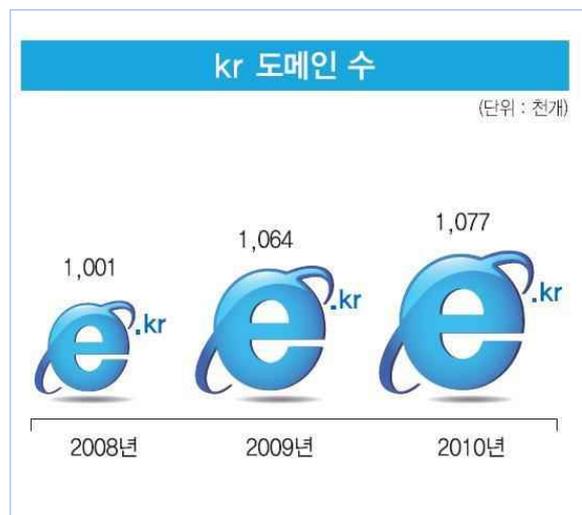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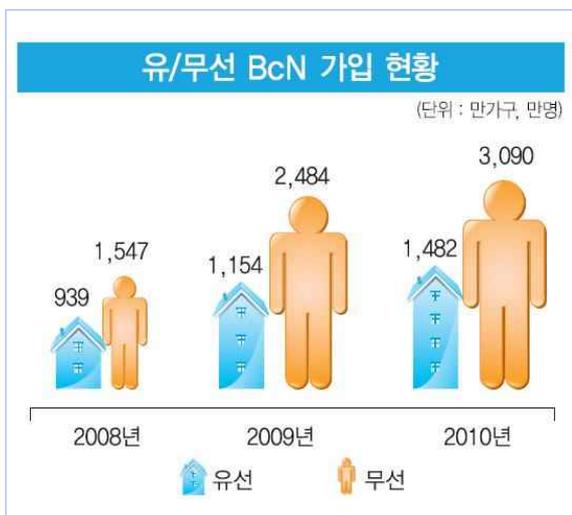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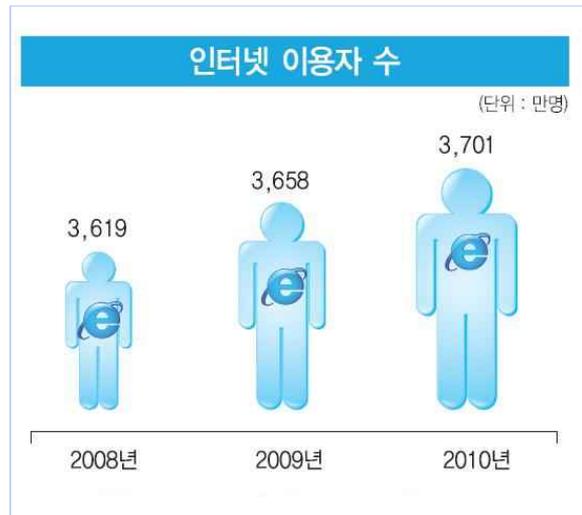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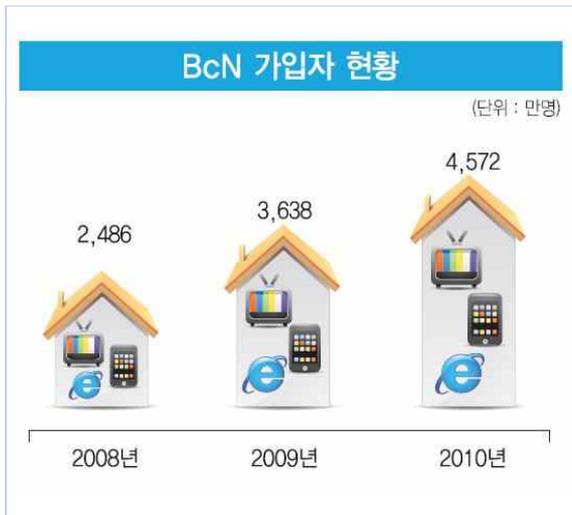
⑥ 가계통신비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자 수는 2010년 약 509만명으로 2008년 대비 10.9% 증가하였고, 감면액도 5,641억원으로 2008년 대비 36.4% 증가하였습니다.
- 이동전화 과금 단위를 기존 10초 단위에서 1초단위로 변경하였으며, 국내 유무선 접속료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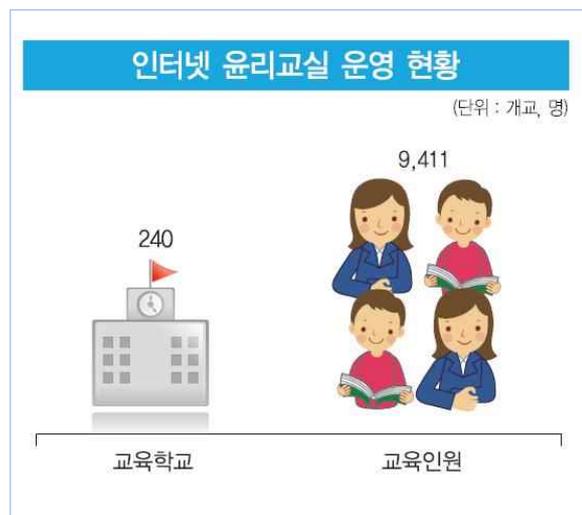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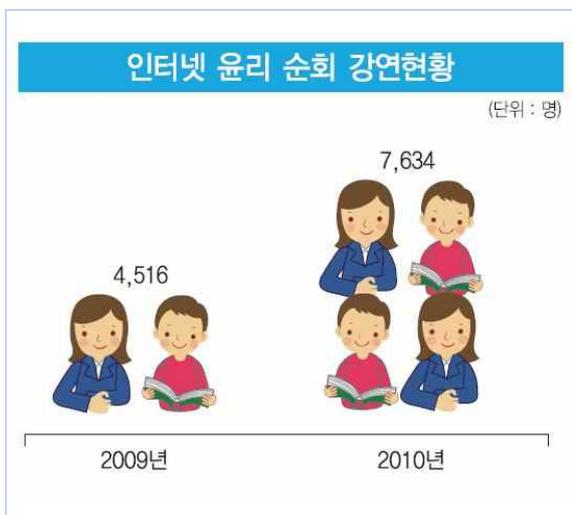
7 BcN 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품질을 높이는 등 방송통신망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o BcN은 4,572만명(유선 1,482만 가구, 무선 3,090만명)까지 보급하며 7년간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 o 인터넷 이용자수는 3,701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kr 도메인 수는 2008년 대비 7.6% 증가한 108만개를 확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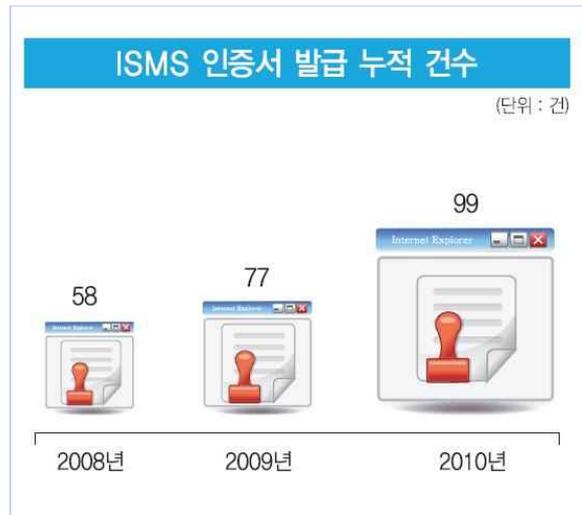
⑧ 미래 사회의 건전한 인터넷 및 통신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수는 2010년 167개로서 2009년 대비 9.2% 확대하였으며, 1인 일평균 이동전화 스팸수신량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 인터넷 윤리 제고를 위해 윤리교실 운영과 순회 강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⑨ 보안기술 및 예방서비스 보급을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i-PIN 발급은 2010년 304만건으로 2009년 대비 82% 증가하였고, ISMS 인증서 발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국가 보안기술인 SEED는 2009년 대비 62.5%(719건) 증가한 1,869건을 보급하였으며, 국내 일평균 개인정보 노출 웹페이지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수요자별 정책성과

1. 방송통신 사업자

< 산업진흥 측면 >

□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국회 통과('10. 2월)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제정('10. 12월)하여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를 마련

- 방송사업자의 분담금과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11. 1월 시행)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걸맞는 재정적 기반 마련

○ '10대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전략'('10.5.7)을 통해 미래 유망 방송통신 서비스를 위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전략을 마련하는 등 미래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

-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Key로, 10대 미래 유망서비스 발굴 및 R&D에 투자 계획 수립

※ 10대 서비스 : ①4G 방송(3DTV/UHDTV), ②Touch DMB(양방향 DMB), ③모바일 통합망(무선인터넷), ④사물지능통신, ⑤미래인터넷, ⑥스마트 스크린, ⑦K-Star(방송통신위성), ⑧미래전 파응용, ⑨통합인지형 보안, ⑩통합그린ICT

- LTE Advanced, WiBro-Evolution 등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강화(220억원)함으로써 2개 표준 모두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평가를 통과('10. 6월)

□ 시청자가 품격높은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관 합동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융합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각 분야로의 확산 기반을 조성

※ 주요분야 : 교육콘텐츠 오픈환경 구축, 산림등산 정보서비스, 영상민원상담 서비스, 법률영상 상담서비스, 고속도로 교통정보, 농업경영 컨설팅 서비스, 식품정보 서비스

- 「녹색융합서비스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5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세부 추진 전략 마련

○ '09.1월 IPTV 서비스 본격 개시 이후 '10.12월 IPTV 실시간 가입자 308만명을 돌파하여 기존 유료매체 보다 가장 빠른 신장세

- 교육, 국방, 교통 등 대규모 공공서비스로 인해 맞춤형 IPTV 서비스를 추진하고, 특히 교육, 국방 분야는 부처간 협력모델로 자리 매김

※ 교육분야 협력모델 : 방통위 중심의 망고도화, 교과부 중심의 IPTV 서비스 도입

※ 국방분야 협력모델 : 방통위 시범사업 추진, 국방부 본격 확산

○ 3D·양방향 등 차세대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지원하고, 방송 통신 시장의 선순환적 성장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융합형 콘텐츠 등 우수, 창의적 방송콘텐츠 제작지원(201억원)

- 고양시에 '12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 송출 시설인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추진('10년 98억원)
-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미래 유망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한 투자펀드 조성('10년 정부 100억원)

□ 시장잠재력이 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T-DMB 시범방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상파DMB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우리나라가 개발한 지상파DMB 방송방식을 '09년도 지원대상국인 캄보디아 정부(공보부)에서 국가표준으로 채택
- '10년도 지원대상국인 베트남은 지상파DMB 상용화 전환 촉진으로 국내 관련시스템·장비 및 단말기의 동남아 시장진출 확대기반 마련

□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2개의 차세대 이동통신(4G) 기술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R)의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 ITU-R WP5D 회의에서 IEEE 802.16m(WiBro-Evolution) 및 LTE-Advanced의 국제표준에 국내의견을 반영
- 또한,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를 적기에 할당하여 증가하는 무선트래픽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아날로그TV 종료에 따른 파급효과,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경북 울진('10.9.1), 전남 강진('10.10.6), 충북 단양('10.11.3) 지역의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
-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선정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외주제작 등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방송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 마련
 - 제작사의 거래상대방이 다변화됨으로써 콘텐츠 제작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어 제작사간 관계가 상생하는 구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미래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고도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미래네트워크 기술 및 방송장비 테스트 등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을 마련
 - ※ '10. 2월 한-일 간 APII 회선(10G)을 이용, 샷보로 눈 축제 실시간 중계
 - 기존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시범망을 구축하여 3DTV와 같은 대용량·고품질의 방통융합 시범서비스 추가 발굴·제공
 - ※ Giga인터넷 선도망 확대구축 및 고도화('10.6월), 멀티앵글 3DTV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추가 발굴 하여 1,621가구에 시범 제공
 - ※ 부산 IT EXPO('10.9월), G20 방송통신 미래체험전('10.11월)을 통해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를 대국민 홍보
- 사물지능통신 선도시범사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되었습니다.

- 기상청 M2M 수집체계 효율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물지능통신 新사업 모델 발굴
-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 중형급 서버 200대 규모로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를 구축(10.9)하여 방송통신 사업자의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환경 마련
- DDoS 등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이버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노후된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침해대응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여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로 재구축하고 악성코드 분석 등에 전문인력 대폭 보강
 - 주요 ISP의 인터넷망 연동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 구축 및 악성코드 탐지 점검대상 웹사이트 대폭 확대(20만개→100만개)
 - 자체적으로 DDoS 대응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DDoS 공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이버 대피소 시범 구축
- 미래인터넷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ICT 기술을 활용한 지속 성장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 혁신적 미래서비스 제공, 최적의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미래인터넷 기술개발 지속성장이 가능한 여건조성 등을 포함하는 미래인터넷 추진전략 수립(10.5.19)
- 우리나라 방송통신 기업이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방송통신 분야 정부고위급 면담 및 정부간 협력약정체결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반 조성

※ 이집트 등 8개국·1개기관(WB)과 9건의 MOU 체결

-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 및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국을 중심으로 로드쇼(9회)·쇼케이스(7회) 개최

- 방송통신장관회의('10.5) 및 G20 연계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10.11) 등 국제행사 개최 및 '14년 ITU 전권회의 유치 성공

< 규제 측면 >

□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온실가스감축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사업자별 실천 가능한 절감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10년 한 해 동안 온실가스를 2.5만 TOE 감축

※ 2.5만TOE는 KBS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규모의 1.5배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각종 에너지 양을 석유 1톤을 연소시킬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으로 표준화 한 단위

-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방송통신분야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 HD방송 제공을 위한 방송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전국적인 아날로그 방송 종료일시를 규정하여 디지털전환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 제정('10.1월), 아날로그 종료일시('12.12.31.04시) 결정('10.9월 시행령 개정)
-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방송광고 심의를 자율심의로 전환하였습니다.
 -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사전검열로서 위헌에 해당하는 바, 방송광고를 자체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09.7.31 방송법 개정)
-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기반이 되는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방송광고의 도입 및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신유형 방송광고로서 가상·간접광고 도입('09.7.31 방송법 개정, '10.1.26 시행령 개정)
 - 중간광고 및 토막광고의 건수규제 폐지('10.10.1 방송법 시행령 개정)
- 고품격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방송사 편성·심의책임자 회의를 개최(매분기)하고, 방송사 사장단 간담회(3회)에서 방송의 품격 향상을 협의
 - PD, 방송작가 대상 방송언어 순화교육을 실시하여 방송관계자의 방송언어에 대한 인식을 제고('10.5.~'10.10.)

- 방송장르별 방송언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반영하고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12월)
- 방송 편성규제 제도개선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 외주제작·외국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의무편성비율 준수 기간을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여 규제 완화('10.10월 시행령 개정)
- 방송3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간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 체결을 추진하여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3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간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 체결('10. 11. 15)
-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개선방안 및 SO-PP간 콘텐츠 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 통신에 비해 방송이 과도하게 할인되는 결합상품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 결합상품의 판매 수익을 방송과 통신 각각의 공정가치(약관 가격)대로 배분
 - SO-PP간 콘텐츠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케이블TV 채널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SO 재허가 시 “방송수신료의 25%이상을 PP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이 부과될 예정

※ 방송수신료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 : '07년 17.0%, '08년 21.5%, '09년 25.2%

□ 유료방송의 부문별 규제 및 정책방안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방송의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상황과 디지털 전환 촉진, 콘텐츠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규제와 정책방안 정비
 -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IPTV와의 경쟁을 고려, SO 경영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시행령 개정
 - SO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가입자 없는 아날로그 상품을 폐지하고 디지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채널 정책 마련
- 위성DMB로 운용할 수 있는 TV 채널 수가 전체 운용채널의 1/2에서 2/3 까지로 완화
-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변경을 제외한 각종 변경 허가가 신고제로 전환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영세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공익채널 선정 제도 정착으로 플랫폼사업자, PP의 공익채널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 '11년도 공익채널 선정기준의 경우 10년도 공익채널 선정기준인 3개 방송분야(사회복지/과학·문화 진흥/교육 지원)별 각각 3개 채널 선정원칙이 유지되어 공익채널 제도 및 정책의 예측성·안정성 확보

- (경과사항) '06년(10개 분야 17개 채널) → '07년(8개 분야) → '08년(6개 분야 12개 채널) → '09년(6개 분야 11개 채널) → '10년도(3개 분야 9개 채널, 분야별 1개 채널 이상) → '11년도(10년도 선정기준과 동일)

□ 중장기 법제정비 방안 정책연구를 통하여 통합 방송법에 포함될 주요 정책 방향이 연구되었습니다.

- 스마트TV 환경 도래에 대비한 규제 체계 선진화 방안,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방안 등 연구

□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청점유율 사후규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방송사업 소유·경영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로 시청점유율 사후 규제 방안 마련
- 시청점유율 30% 초과 시 신규 방송사업 진출 금지, 방송광고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 방송통신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이동전화 단말기보조금 지급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 KT의 전용회선 청약절차 개선
- 도매제공 대가·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시정명령 유형을 전기통신사업법령에 추가

2. 통신 이용자

- 전기통신사업자가 한전 등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제공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망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0. 9)

- 결합상품 요금인가 기준이 완화돼 통신사들이 신속한 할인요금제 출시와 활발한 요금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미 인가받은 요금(결합상품 포함)을 인하하는 경우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시행('10.9월)

- 주파수 또는 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MVNO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10.9월)을 개정 시행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대상과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10.11월)

-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시행('08. 10월) 및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09. 9월)를 통한 소요 기간 단축(5일→1일)

□ 이용자 편익과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한 010번호통합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010번호통합 정책 방안 결정('10. 9월)으로 쓰던 01X번호 그대로 스마트폰 등 3G서비스 이용 가능
- 한시적 번호이동 : 01X를 3G 서비스로 번호이동 후 사용하다가 제한된 기간('13.12.31) 이전 010으로 변경하는 것
- 01X번호 표시 : 01X이용자에게 010으로 변경한 후에도 발신전화 번호를 수신인에게 종전 01X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3년간)

□ 이동전화 단말기 교체없이 타 이통사로 가입하는 'USIM 이동'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USIM 판매가격 인하('10.2월), USIM 이동 제한기간 폐지('10.6월), USIM만으로 이동전화 가입 가능('10.9월), USIM 잠금장치 해제로 해외에서 사용 가능('10.9월) 등

□ 이동전화 음성과 데이터에 관한 요금개선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자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음성통화료 과금단위를 기존 10초에서 1초로 전환하여 가입자당 월600원 정도 요금인하 효과 발생(SKTEL 3월, KT·LGU+ 12월 시행)
- 발신자번호 표시(CID)요금을 전면 무료화 하고 노인층을 위한 실버요금제 개선
-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무선데이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선데이터요금 개선

- 데이터 이월, 하나의 요금제 가입으로 여러 단말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OPMD), 무제한 데이터허용 등

□ 결합상품 요금인가 기준의 완화로 할인폭이 큰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돼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큰 유무선 결합상품, 방송통신 결합상품, FMC 등 융결합 서비스 등의 활성화 촉진

구 분	'08.12월	'09.12월	'10.1~9월
결합상품 가입자	405만 가구	726만 가구	882만 가구 (9월 현재)
결합 할인액	1,137억원 ('08년 연간)	3,301억원 ('09년 연간)	4,083억원 ('10.1~9월)

□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선언문」을 채택토록 하여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국내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주간(11월)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행방안을 선언
 -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및 공정한 혜택 제공,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정보제공, 이용자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콘텐츠의 질적 향상 등 5개 항목의 총 19개 이행방안으로 구성
-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시장 조성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개설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이용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 이용자를 위한 교육과 관련정보 제공 등 이용자 보호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할 전담 기구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KAIT 산하에 설립('10. 3월)

-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단말기 AS 가이드라인 및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전국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단말기 AS의 접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통신사업자의 이행확보를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12월)
 - 결합판매 시 주요 내용 미고지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부과 금지 등의 내용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 이동전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증진되었습니다.
 - USIM 이동 제약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이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

- 사업자가 이용요금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이용자의 알권리 등 권익이 향상되었습니다.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에 대한 설명, 데이터서비스별 이용 시각, 정보이용료 등 상세내역 표기 등 요금고지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과 기재방식에 대한 기준을 고시('10. 10월)

- 이용자들이 부당 부과내역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게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 선택이 용이
-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하여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 하였습니다.
-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부당과금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명령으로 요금부담 감소 및 이용자 권익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SKT 62억원, KT 15억원, LGU+ 7억원)
 - 메뉴에 '배너(광고/이벤트)'를 삽입하고 과금하거나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 과금한 행위, 별도 신청·해지절차 없이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 등
 -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동전화만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이용자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요금부담을 감소
- 새로운 인터넷주소자원(한글 국가도메인 도입, IPv6 전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 인터넷 도메인 관리기관(ICANN)으로부터 한글 국가도메인(예: 방통위.한국) 승인('10년 9월),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추진 계획 수립 시행('10년 9월)

- 광대역통합망(BcN)의 농어촌 지역 구축 확대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규모 농어촌 마을 등 전국 어디에서나 IPTV, 인터넷 전화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망 구축 확대
 - ※ 300억원 규모의 망 구축비용 저리용자('10.6월), SKB의 농어촌 BcN 구축현황 실태점검('10.3월), LGT의 농어촌 BcN 구축계획 승인('10.7월),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 망 구축 및 특화서비스 개발('10.11월) 등

- 사물지능통신 선도 서비스를 통해 좀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서울시 송파초등학교 일대에 어린이 안심존 서비스를 구축하여, 초등학생에게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경포대, 경포호 주변에 사물지능통신 그린 쉼터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휴양 시설을 제공

-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예방적 대응으로 휴대폰 및 이메일 스팸이 감소하였습니다.
 -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휴대전화 스팸을 실시간 차단 할 수 있는 스팸차단리스트 개발·보급

- '07년 대비 1인당 이메일 및 휴대폰 스팸 감소

※ 이메일 : 4.3통 → 2.2통 / 휴대폰 : 0.57통 → 0.43통

3. 방송 시청자

□ 세계 최초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개시하여 국민들이 첨단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우리나라 3DTV 기술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 세계 최초 고화질 3DTV 실험방송 개시('10.10.29~)

- 지상파의 경우, 지상파 4개사(KBS, MBC, SBS, EBS)가 공동으로 66번 채널을 이용하며, 위성방송 SkyLife는 301-1번 채널로, 케이블은 CJ헬로비전과 HCN이 각각 73번과 98번으로 실험방송 송출

○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G20 주행사장인 코엑스에서 3DTV 방송관을 개관하여 각국 정상과 외신기자들에게 널리 홍보

□ 디지털전환 홍보강화로 디지털전환 인지도와 보급률이 향상 되는 등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 '12년 아날로그방송의 종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70.8%),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보급률(64.7%)이 전년대비 향상

- 디지털전환 인지도 : '09년 55.8% → '10년 70.8%('10년 목표 70%)

-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보급률 : '09년 55.1% → '10년 64.7%('10년 목표 60%)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디지털전환으로 방송시청에서 소외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지원대상 및 방법등을 규정(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 '10. 9월),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기준 고시 제정('10. 12월)
-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제고 활동을 전개하여 시청권을 보호하였습니다.
 - 막말·저품격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경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방송법시행령 개정(1.26.)
 - 방송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송의 품격 향상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3회, 2.8, 2.22, 11.3)
 - 방통위, 여가부, 지상파 3사가 “아름다운 청소년 언어 지키기” 업무협약을 체결(10.8.)하여 유익한 프로그램 제작 및 언어 순화 홍보실시
- 어린이·청소년 시청 시간대에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을 장려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국내제작 신규 애니메이션을 어린이·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방영한 경우 의무편성비율 산정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편성고시 개정(12월)
-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선정으로 시청자 복지 향상 및 여론다양성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새롭고 차별화된 신규채널 도입으로 방송의 다양성이 제고되어 시청자의 선택권 확대 및 사회적 후생 증진
- 새로운 뉴스제작 기법의 도입으로 뉴스의 질과 내용이 개선되고 새로운 뉴스 포맷과 다양한 정보의 제공으로 여론 다양성을 높이는 전기 마련

□ 스포츠중계권 관련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SBS의 독점중계권을 방송3사의 순차편성에 의한 공동중계 합의 유도

※ ①자율협상 권고(방송 3사, 3월), ②시정명령(방송3사, 4월), ③과징금 부과(SBS 19.7억 원, 7월) 등 단계별 조치 시행

□ 디지털전환 허위·과장 영업 차단으로 시청자 이익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 DTV 전환 과정에서 국가정책을 언급하며 DTV 상품으로 전환을 강요하거나 무료체험 후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상품으로 전환하는 등의 허위·과장 영업으로 국민들의 불만 증가

※ '10년 방통위에 접수된 디지털전환 허위·과장영업 관련 민원은 131건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10. 6월, 경고 7건, 주의 21건)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경주

□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 및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 전국 61개 방송사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총 3,528편의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방송 지원
- 전국 19개 단체의 미디어교육 활동 지원 및 미디어역기능 예방 교재 등 시청자의 미디어 이해능력 함양
-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시청자의 방송복지 구현 및 소외계층의 직접적인 방송참여 유도

□ 장애인 등 방송 소외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자막·수화·화면해설 등 장애인 방송 제작지원 등에 총 303억원 지원('00년~'10년)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

(3) 수요자별 주요 법·제도 개선 내역(방통위 출범이후)

수요자	일자	법·제도명	효과
방송통신 사업자	'08년 3월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08년 5월	▪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정 -요금심사 면제 결합할인율 10%에서 20%로 확대	▪ 할인율이 높은 결합상품 출시 유도
	'08년 6월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 개인정보보호 제재수단 강화(과징금 신설, 과태료상향 조정)
	'08년 7월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08년 9월	▪ 지상파 텔레비전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에 관한 고시	▪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유도
	'08년 12월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일반 방송사업자와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로 분리되어 있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를 하나로 통합
	'08년 12월	▪ 방송법시행령 개정	▪ 방송진입 대기업 기준완화 및 SO겸영규제 완화
	'09년 2월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개정(훈령 제45호)	▪ 통신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공표 실효성 향상
	'09년 3월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개정(훈령 제45호)	▪ 통신사업자 부담 완화 및 시정명령 공표의 실효성 향상
	'09년 3월	▪ 위성휴대통신용 단말기 기술기준 개정	▪ 해당 무선설비의 통신방식과 전파형식을 규정하고, 유해한 혼신을 방지
	'09년 4월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촉진 기대
	'09년 5월	▪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정	▪ 요금심사 면제 결합할인율 확대(20%→30%)로 보다 할인율이 높은 결합상품 출시 유도
	'09년 7월	▪ 방송법 개정	▪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및 종편진입 허용 ▪ 가상·간접광고 제도 도입

수요자	일자	법·제도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 자체심의 또는 위탁심의의 자율권 부여 ▪ 방송광고 제재 강화 및 과태료 부과
	'09년 8월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개정	▪ 기술적·관리적인 기준에 따라 혼란 없이 이행
	'09년 9월	▪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개정	▪ 공익성방송분야 통합(6개→3개)
	'09년 9월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촉진 기대
	'09년 10월	▪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관련 전자제품에 관한고시	▪ 디지털튜너내장의무화를 고시하여 디지털TV 보급 활성화 기대
	'09년 10월	▪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 보상금 산정기준 고시	▪ 주파수회수·재배치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가능
	'09년 11월	▪ 국민관심행사 고시	▪ 국민관심행사 고시로 중계권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 방지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기여
	'09년 12월	▪ WBro 기술기준 개정	▪ WBro 주파수대역폭의 복수표준을 허용함으로써 국제표준 추세에 부합하고, 사업자 투자 유도
	'09년 12월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 개정	▪ 통신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시정명령의 실효성 향상
	'09년 12월	▪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프로그램 공급 대가 인상('08년 21.5%→'09년 25.2%)으로 PP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10년 1월	▪ 방송법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와 SO간 경영규제 33%까지 허용 등 ▪ 종합유선방송사업등의 허가(승인)유효기간 연장(3년→5년) ▪ 방송광고 자체심의 또는 위탁심의의 자율권 부여 ▪ 방송광고 제재 강화 및 과태료 부과
	'10년 1월	▪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	▪ 방송사업자의 고화질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구체화하여 시청자의 편익과 방송제작업무의 효율성 제고

수요자	일자	법·제도명	효과
	'10년 3월	▪ 방송발전기본법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통합법 체계 마련 ▪ 방송통신사업자의 분담금과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11. 1월 시행)
	'10년 3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제공 등의 대가,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관련 금지 조항 마련 ▪ 시정명령으로 '가입자 신규모집 금지' 조항 마련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매출액 3/100 이하 과징금) ▪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제공 제도 마련
	'10년 5월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규칙 개정	▪ 무선트래픽 증가 해소 및 이용자 사용 만족 제고
	'10년 6월	▪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이용한 TV 전자상거래 제도개선	▪ 사업자는 TV 전자상거래 분야의 신규 수익 확대, 소비자는 간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효용 증대
	'10년 9월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을 명시하고, 디지털방송 전환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 근거 마련
	'10년 9월	▪ 시범사업 지역별 아날로그 재난방송 종료일시 및 시범사업 지역별 종료대상 방송국에 관한 고시 제정	▪ 시범사업 지역별 재난방송을 하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의 종료일을 정하여 종료 근거 마련 및 지역별 종료하여야 하는 방송국의 범위 규정 마련
	'10년 10월	▪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외주제작편성비율 준수기준을 분기에서 반기로 확대하여 편성의 자율성 제고
	'10년 10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 및 서비스(이동전화) 지정기준 마련 ▪ 도매제공 대가, 모바일콘텐츠 수익배분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마련 ▪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

수요자	일자	법·제도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분담 사업자 범위 확대(별정 포함) 포 기간-별정간 차등 해소 ▪ 기간통신사업자 합병 인가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발전하는 M&A 기법에 대응
	'10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체계를 단일화된 기금체계로 개편하여 2011년부터는 방송통신 관련 분야에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
	'10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 2010-5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
통신 이용자	'0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출력 완구용 무선조정기 및 신규 RFID 기술기준 완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
	'08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인정보법규 위반사업자 처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법준수율 제고
	'08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시행
	'08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던 시내전화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이동
	'08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도 세계전파통신회의(WRC-07) 결과에 따른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규정에 맞는 신규 주파수 자원 공급 및 전파산업 활성화에 기여
	'08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GHz대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용도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주차장 조명제어, 건물 자동문 센서 등 다양한 분야의 무선센서 이용 확대에 기여
	'09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사전예방
	'09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정 개정(훈령 제4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통신요금 관련 분쟁 해결

수요자	일자	법·제도명	효과
	'09년 3월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 지침 제정(훈령 제44호)	▪ 민원처리 단계별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이용자 권익 보호
	'09년 8월	▪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시행	▪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감면 대상자가 별도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 감면 가능
	'09년 8월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 보호조치 구체화	▪ 다변화된 개인정보 침해유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 확보
	'09년 9월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개선	▪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기간 단축(5일→1일)
	'09년 9월	▪ 150kHz이하 RFID 기술기준 개정	▪ 국제기준 호환성 확보 및 인식거리 확장으로 무선기기 이용 활성화에 기여
	'09년 10월	▪ 결합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 결합상품 중요내용 사전설명, 해지 시 위약금 부과금지 등 결합상품 가입 시 이용자 보호 강화
	'09년 12월	▪ 특정소출력중계기 기술기준 개정	▪ 실내 음영지역 해소용 소출력중계기의 출력기준 완화로 이용자 편의 제고
	'09년 12월	▪ 70/80GHz대 고정점대점통신용 주파수 신규 분배	▪ 새로운 주파수 자원 공급을 통해 전파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09년 12월	▪ 해상·항공업무용 무선설비규칙 개정	▪ 해상·항공 관련 국제기구 규정에 맞추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운항 도모
	'10년 2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선불통화 보증보험 가입대상 확대('10.9월 적용 예정) - 기존 별정통신사업자에서 기간통신사업자까지 포함	▪ 선불통화 사고발생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
	'10년 3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선불통화권 발행시 보증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이용자 피해 예방
	'10년 5월	▪ 디지털 무전기 도입을 위한 무선설비 규칙 개정	▪ 디지털무전기 사용자의 편의 제고 및 국내업체의 기술개발 유도
	'10년 8월	▪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 부과 제도 개선	▪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부과하도록 제도개선
	'10년 10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등록 기준 강화(별정4호 신설)로 이용자 보호 강화

수요자	일자	법·제도명	효과
	'10년 10월	▪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 드라인 제정	▪ 전국 이통사 대리점에서 AS 접수 받고, 외국산 단 말기 이용자도 편리하게 AS를 받게 되었음
	'10년 10월	▪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 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제정(고시 2010-21호)	▪ 요금고지서에 반드시 기재 할 사항과 기재방법 개선 으로 이용자 권익보호
	'10년 12월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규정 개정(훈령 제75호)	▪ 부적합한 분쟁 사전예방으 로 심도있는 분쟁해결
시청자	'09년 8월	▪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 드라인」 제정	▪ 유료방송 이용약관을 합리 적으로 제정하여 시청자 불 만을 최소화
	'09년 11월	▪ 국민관심행사 고시	▪ 월드컵축구, WBC야구 등 국민관심행사를 고시하여 시청자의 추가 비용을 줄 이고 시청 편의 제고
	'10년 1월	▪ 방송법 시행령 개정	▪ 시청자 사과 등 제재조치 외에 과징금 부과 등 경 제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방송법시행령 개정('10.1)
	'10년 4월	▪ 시청자불만처리등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 제17호)	▪ 시청자 불만 처리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처벌규 정 포함)하여 시청자 권익증 진에 기여
	'10년 12월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 지탈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 제정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지원 근거 마련

2. 2011년도 정책추진 방향

1. 방송통신 사업자

< 산업진흥 측면 >

- 보다 다양하고 품격높은 방송통신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 콘텐츠, 공공·공익적 콘텐츠 및 창의·실용적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 기존 방송사업자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1인 창작집단(독립 PD, 방송작가) 및 방송사업자 간 컨소시엄이 기획한 프로그램도 제작 지원
 - 신인 연기자·PD·방송작가 육성 및 등용 기회 확대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단막극 제작 활성화 지원
 - PD·방송작가·방송기술인·기자·성우·아나운서 등 방송 제작인력 전문 맞춤형교육 실시
 -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송출·유통 등 가치사슬 전반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 구축
- 스마트 TV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과 생활밀착형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교통·관광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N-스크린 기술을 접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제공
 - 수요조사를 통해 방송·통신사업자, 솔루션업체, 서비스 수요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서비스 모델 개발
 - ※ N-스크린 서비스 : TV·PC·모바일 기기 등 여러 매체에서 콘텐츠를 끊김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다양한 기기의 화면(스크린) 및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N-스크린 서비스가 상호 호환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 ※ 각종 스마트 기기의 스크린 간 협업서비스 기술개발 추진
-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이 콘텐츠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
 -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술 검증 및 서비스 표준 규격 마련
- 초고화질 TV 및 미래인터넷 등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를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지속적 성장기반 조성
- 국내에서 개발한 차세대 이동통신(4G) 기술을 국제표준에 최종 반영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4G 표준으로 개발 중인 와이브로 및 LTE 진화기술에 국내 기술 반영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실시
 - ※ 산·학·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4G 국제 표준화 전략위원회」를 운영하여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

- 태양활동극대기('13년)에 우주전파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주전파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통신환경의 발달로 우주전파가 IT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우주전파 재난 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법 개정 추진

-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디지털 방송보조국 구축, 제작·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방송보조국 전환 목표 : '10년 39.2% → 11년 68.1%
 - 제작·송출시설 디지털전환 목표 : '10년 87% → 11년 92.8%

- 디지털기반의 스마트 광고기반 조성을 통해 신규 광고시장이 창출되고 국내 광고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 국내 스마트광고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제작시설 지원, 인력 양성 등 제작기반 마련으로 스마트광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 마련
 - 스마트광고 플랫폼 기술개발, 광고소재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디지털기반 광고효과측정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스마트광고 생태계가 조성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상생협의회 구성을 통해 영세한 非드라마 제작사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활성화를 촉진

□ 신규 종편· 보도PP의 시장 안착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장을 활성화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 기존 지상파방송사들의 콘텐츠에 의존하여오던 방송프로그램 제작 분야에 새로운 자극과 창작의 열기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

- 유료방송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그 수익이 다시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 조성

-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2011년에는 1,600개 이상 새롭게 생기고, 2015년까지 2,000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전망

□ 스마트 TV 시대를 대비해 방송법과 IPTV법 통합 등 방송법제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위해 방송법, IPTV법 등을 포괄하는 방송분야 단일법제 제정

- 사업자 분류체계, 인허가 체계 등을 포함한 사업법 체계로 개편

□ Giga인터넷 환경의 응용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여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와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BM 발굴 등 공동 수행

○ KOREN, TEIN 등 연구시험망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통해, 미래인터넷 테스트베드로서의 전초기지를 구축, 상용화 기반 마련

- 사물지능통신 중소기업의 신규서비스 발굴의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사물지능통신 중소기업의 모듈, 단말, 플랫폼, 서비스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사물지능통신 테스트베드 구축

- 모바일 오피스, 스마트TV, 다양한 단말에서의 N-Screen 구현 등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하고 안전한 융·복합 서비스가 활성화 됩니다.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모델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시험환경 (클라우드 서비스 테스트베드)의 고도화 추진
 - 클라우드 서비스 및 사업자의 품질 수준, 안정성, 보안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 서비스를 인증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성 제공

- 미래인터넷의 핵심 기술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술 수출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고화질 콘텐츠 전송 및 대규모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기 위한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 개발
 - 이동성, 품질보장, 보안 등 現인터넷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

- 방송통신 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이 높거나 시장성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로드쇼 개최 및 중남미, 중동, CIS 등 신규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한 쇼케이스 추진

-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장관회의,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와 월드IT쇼를 연계 개최('11. 5월)

< 규제 측면 >

□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도입으로 방송광고시장의 효율성이 촉진되고 방송광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효율성이 제고
- 방송광고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금지행위가 마련되는 등 사후규제수단이 마련
- 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성을 보장하고 매체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방송사의 지원기준 및 방식 등 지원체제도 마련

□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시장기능의 촉진으로 기존 광고시장의 경직성과 정체를 타개하겠습니다

- 기존 광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편성규제, 데이터방송광고 등이 합리적으로 제도개선
- 제작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내 광고(PPL 및 협찬고지)와 제작주체인 방송사, 외주사에게 제작협찬고지 및 PPL 상호 허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능력 제고

□ 고품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방송제작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사 자체심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 PD, 방송작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자 등을 대상으로 방송언어교육을 강화
 - 표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제작, 심의사례집 등을 배포하여 자체심의 활용
 - 언어순화 등에 기여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및 출연자를 발굴·시상하여 방송언어 순화 분위기를 조성
-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 프로그램 장르별 외주제작 비율 조정 및 방송사의 협찬고지 허용으로 제작주체간 경쟁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활성화를 유도
- 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이드라인 마련,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조정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통해 방송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시장에서의 동반 성장 지원
 - SO-PP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한 사후규제 강화
-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분야의 소유·경영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방송플랫폼 시장, 방송 프로그램 시장 등 개별 시장별로 수평적 규제 적용
 - 플랫폼사업자 및 채널사업자 결합규제 개선

- 방송시장의 금지행위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시장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 방송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개선
 - 시장거래 질서 유지를 통해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확립

- 방송통신시장 불공정행위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을 고시로 제정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 제고

- 방송분쟁 조정대상이 확대되어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됩니다.
 -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및 IPTV 사업자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추진

-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억제하여 요금 및 품질경쟁 등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 단말기보조금의 차별적 지급, 과도한 경품지급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 해킹·DDoS 공격 등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하고 모바일 시큐리티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인터넷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ISP, 백신업체, 이통사 및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신규 단말기기 보급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보안위협 대응역량 강화
 - 잠재적 모바일 보안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11~15년)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 추진
 - 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서 보급, 스마트폰 보안상태 이용자 자가 점검도구 개발 및 스마트기기 보안위협성 검증역량 강화 등
- 방송통신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쾌적한 녹색방송통신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그린ICT를 활용하여 방송통신분야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 그린ICT 적용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및 ITU 표준화를 통해 저탄소 방송통신기술을 선점하고 국제표준 선도
-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를 통한 품질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여 방송장비 인증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사, 제조사, 학계, 연구계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인증대상 선정 및 규격개발
 - 방송장비 개발 초기 단계부터 품질향상에 이르는 최종 단계 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험인증센터 운영

2. 통신 이용자

- TV 유희대역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경제적인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희대역 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자체,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유희대역 활용 검증이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여 실험서비스 실시

-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 규제가 완화됩니다.
 - u-City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 특례조항 신설

- 요금규제 완화로 인가대상 사업자도 요금할인형 결합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습니다.
 - 인가제 완화로 인가사업자도 요금할인폭이 큰 가족형 유무선 결합상품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시장환경에 맞게 적기에 출시

- 이통사, OS에 상관없이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11.3~4월 시험 운용, '11.5월 상용서비스 개시 예정

- 스마트폰 시대에 맞도록 이용자의 이용패턴, 이용계층에 맞게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무료음성통화량을 확대하여 실질적 요금인하 유도
 - 이용료 인하, 문자메시지 확대 등 청소년·노인층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유도

- 요금할인이 큰 가족형 유무선 결합상품,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출시가 촉진됨에 따라 가계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결합상품 요금규제의 완화로 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돼 요금할인형 결합상품이 신속하고 다양하게 출시

- 이동전화 소량이용자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선불요금제의 가입절차 및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이동전화 소량이용자의 선불요금제 가입을 촉진

-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동전화 요금연체자 관리 실태점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추진

- 스마트폰의 통화품질 개선 등 원활한 통신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스마트폰 통화품질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통신사 및 제조사 간 협력을 통해 양질의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마련

- 이용자보호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업의 이용자 민원처리 실태 등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기업에게는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유도

- 통신이용자 이용자 권익침해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및 언론 이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용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개선

-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인 기반구축으로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출현을 순조롭게하여 인터넷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 한글 국가도메인 서비스(예:방통위.한국)를 상반기에 시행하고,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 본격화 지원

- 50가구 미만의 농어촌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광대역망을 구축하여 소외지역 정보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망 구축을 확대하고 원격교육 및 원격의료 등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 개발·보급

-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모델 보급·확산의 場을 마련하여 국내산업 활성화 촉진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가 차원의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확산과 기술, 표준화 동향 등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컨퍼런스·협의회 등 행사 개최

- 인터넷 이용자 소양 함양을 위하여 인터넷리터러시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캠페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 유아 및 청소년 대상의 인터넷리터러시 교육 및 신문·방송·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국민 행사 추진

□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을 통하여 “삶”과 “일”이 균형을 이루는 “글로벌 스마트 강국”이 됩니다.

-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형 모델의 개발 및 이용확대
- 스마트워크 리더를 발굴하고, 모범사례 홍보·전파
- 도입 준비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종합안내서 및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3. 방송 시청자

□ 세계 최초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 확대 추진하여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겠으며, 무안경 3DTV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고화질 3DTV 기술검증을 위한 실험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11. 8.27~9.4) 주요 경기를 실험 생중계
 - 실험방송용 고화질 3D 표준 콘텐츠 제작·방송(8편)
 - 3D 시청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안경없이 여러 위치(시점)에서 3D 시청이 가능하도록 무안경 3DTV 기술개발
- 국산 3D 장비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 2012년까지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직접수신 가구중 기초생활수급권자, TV수신료 면제가구 일부 (시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디지털수신기기 지원
- 전국적인 「디지털방송전환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디지털전환 지원과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2011년 「디지털방송전환 지원센터」를 총 9개소 구축 및 운영
- 방송프로그램 사후심의를 강화하고 방송언어 순화 캠페인을 전개하여 시청자의 올바른 언어사용과 시청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방송사,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언어순화 관련 스팟 제작, 지상파·케이블에 언어순화 자막고지 홍보 등 실시
 - “아름다운 우리말 주간”을 설정하고, 청소년 언어순화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심의를 강화하여 막말·선정, 폭력 등 저품격 프로그램의 재발을 방지
-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주체 육성을 통해 프로그램이 질과 다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통해 역량있는 외주제작사를 육성하여 방송 프로그램 공급주체 다원화 및 제작 활성화 촉진
-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방송매체별 재허가 심사기준 등의 정비로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청자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사업자간 분쟁을 방지하고, 시청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송신 제도 개선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을 보완
 - 재허가 심사 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
- 다양한 채널에서 새로운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편성채널 4개와 새로운 관점의 보도전문채널 1개가 신규 도입
 - 국민의 뉴스 선택권이 다변화되고 양질의 뉴스가 서비스
- EBS 초·중학 강의 이용 활성화 및 모바일 수능교육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중학 전용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편수 확대
 - 신규매체를 통한 수능 강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하여 시청자 보호 수단을 확보하겠습니다.
- 이용약관과 다르게 시청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를 개선
 - 양질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대 제공
-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동등 접근권이 향상됩니다.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및 수신기 보급 지원
대상을 기존 지상파방송사에서 유료방송사로 확대 실시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미디어교육, 다국어지원, 장애인의 미디어교육 아카이브
접근기회 확대
 -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사회적 소수계층에 대한 미디어교육
및 방송참여 지원활동으로 방송접근권 보장
- 시청자의 스마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제고하여, 뉴미디어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스마트 미디어체험을 통한 신규 방송
통신서비스에 대한 거부감 해소
 -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스마트미디어 교육을 통한 시청자의
뉴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일반현황

2. 전략계획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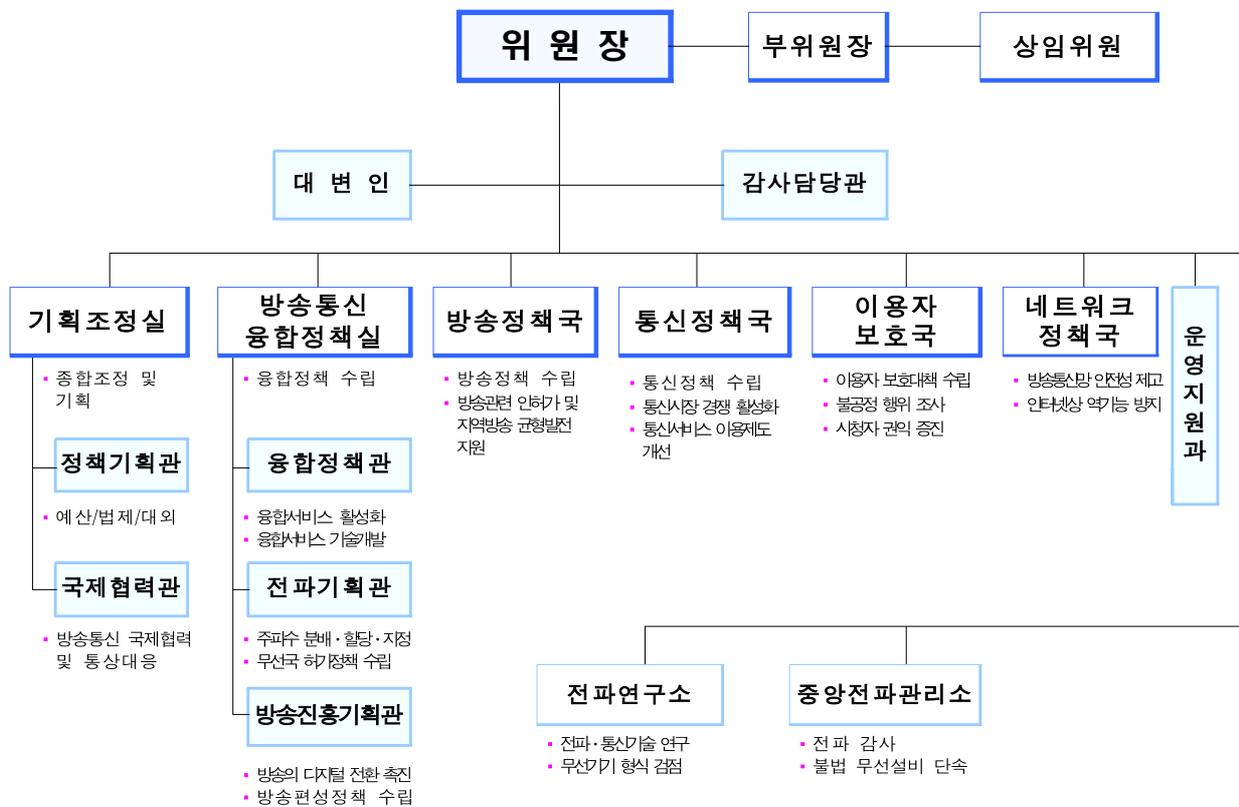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일반현황

(1) 조직

- 방송통신위원회 본부가 2실, 4국 6관 32과·3팀
- 소속기관은 전파연구소 및 중앙전파관리소 2개관서



(2) 인원

- 본부 인원은 491명이며, 소속기관 인원은 1,121명임

(’11.1월 현재)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총계
			5급이상	6급이하		
본 부	5	12	215	211	48	491
소속기관	-	2	95	689	335	1,121
계	5	14	310	900	383	1,612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5,352	7,669	8,259	6,918	6,789
(전년대비증가율, %)	10.3	43.3	7.7	△16.2	△1.9
○ 총계	5,982	8,653	8,568	8,656	8,729
(전년대비증가율, %)	△2.1	44.7	△1.0	1.0	0.8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907	947	1,014	1,085	1,161
(전년대비증가율, %)	-	4.4	7.0	7.0	7.0
○ 기본경비	159	190	194	199	204
(전년대비증가율, %)	-	19.5	2.1	2.6	2.5
○ 주요사업비	4,286	6,531	7,051	5,634	5,424
(전년대비증가율, %)	12.8	52.2	8.0	△20.1	△3.7
□ 예산					
○ (총)지출	3,321	3,208	3,377	3,234	3,323
(전년대비증가율, %)	3.8	△3.4	5.3	△4.2	2.8
○ 총계	3,321	3,208	3,377	3,234	3,323
(전년대비증가율, %)	3.8	△3.4	5.3	△4.2	2.8
【일반회계】					
· (총)지출	3,256	3,050	3,157	3,234	3,323
(전년대비증가율, %)	2.1	△6.3	3.5	2.4	2.8
· 총계	3,256	3,050	3,157	3,234	3,323
(전년대비증가율, %)	2.1	△6.3	3.5	2.4	2.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총)지출	65	158	220	순감	
(전년대비증가율, %)	490.9	143.1	39.2	순감	
· 총계	65	158	220	순감	
(전년대비증가율, %)	490.9	143.1	39.2	순감	
□ 기금					
○ (총)지출	2,031	4,461	4,882	3,684	3,465
(전년대비증가율, %)	22.9	119.6	9.48.9	△24.5	△5.9
○ 총계	2,661	5,445	5,191	5,422	5,406
(전년대비증가율, %)	△8.7	104.6	△4.7	4.5	△0.3
【방송통신발전기금】					
· (총)지출	2,031	4,461	4,882	3,684	3,465
(전년대비증가율, %)	22.9	119.6	9.48.9	△24.5	△5.9
· 총계	2,661	5,445	5,191	5,422	5,406
(전년대비증가율, %)	△8.7	104.6	△4.7	4.5	△0.3

2.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요

(1) 주요특성

-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융합과 빅뱅, 글로벌 IT기업 주도의 생태계 경쟁과 콘텐츠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스마트시대를 맞이하여,
 - “곁에 있듯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향유케 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효율성 제고와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를 조직의 임무로 설정하고,
 -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설정
- 이러한 조직의 임무와 비전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
 - i) 전략목표 I : 스마트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 세계최고의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및 R&D 강화를 통해 최상의 스마트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유망 전략서비스의 집중 발굴·육성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
 - ii) 전략목표 II : 스마트 경쟁체제를 정착시킨다.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기업이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해소하여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상생협력하는 시장환경을 조성
 - iii) 전략목표 III : 스마트 생활문화를 형성한다.
 - 국민 모두가 유익한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하는 스마트 생활문화 및 성숙한 방송통신문화 조성

iv) 전략목표 IV : 스마트 방송통신행정을 구현한다.

- 방송통신정책 추진체계 및 그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고, 방송통신행정 역량 강화 추진

(2) 목표체계

□ 임 무

◇ 곁에 있듯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향유케 함으로써 경제사회의 효율성 제고와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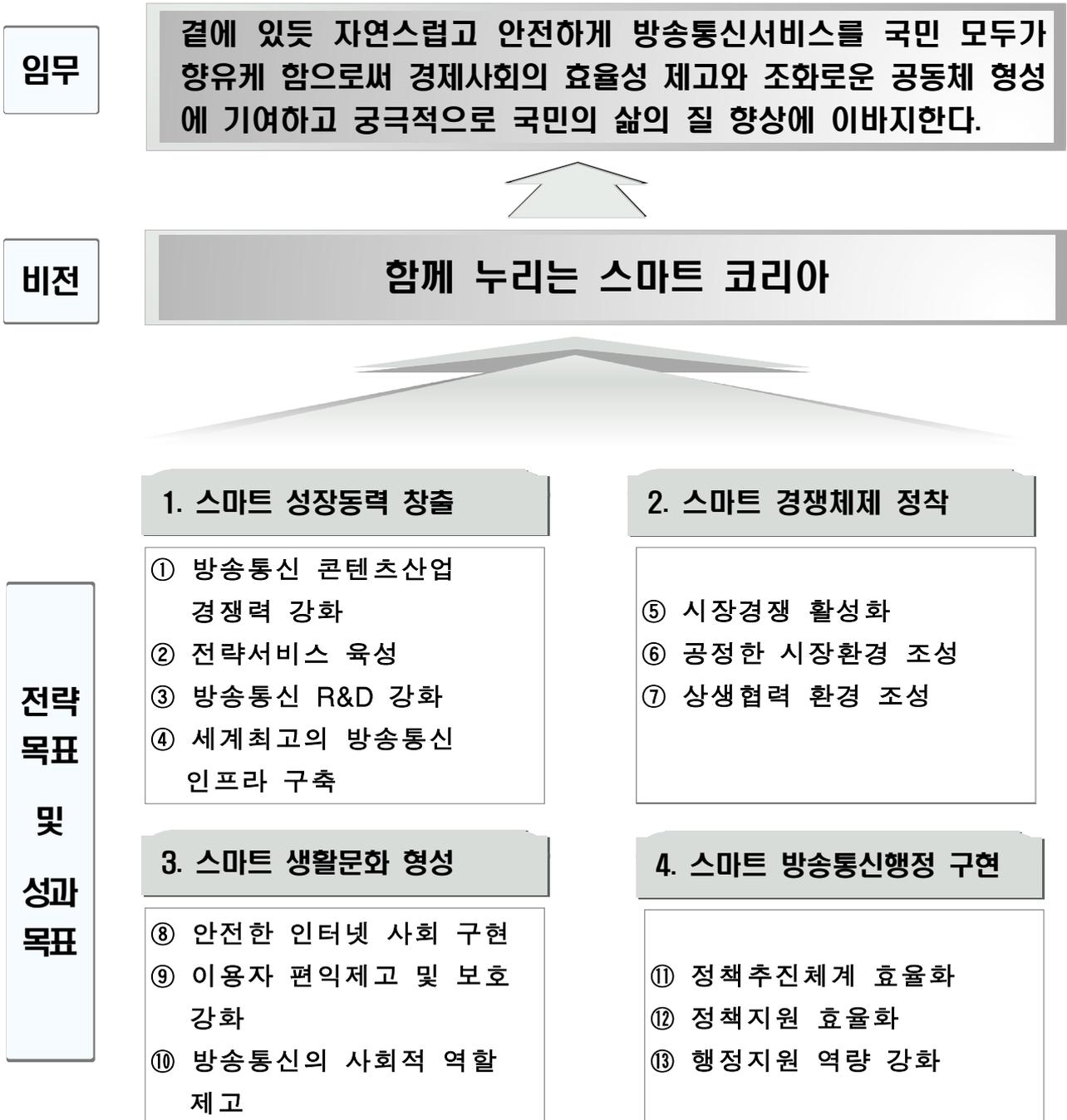
-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곁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듯 편안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소통하는 것
- 안전하게 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은 소통과정에 유·무형의 장애가 없고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걱정하지 않는 소통을 의미
-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것은 소득, 지역,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
- 경제사회의 효율성 제고는 방송통신이 개인의 업무능력을 확장하고 기업의 비용을 낮추며 사회전반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가능
- 공동체 형성은 방송통신이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이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조화로운 공동체 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의미
- 삶의 질 향상은 방송통신을 통해 오락, 교양 등 국민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의 수준을 높이는 것

□ 비 전

◇ “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

- 스마트 코리아는 앞선 ICT기술과 인프라에 더하여 ICT 윤리와 보안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첨단 ICT를 통해 스마트 서비스의 혜택을 국민들이 고루 누리며, 나아가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스마트 선진국'을 지칭
-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상생하며, 세계와 동반 성장하는 스마트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상

<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Ⅰ. 스마트 성장동력 창출

전략목표Ⅱ. 스마트 경쟁체제 정착

전략목표Ⅲ. 스마트 생활문화 형성

전략목표Ⅳ. 스마트 방송통신행정 구현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스마트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기본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애플, 구글 등에 의해 시작된 플랫폼 주도권 경쟁이 PC, 스마트폰, 인터넷 등 전분야로 확산되는 등 글로벌 IT기업 주도의 생태계 경쟁이 촉발되고 콘텐츠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도래
-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한 기기-콘텐츠-서비스를 포괄하는 ICT 생태계 구축, 미래 전략서비스·콘텐츠 및 미디어산업 활성화 필요

◇ 그간의 성과

- 스마트폰 보급 확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대표적인 방통융합서비스인 IPTV시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킴
-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1,337만 가구에 50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고, 2,995만명에게 1~2Mbps급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

◇ 중점 추진내용

-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모바일콘텐츠 등 방송통신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스마트TV 서비스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PTV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하며, 고화질 3DTV,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지능 통신등 미래서비스의 기반 조성

기 본 방 향

-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육성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 Giga인터넷, 광대역 무선망 등 세계최고의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추진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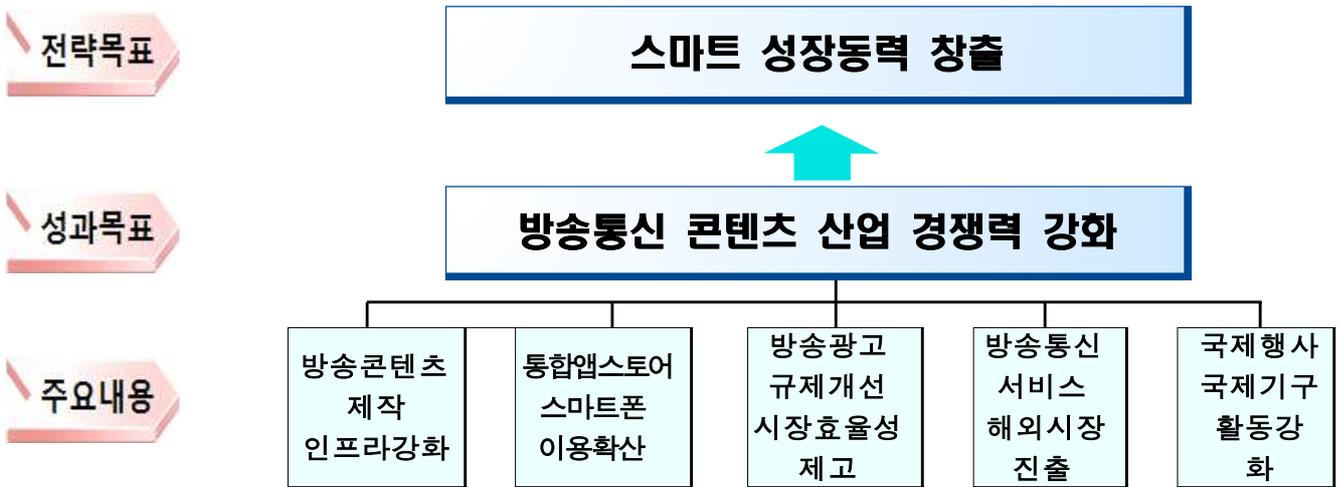
-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서비스의 육성,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건설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략목표 I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4	'15
I-1. 방송통신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①방송통신콘텐츠 시장규모 증가율	9.2	5.5	7.3	7.3	6.7	7.1
I-2. 전략서비스 육성						
①IPTV가입자 증가율	50	33	17	9.4	4.8	1.8
②클라우드 서비스 정책고객 만족도	신규	75	80	85	85	85
I-3. 방송통신 R&D 강화						
①특허출원 등록율	신규	12	12.6	12.9	13.1	13.2
②연구비 10억원당 SCI급 논문건수	0.65	0.67	0.67	0.67	0.67	0.67
I-4. 세계최고의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①BcN 가입자망 달성도	73	83	89	92	95	95
②무선인터넷 이용률	59.3	63	67.5	72.1	77.1	82.3

(1) 주요내용

- 3D·양방향 등 차세대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지원하고, 방송 콘텐츠 시장의 선순환적 성장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를 개시하여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모바일 콘텐츠 등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이용 확산 지속 유도
 - 기존 경직된 광고시장 정체를 타개하고 스마트시대 신규시장 창출 선도를 통해 미디어, 광고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
 - 방송통신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중남미, 중동, CIS 지역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과 쇼케이스 개최 등 마케팅 지원역량 집중
 - 방송통신분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로드쇼, 정부컨설팅, 해외진출 정보제공 등 지속적 추진 및 방송채널 해외 진출·공적개발원조(ODA) 실시
 -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 분야 선도국의 글로벌 브랜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표준화 선도 및 해외수출 활성화에 기여
 - UN 산하 정보통신 전문 국제기구인 「2014년 ITU 전권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 체계 마련
-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 ICT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192개 회원국의 장·차관을 포함한 2,50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



(2) 세부 추진계획

□ 방송콘텐츠 제작 인프라 강화

- (지원센터 건립)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송출·유통 등 가치사슬 전반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복합시설 구축 ('12년 완공, '11년 방통위 예산 346억)
- (제작 지원) 명품 다큐 등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 방송사업자 경쟁력 강화 콘텐츠, 공공·공익적 콘텐츠 및 창의·실용적 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 기존 방송사업자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1인 창작집단(독립PD, 방송작가) 및 방송사업자 간 컨소시엄이 기획한 프로그램도 제작 지원
- (방송콘텐츠 투자) 정부·민간 공동 20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 투자펀드를 조성, 수출형 대형 다큐멘터리, 3D방송 콘텐츠, 융합형 콘텐츠 등에 투자

- (제작인력 육성) 신인 연기자·PD·방송작가 육성 및 등용 기회 확대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단막극 제작 활성화 지원
 - PD·방송작가·방송기술인·기자·성우·아나운서 등 방송 제작인력 전문 맞춤형교육 실시
- (한국어방송사 지원) 해외의 한국어방송사에게 국내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지원, 방송제작 인력 연수·교육지원 등을 통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우리문화 접근성 제고

□ 통합 앱스토어 구축 및 스마트폰 이용 확산 유도

- 이통사·OS에 무관하게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를 개시하고,
 - WAC(Wholesale App Community)와의 연동으로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 우수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 모바일 콘텐츠 등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의 스마트폰 출시 확대를 유도

□ 방송광고시장 규제 개선 및 시장효율성 제고

- 광고시장의 경쟁상황,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광고 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를 개선하고
 -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사-외주사간 상생을 위해 제작협찬, 간접광고 등 상호 허용 추진
- '09. 9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합의하였으나,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먹는 샘물”, “의료기관”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

- 정부출자 공사 설립 및 민영광고판매회사 허가를 통해 방송 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 광고매출배분, 판매지원 및 기금지원 등을 통해 중소방송 지원에 대한 제도화 추진
- 광고요금, 판매방식, 수수료 보상체계 등 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기능 제고(장기물 확대, 대량구매 혜택 등)
-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 통신, 광고업계 전반이 협력하는 광고생태계 조성
 - 제작시설,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산업으로 육성
- 기업-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스마트TV 광고시스템 기술개발 및 광고제작 규격·형식 표준화 추진
- 리턴패스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광고유형별 특성에 따른 광고효과 측정체계 구축

□ 방송통신서비스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중남미, 중동, CIS 등 신규시장 개척활동 지원
- 방송채널의 해외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방송채널 진출 방안' 연구
 - 가칭 '해외방송채널진출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 ※ 방통위, 지상파, 전문PP, 종편, 유관기관, 드라마제작사협회, 케이블TV 협회
- 한류 확산을 위해 보도·교양·오락·음악채널 등 주요 방송채널의 해외진출 국가 확대 지원

- 프로그램 공동제작, 제작인력 초청연수 등 추진
- 상용화 가능성이 높거나 시장성이 큰 국가(동남아, 중남미, 유럽 등)에서 로드쇼 개최
 - 로드쇼 참가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 추진
- 우리 기술의 상용화 의지가 있는 국가에 정부컨설팅 사업 수행
- 유관기관, 해외기관, 현지 전문가의 동향정보 및 심층자료 제공 등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범위의 확대
 - 초청연수, 외빈면담 등을 통한 자료도 필요시 제공
- 수혜국, 국제기구 및 국내 기업의 수요 등을 토대로 개도국의 실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맞춤형 ODA 제공
 - ITU, ASEAN, APT, AfDB, 월드뱅크, IDB 등 국제기구 협력과정, 국내기업 수요 반영 및 정부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요 과정 등 초청연수 실시
 - 적극적으로 정책자문 요청하여온 국가 및 정책적 수요를 중심으로 정책자문 추진

□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활동 강화

- 세계 방송통신 분야의 강국 및 신흥 개발국들은 자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 및 방송통신분야 선도국 입지 구축을 위한 경쟁 치열
 -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2014년 ITU 전권회의」의 차질없는 준비, 방송통신 장관회의 개최, 국제협력 강화 및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하여 ICT 선진국의 글로벌 브랜드 강화에 다각적으로 노력

- 「ITU 2014년 전권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준비조직을 구성·운영하고 ITU 사무총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내 개최도시 확정
- 세계 방송통신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송통신 장관회의, 국제 방송통신컨퍼런스, APT총회 및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송통신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기구에서 영향력 제고
- OECD, AIBD 등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여 방송통신정책 논의에 우리나라의 정책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
- 국제기구 회원국의 수요를 토대로 개도국의 실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맞춤형 ODA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영향력 강화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세계 방송콘텐츠 시장은 '10년 3,95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08~'12년까지 연평균 3.3%성장할 것으로 전망(PWC, 2010, 매출액기준)
 - 콘텐츠 제작부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PP의 경우 국내 판매시장이 매우 협소하여, 대부분이 국내 콘텐츠 제작주체는 영세
 - 아울러, 다매체·다채널 등장과 디지털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 등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콘텐츠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 국내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는 글로벌 통합 앱스토어(WAC)와의 기술규격 연동으로 WAC의 추진 일정이 연기될 경우 국내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 개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방송사, 외주사, 시청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달라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및 시청권 보호를 병행할 수 있는 방송광고 규제 개선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기기, 네트워크와 상관없이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콘텐츠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인터넷이라는 단일망을 통해 유통되면서 방송·통신·인터넷 등 인접 산업간 장벽이 소멸
 - 다매체·다채널 경쟁과 방송의 디지털전환, 방송광고시장의 재편 등으로 새로운 시장질서가 형성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 세계 방송통신분야의 급격한 환경에 따른 각 국의 다양한 국제적 협력 강화 시도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각 국의 국내·외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임

□ 갈등요인

- 유치단계에 있는 방송콘텐츠 산업을 정부주도로 진흥하는 차원에서 영세 콘텐츠 제작주체를 중심으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 재원협의 과정에서 직접지원 필요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고,
 - 방송콘텐츠 관련 방통위-문화부간 업무 갈등으로 일관된 진흥정책 추진에 한계
- 국내 통합 앱스토어 구축·운영에 있어 개별 이동사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 존재

- 광고시장 경쟁상황, 재원의 효율적 활용, 시청권 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상파, 유료방송, 신문, 외주제작사,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 발생의 여지가 있음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의 분쟁 및 관계부처 간 업무영역 충돌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 발생의 여지 있음
 - 방송광 금지품목 규제 개선과 관련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 발생으로 개선 지연 가능성이 있음
- 사업 성격상 해외진출 지원사업 실시에 따른 단기적 성과 도출이 어려워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에 애로
- 세계 방송통신장관급 회의 개최시 초청대상국의 장관급 인사가 다른 일정 또는 국내·외 여건상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4) 참고자료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구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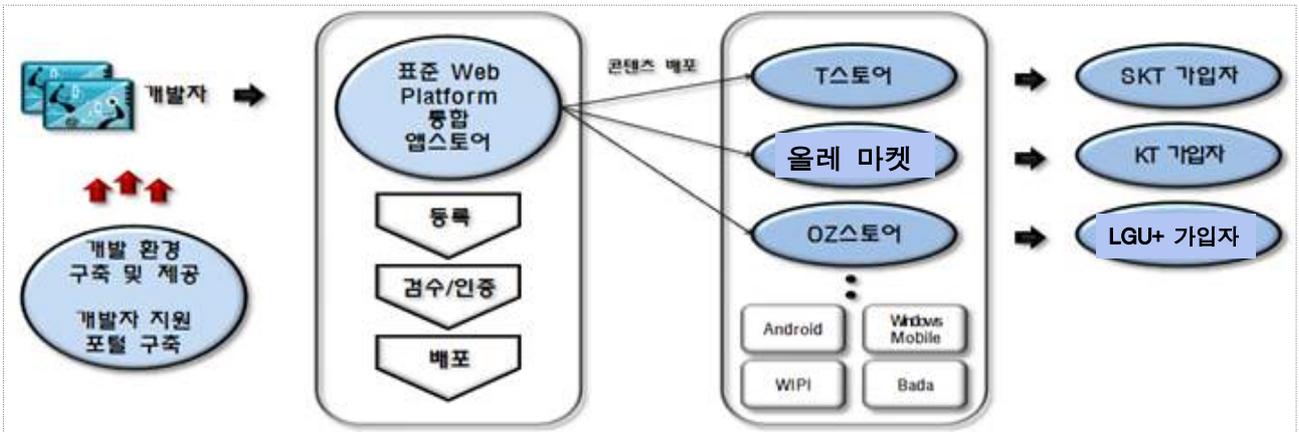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조감도 >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구축방향 >



□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 제공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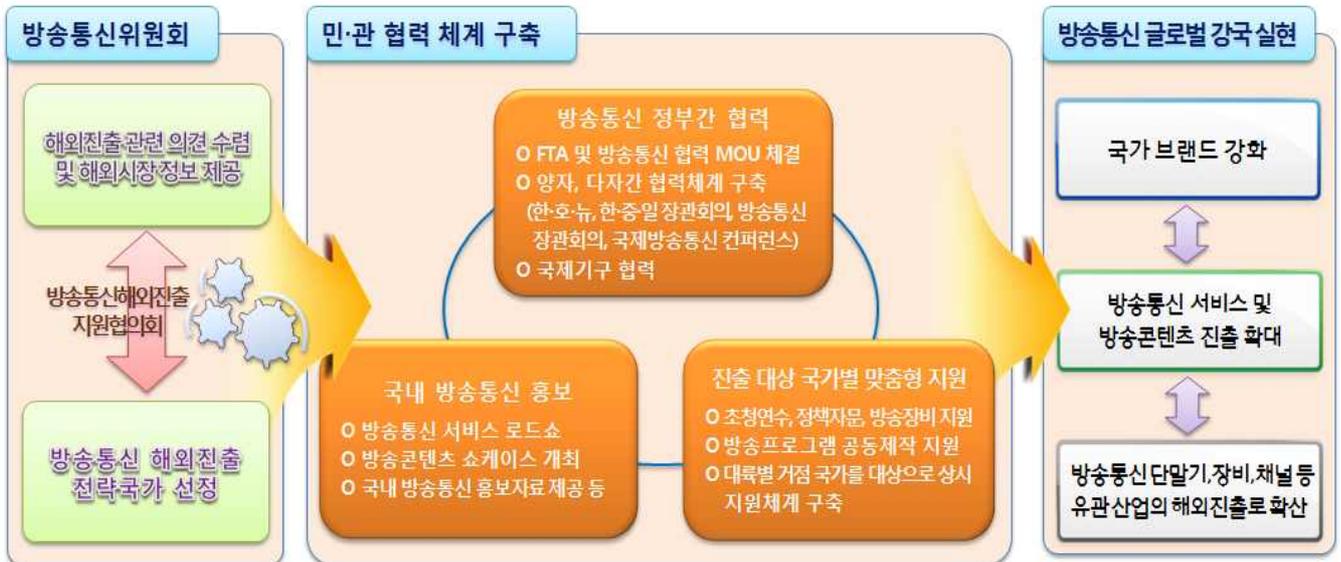
□ 방송광고 제도 현황

매 체	편성·운용규제	가상·간접광고
지상파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10분, 총량제 미적용, 중간광고 원칙적 금지 - 프로그램(6분), 토막(3분), 자막(40초), 시보(20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 - 가상광고 : 운동경기 - 간접광고 : 오락, 교양 ◦ 시간(5/100), 크기(1/4) 제한
유료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시간당 총량제 적용, 중간광고 허용* * 유료는 1회 1분(45~60분 1회, 60~90분 2회, 90~120분 3회, 120~150분 4회, 150~180분 4회, 180분 이상 6회) 	

□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추진현황

- '08.11.27 현재, 현행 방송광고판매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
- '09. 5.17 한선교 의원 방송법 개정안 제출
 - ※ 김창수(9.25), 진성호(11.3), 이용경(12.4), 전병헌(12.14), 이정현(12.15) 의원 발의
- '09.12.11 방통위 방송광고판매제도 관련 의견 문방위 제출
- '10. 1월 ~ 방송광고판매 임시체계 운영
- '09. 12, '10. 2, 4월 :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3회 개최

□ 방송통신 해외진출 추진체계



□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요

- 행사명 : 제19차 ITU 전권회의(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2014)
- 기 간 : '14년 총 3주간 예정
- 장 소 : 대한민국
- 주 최 : 방송통신위원회(개최국 주무관청)
- 주 관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참가대상 및 규모 : ITU 회원국 192개국, 약 2,500여 명

○ ITU 회원국의 장·차관급 대표, 부문회원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IT 기업 및 표준화 단체 등 약 2,500명의 외국인 참가 예상

□ 주요의제 및 활동

○ ITU 사무총장·사무차장, 3개부문(전파통신·표준화·개발) 국장, 전파규칙위원회 위원 등 고위 선출직 선거(임기 4년)

○ '14년 이후 향후 4년간 ITU 정책 및 ICT 표준 관련 주요 전략 결정

○ ITU 국가별 분담금 결정 및 이사국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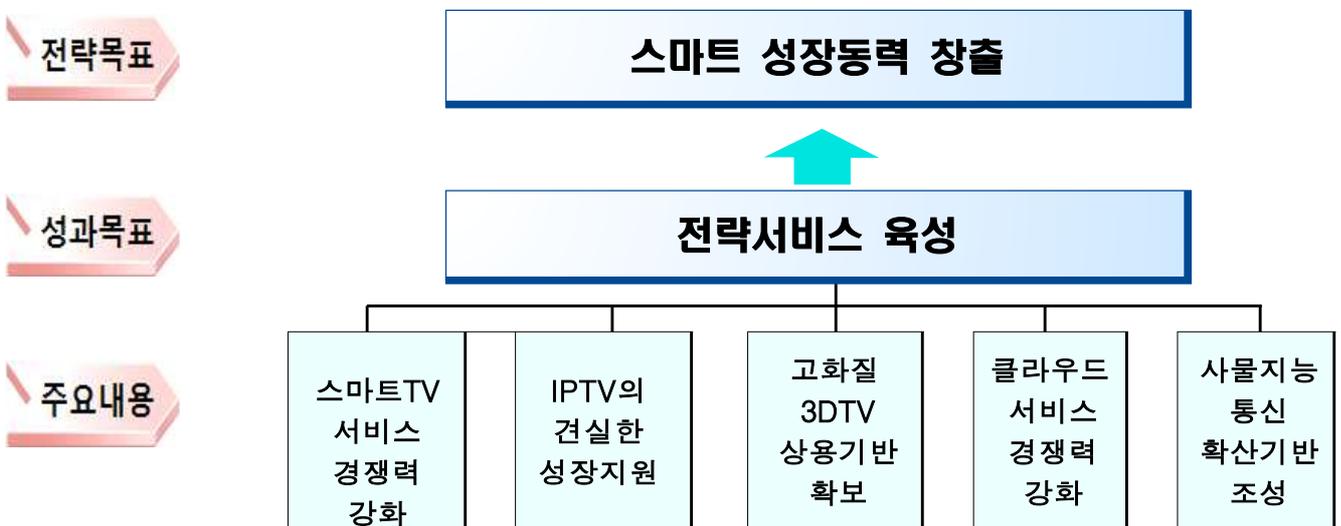
○ 전시회, 포럼, 산업체 투어, 양자·다자간 회담 등 다양한 연계행사

성과목표 I -2

전략서비스를 육성한다.

(1) 주요내용

- 스마트TV 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개발 지원, 스마트TV 기술개발, 콘텐츠 연계·표준화 등 업계간 협력기반 조성
- IPTV 가입자 300만명 달성으로 시장 안착에 이어 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 유도 및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IPTV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
- 세계 최초로 개발한 HD급 3DTV 방송 기술의 검증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3D 시청 안전성 확보를 통해 3DTV 방송 상용기반 확보
- IT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대용량 데이터를 다양한 단말에서 저비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국내 이용자 수요 확산 촉진 및 산업 경쟁력 제고
- 국내 사물지능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모델 보급·확산을 통한 산업활성화 기반조성



(2) 세부 추진계획

□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의 진전 등으로 촉발된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업체간 협력 필요성 대두
 - 급속한 기술과 시장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스마트 시대 초기 단계에는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표준화·제도 개선 등 적절한 정부 지원 필요
-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개발 지원
 - N-스크린 환경하에서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사업자, 솔루션업체, 서비스 수요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서비스 모델을 개발
- 스마트TV 기술개발
 - 음성 및 제스처 인식, 검색, 증강현실, 스마트광고, 유해물차단 등의 핵심 기반기술 개발
- 콘텐츠 연계·표준화 등 업계간 협력기반 조성
 - 방송·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이 콘텐츠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스마트 미디어 발전 포럼 구성·운영
 - 스마트미디어 조사·분석

-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 검증 및 N-스크린·양방향 콘텐츠·TV용 앱마켓 등의 표준화, 사업자 자율기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정비

□ IPTV 건설한 성장 지원

- IPTV 제공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이행점검으로 콘텐츠, 네트워크 등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 추진
- 다매체와 연결(N-스크린)하여 IPTV에 적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융합서비스 모델을 발굴·제공하여 공공서비스 확대
 - 수요조사를 통해 방송·통신사업자, 솔루션업체, 서비스 수요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서비스 모델 개발
- '09년부터 추진된 교육, 국방 분야의 IPTV 서비스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서비스 내실화 추진
 - '10년 보급된 학교 IPTV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방과후 학교 및 재량 학습 중심으로 운영
 - 국방 IPTV 서비스는 인재개발, 외국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콘텐츠 제공을 비롯해 KBS 프로그램(VOD)을 무료 제공
- IPTV 등 다양한 기기의 화면(스크린) 및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N-스크린 서비스가 상호 호환될 수 있는 기술 개발

□ 고화질 3DTV 상용기반 확보

- (실험방송 확대) 고화질 3DTV 기술검증을 위한 실험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요경기를 실험 중계
 - 실험방송용 고화질 3D 표준 콘텐츠 제작·방송
 - 3D 시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무안경 3DTV 기술개발) 안경없이 여러 위치(시점)에서 3D 시청이 가능하도록 무안경 3D 영상 전송·재현, TV 구현기술 개발
- (국제표준화 주도) 국산 3D 장비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

- (기본계획 수립)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법제도 정비) 계약상 분쟁 가능성, 정보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SLA 보급 및 관련 법령정비 추진
- (인증제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조기 확산하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의 검토
- (테스트베드)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솔루션 등을 개발, 시험·검증할 수 있는 클라우드 테스트베드의 고도화 추진
- (컨퍼런스) 클라우드 관련 국내·외 기술·정책공유 및 홍보,

국제협력 등을 모색하기 위한 “The Clouds 2011 그랜드 컨퍼런스” 개최

- (정책협의회) 클라우드 관련 범부처 협력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 (글로벌화) 세계 최고 수준의 ICT인프라와 OECD 최저 수준의 전기요금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IDC의 Cloud Data Center로의 전환” 등을 추진
 - 클라우드 사업자, 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의견수렴 등을 거쳐 Cloud Data Center 전환 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도출

□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확산 기반조성

- 국내 사물지능통신 중소벤처기업에게 서비스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 사물지능통신 단말, 서비스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중소벤처에 무료 제공하고, 기술 및 문제점 개선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의 서비스 개발 기간 단축 및 품질 제고
-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모델 보급·확산, 전파사용료 감면 추진 등을 통한 산업활성화 기반조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빠르게 보급되고,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음악·방송·출판 등 미디어 산업분야에 새롭게 진출

-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둘러싸고 국내·외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업체 전체를 포함하는 생태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중
-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기기·네트워크·콘텐츠·서비스 등 단위 분야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집약하여 발휘하지는 못하는 상황

○ IPTV는 기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등 포화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스마트TV 도입으로 상호 협력 및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모델 발굴 필요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직면

○ 3DTV 방송은 과거 컬러TV 등장과 같은 수준의 충격과 여파를 영상 산업계에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구글, 애플, MS 등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 전망

※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 '10년 \$683억→'14년 \$1,488억불 (Gartner, '10)

-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규모는 '10년 9,610억원(추정치, 세계 시장대비 1.2%)에 불과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 4년 존재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외기업에 시장 잠식 우려

○ 국내외 사물지능통신 시장의 변화와 표준화 추진에 따라 시장예측이 가변적이며, 유관기관들의 유사 사업추진과 법·제도 정비 주체의

혼선으로 인해 사업추진환경이 상당히 유동적임

- 국외 사업추진 현황, 시장전망, 표준화 추진 동향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분석

□ 갈등요인

- 기기 제조업체, 콘텐츠기업(방송사), 통신사, 인터넷 기업 등 스마트TV 관련 업계가 단위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업체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노력이 미흡
 -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개발 시 업체들 간의 입장 차이로 사업의 수행이 지연될 가능성
- IPTV 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업계 간,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 측면 상존하며, 스마트TV와 콘텐츠 및 서비스 방식의 유사성 등으로 경쟁요인이 발생
- 시청자들이 안경 착용을 불편해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TV를 보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짐
- 클라우드 서비스는 IT자원의 활용방식을 보유에서 임대로 변환시키며, 다양한 서비스 계약관계 및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분쟁소지 잠재
 - ※ 다중 서비스 계약관계 : B2B, B2C, B2B2B, B2B2C, B2B2B2C 등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 침해사고, 데이터 분실 등 안전성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부족
 -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간 지속적인 공조 필요

- 사물지능통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약과 협회, 포럼 등과 유기적인 협력 추진 등이 필요함

(4) 참고자료

- 3DTV 시장 전망

(단위: 만대,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성장률
판매량	420	1,290	2,740	4,350	6,050	94.8%
매출	8.4	22.7	42.1	54.5	64.3	66.3%

※ 출처 : iSuppli, '1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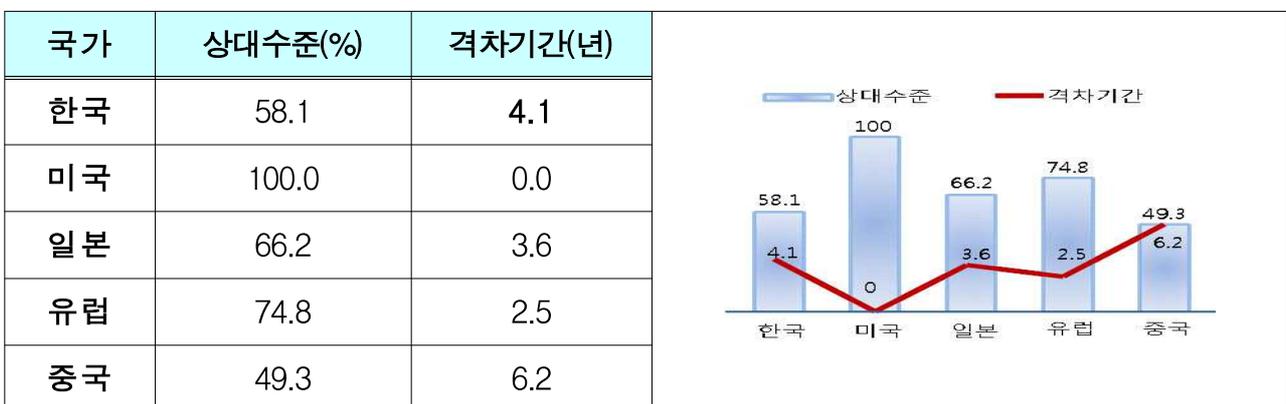
-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전망(출처 : 가트너, '10)

(단위 : billion dollars)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CAGR(%) '09~'14
58.6	68.3	81.3	102.1	126.3	148.8	20.5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연평균 성장률)

- 선진국과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격차 수준(출처 : KEIT,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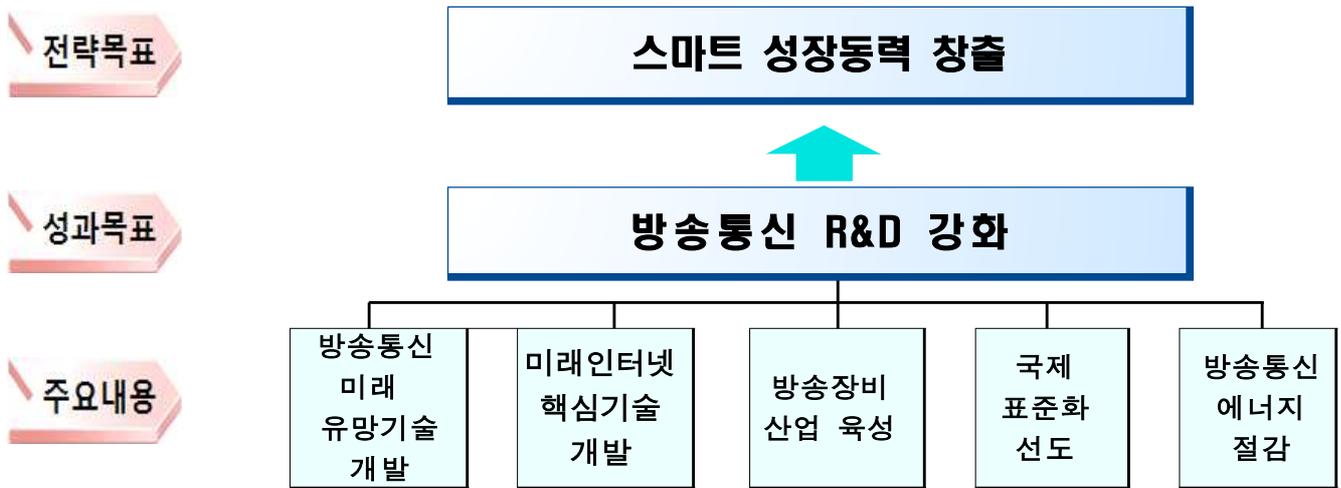
○ 사물지능통신(M2M) 국내외 시장전망



(1) 주요내용

- 방송통신 미래 서비스 육성을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신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 품질(QoS) · 이동성이 보장되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실시간 트래픽 제어기술 등 미래인터넷 핵심 기술개발
- 디지털방송 전환 및 PostHD(3D, UHD)시대를 맞이하여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ITU 4G 국제표준은 '12.1월 전파통신총회(RA)에서 승인 예정임에 따라, 국내개발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 활동 및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 등 다각도의 표준화 활동 추진
 - 4세대 이후의 이동통신(B4G) 등의 국제표준화의 초기 주도권 확보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통한 국가 위상강화 및 표준 · 시장 · 기술 주도권 확보와 선도
- 상용화 된 기존방식 중에서 휴대폰 한글자판 표준화를 선정하여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등 방송통신분야 국제표준화 선도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린ICT 적용기술의 국제표준 개발과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 개발 추진
 -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데이터 조사 · 분석과 함께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목표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여건에 맞는 다양한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유도



(2) 세부 추진계획

□ 방송통신 미래 유망기술 개발

- 방송통신 미래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 고화질 3DTV, 무안경 3D UHD TV, 양방향 DMB 등 방송 서비스의 조기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핵심 원천 기술 및 표준화 추진
 - 편리한 UI(음성·동작인식), 지능형 검색, 광고 기술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스마트 TV 기반 기술 개발 지원
 - 사물지능통신, 정밀 위치 인식 등 응용 플랫폼 등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추진
 - 전파를 활용한 암진단·보안검색·무선전력전송 등 신 전파응용 서비스 개발 추진

- 유·무선 트래픽 확대에 대비, 유·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 개발
 - 스펙트럼 이용 효율 제고, 새로운 통신망 구조 등 4G 이후의 변혁적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 품질(QoS)·이동성이 보장되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실시간 트래픽 제어기술 등 미래인터넷 핵심기술 개발
- 녹색성장, ICT 역기능 방지, 안전한 사회기간망 등 방송통신을 활용한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 미래인터넷 핵심기술 개발

- 백본망 및 가입자 망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전송 기술개발
- 라우터에 데이터 저장 및 프로세스 기능을 갖는 스마트노드 기술개발
- 이름기반 네트워크(Named-Data Network), 전달지연 네트워크(Delay Tolerant Network),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연구
- 의미기반 서비스 기술, 개방·통합형 플랫폼 기술, 미래인터넷 보안기술 연구
- 미래인터넷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외 표준화 추진

□ 방송장비산업 육성

- 공공부문, 방송사 등의 국산 방송장비 우선구매 촉진을 통해 국내 수요 확충

-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대상에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TTA 부설) 인증제품 포함 추진(지경부 협의사항)
- 방송사의 (재)허가 등 방송사업규제 및 정부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기여부문 포함여부 검토
- 품질과 규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한 방송장비의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장비 시험인증센터의 검증대상 확대
- 방송사, 학계, 연구계 등이 인증대상 장비 선정, 규격개발 및 인증심사까지 함께 참여하여 방송장비의 신뢰성·안정성 확보

※ '10년 HD를 기반으로 3D, AT-DMB, UHDTV 등 방송장비 시험시설 확대

□ 국제표준화 선도

-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4G 국제 표준화 전략위원회」를 운영하여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실무그룹을 통해 ITU, IEEE, 3GPP 등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단체와 협력 강화
- ※ 3GPP :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LTE 표준화 협의체)
-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WiBro 표준화 협의체)
- WiBro 및 LTE 진화기술이 모두 ITU의 권고로 최종 승인 ('12.1월)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추진
 - WiBro는 전세계적으로 출원된 모바일 와이맥스 특허 2400건 중 국내기업이 약 38%를 차지하여 국내기업의 활약이 돋보임

- 또한, 4G이후의 차세대이동통신 국제 표준화 지속 선도
 - B4G(4G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를 위한 글로벌 주파수 확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유리한 입지 마련
 - B4G 표준화그룹 의장단 진출 등 선도활동 강화
- 소비자단체의 건의와 미래형 한글자판 포럼 운영(연중)을 하여 한글자판 표준안을 확정된 후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한글자판 국가표준 제정

□ 방송통신분야 에너지절감

-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데이터 조사·분석 및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에너지 절감 추진
 - 방송통신 분야 업종별 분류체계를 토대로 방송통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실행력 있는 절감 방안을 마련
 -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절감목표량 설정 및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 실적 점검
- 방송통신 온실가스 장기 예측모형 및 시나리오 개발 분석
 - 온실가스 장기 예측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절감 시나리오 개발
 - Green by ICT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잠재력을 평가하고 저감효과 분석

○ 방송통신 분야 녹색인증 평가사업

- 방송통신분야 녹색기술인증 평가분야 확대를 통한 녹색인증 활성화(녹색인증제 운용요령 개정 고시(안) 마련 및 반영)
※ 녹색기술 중분류 1개 분야 → 녹색기술 중분류 5개 분야로 확대
- 녹색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업 대상 홍보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스마트 모바일기기 · 서비스가 방송통신분야에 활력 불어 넣고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대혁신("Big Bang") 제공
- 방송통신 산업 중심축이 단말과 네트워크에서 S/W기반 콘텐츠 ·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진화
- 미래인터넷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혁신기술 및 서비스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미래인터넷'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연구 중
※ 미국 : 전담기관 NSF/예산 7.4억불('04~'14), 유럽 : 전담기관 FIA/예산 13.22억 유로('07~'13)
- 방송장비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시험인증 제도 활성화 과정에서 수요자(방송사), 제조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 존재
- 전 세계 유수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WCDMA 및 와이브로 진화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는 두 4G 후보기술(LTE 진화기술, 와이브로 진화기술)을 ITU로 제안('09.10)

-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들은 B4G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10년도부터 착수
- 중국 정부에서 '조선어 자판'의 중국 국가표준 제정 후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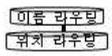
□ 갈등요인

-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모바일 멀티미디어 및 SNS 등 통신량의 급증으로 무선데이터 트래픽의 포화 예상
- 현재의 인터넷 체계는 40년 전에 체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TCP/IP, 전송품질, 이동성 보장, 미래의 융합서비스 수용 등에 내재적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발전적 변화 필요
- 방송사는 호환성, A/S, 안정성 등을 문제로 대부분 외산장비를 선호하고 있으며 국산 방송장비 사용을 기피
- 우리나라가 제안한 두 개의 4G 후보기술 모두 ITU 4G 국제 표준 반영 과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 B4G 개념 및 기술·서비스 요구사항 등이 국제적으로도 정립되지 않아, 각 국가 및 표준화단체들은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 추진
- 400여개 존재하는 한글자판 관련 특허권의 보유자들이 서로 자기 특허의 표준 채택을 주장하는데 따른 혼란 우려

(4) 참고자료

□ 개방·협업형 미래인터넷 기술개발 전략('11.2월)

○ 트래픽 폭증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N/W 구축, 인터넷기술 소비國에서 기술 생산國으로의 전환, 글로벌 인터넷 기업 창출을 위해서 개방적이고 전략적인 R&D 투자 추진

구분	연차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19년	2020년	
목표		단기적 인터넷 고도화			중기적 인터넷 가상화			장기적 인터넷 지능화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유무선 가입자망 전송	가구당 200Mbps급 비디오전송 2.5Gbps WDM-PON 			1.5 ~ 2Gbps급 무선접속 			비디오 : 500Mbps급 (4K-3D)  유선 : 10Gbps WDM-PON  무선 : 10Gbps급 			4Gbps급 (8K-3D) 40Gbps WDM-PON 100Gbps급
	백본망 패킷-광 통합스위치	 장비 : 수백 Gbps급 파장 당 : 10~25Gbps 전송			장비 : 수 Tbps급 파장 당 : 100Gbps 전송			장비 : 수 Tbps급 파장 당 : 400Gbps 전송			
스마트 노드기술	스마트 노드	 서비스 라우터 + 서버 통합 스마트 서비스 노드			 라우터 + 서버 (부분 가상화) 스마트 노드			 개방형 플랫폼 + 완전 가상화 완전 통합형 스마트 노드			
		미래 네트워킹 혁신기술	 이클립스 라우팅 위치 라우팅 구조 및 알고리즘			 NIN 시험구현 및 기술검증			 스마트 NIN 시범적용		
미래 인터넷 응용 기반기술	지능형 서비스 생태계 연동	 지능형 네트워킹 시험구현 및 기술검증			 스마트 DTN 시범적용			 특정응용분야 상용화			
		 센터 내부망 가상화			 센터 외부망 가상화			 내외부망 통합 가상화			
미래 인터넷 응용 기반기술	지능형 서비스 생태계 연동	개인 맞춤형 서비스			상황 인지형 서비스			사물 지능형 서비스			
		개방형 앱 스토어			개방형 서비스 장터			사업자 자원 거래소			

□ 방송장비시장 규모 및 산업현황

○ 방송장비 시장 규모

(단위: 억불)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3년	15년	18년
세계시장	284	293	292	289	303	379	441	558
국내시장	8.4	10.2	14.4	17.0	18.2	15.2	18.3	17.7

※ 출처 : 방송장비산업의 경제성 연구(ETRI, 2010)

○ 방송장비산업 현황

- (세계시장) 방송장비는 고도로 세분화, 전문화되어 각 분야별 소수 업체들이 주도하여 진입이 쉽지 않음

※ 카메라·편집기 등 영상제작장비는 소니(日) 등이, 오디오 등 음향장비는 해리스(美)·톰슨(프) 등이 장악(소니·톰슨이 전 방송장비시장의 40%점유 추정)

- (국내시장) 150여개 제조사(매출 100억원 이상 13%, 10억원 이하 67%) 주요 생산 품목은 앰프·마이크·스피커·중계기 등 기술적 복잡도 및 단가가 낮은 방송주변장비로 틈새시장을 공략

【 수요처별 방송장비 판매현황 】

대상기관	방송사			비방송사			유통/SI	
	지상파	IPTV, DMB,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PP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타	장비 유통업체	SI 업체
평균매출 비중	6%	3%	19%	32%	28%	4%	6%	2%
	28%			6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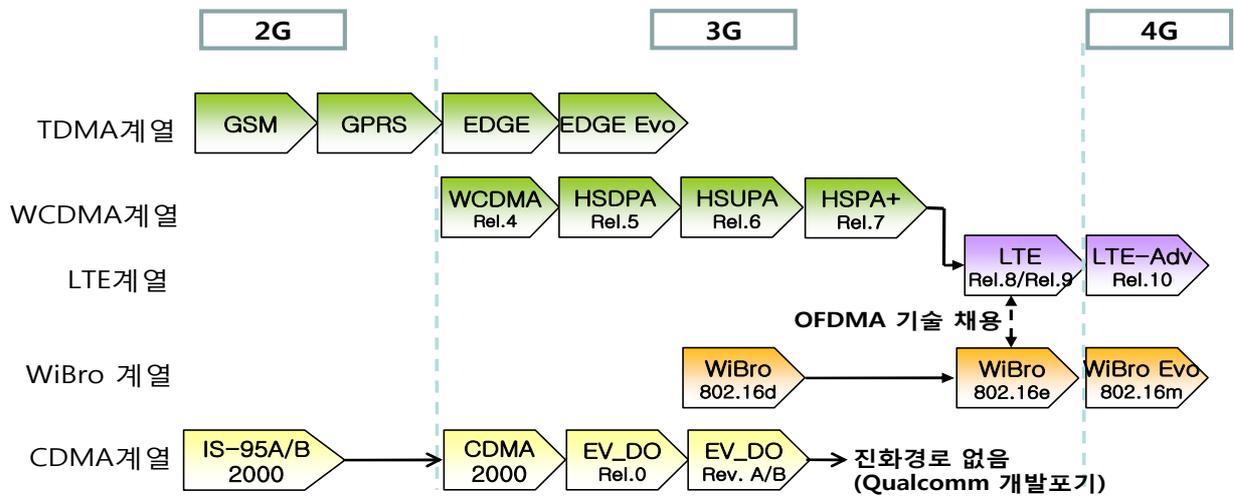
※ 출처 : 방송장비산업의 경제성 연구(ETRI, 2010)

□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

○ (WiBro) 현재의 WiBro는 3세대 기술로서 OFDMA 전송방식을 사용하며 LTE보다 표준화 3년, 상용화 4년 앞선 기술로 4세대로 진화 중

※ WiBro의 3G표준 채택 및 세계시장 확산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3GPP에서는 당초 4G기술로 개발되던 LTE를 3G표준에 반영

<이동통신 기술 진화 경로>



- (LTE) '10년말부터 상용화를 시작한 LTE는 3세대 기술이나 전송방식 및 투자 측면 등에서 3세대 WCDMA(CDMA)와 전혀 다른 기술방식
- LTE는 WCDMA와 전송방식이 달라 막대한 신규 망 투자가 필요하나, 3G LTE에서 4G LTE 진화는 S/W 업그레이드 등 최소 투자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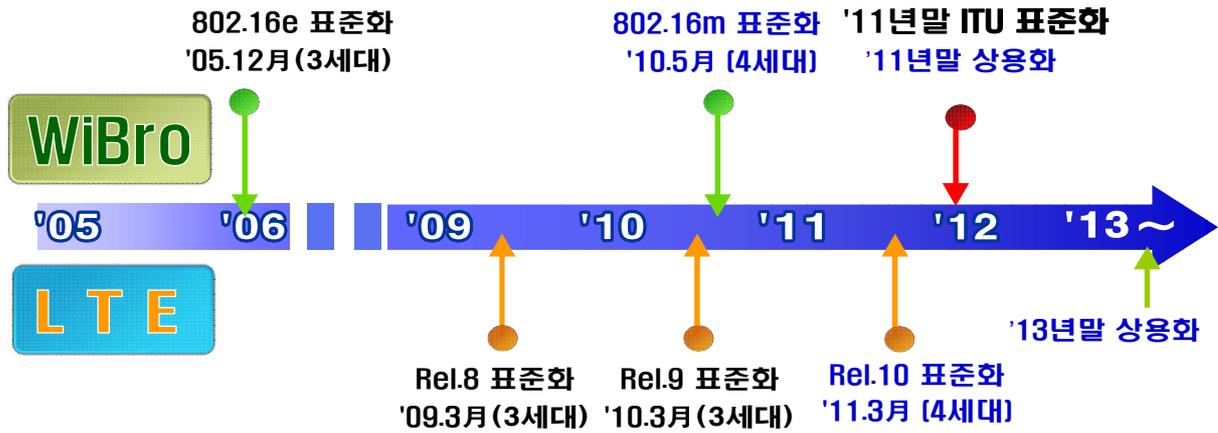
▶ (3G/4G LTE) 4G LTE는 3G LTE에 비해 전송속도 향상을 위해 대역폭통합 (Bandwidth Aggregation), 셀경계지역 전송향상기술(CoMP), 최대 8개의 다중안테나 (MIMO) 등 일부규격 추가 또는 업그레이드

- ※ CoMP (Coordinated Multi Point) : 셀간 협력에 의한 다중 셀 경계 사용자의 용량증대 기술
- ※ MIMO (Multi Input Multi Output) : 여러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전송속도를 높이는 기술
- ※ 3GPP :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WCDMA/LTE 표준화 협의체)

□ 4G표준화 및 장비상용화 예상일정

- (WiBro) 3G WiBro(802.16e)는 '05.12월 표준화(IEEE) 및 '06.6월 상용서비스, 4G WiBro(802.16m)는 '10.5월 표준화 및 '11년말 장비상용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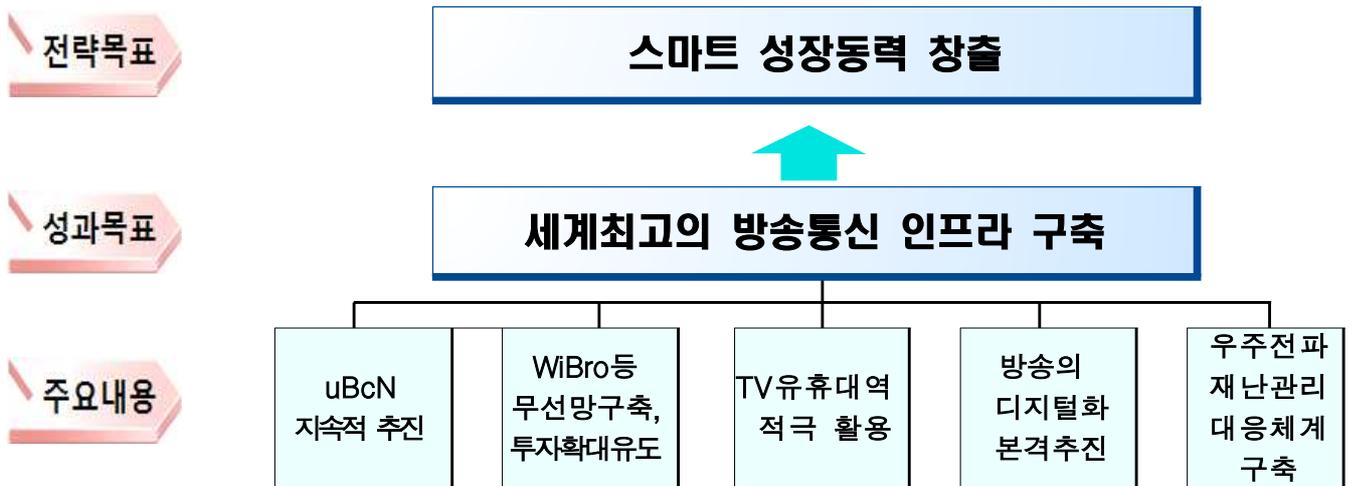
- o (LTE) 3G LTE(Rel.8)는 '09.3월 표준화(3GPP) 및 '10년말 상용서비스, 4G LTE(Rel.10)는 '11.3월 표준화 및 '13년말 장비상용화 예상
- ITU-R에서는 '11.4월까지 4G 기술 표준안을 완성하여, '12년 초에 표준화를 최종 완료할 예정



(1) 주요내용

- Giga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실감형 미래인터넷서비스 발굴, 유무선 융합 환경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미래성장동력 기반 조성
 - KOREN 연구시험망 고도화와 국제연구망(TEIN 등)을 이용한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미래네트워크 실증테스트 환경 구축
-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른 효율적 대응과 스마트 모바일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 및 R&D 등 투자 확대를 유도
 - 전국 82개 市와 주요 고속도로에 WiBro망을 차질없이 구축하여 WiBro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11년 상반기 최종 이행점검)
 - 사업자의 차세대 무선망(LTE) 구축을 유도하여 급증하는 무선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
- TV대역(54~698MHz) 중 지역별로 비어있는 TV White Space를 WiFi 등 다양한 용도 활용 추진
- '12년 디지털 방송 전면 실시를 위하여 방송보조국과 제작·송출 시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과 HD 프로그램 제작 확대 추진
 - 디지털전환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DTV구매보조 등 지원 사업과 함께 수신실태 조사등 실시
 - 전국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시청자 지원과 함께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디지털전환 홍보 추진

- 통신환경의 발달로 우주전파가 IT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우주전파 재난 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법 개정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초광역대역융합망(uBcN)의 지속적 구축

-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Giga인터넷 상용화 계획 마련
-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 관련 인가조건으로 부여된 농어촌 BcN 구축계획의 망 구축 현황 이행점검 실시
- 급증하는 데이터 분산 및 안정적인 무선인터넷 환경 제공을 위해 통신사의 WiFi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
-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의 광대역망 구축 확대를 위한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및 효율적 망 구축 추진
- 농어촌 지역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촉진을

위해 초고속공중망 구축 용자지원 사업자 선정 및 용자 실시

- 미래인터넷 등의 ICT 기술과 응용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위한 미래인터넷 개방형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차세대 인터넷 기반 생태계 조성
- 초광역 융합망에 적합한 대용량 전송장비 등 국내 신기술로 개발한 국산장비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농어촌 주민의 BcN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에 특화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보급
 - 농작물 원격 모니터링, 농업기술/의료/교육 영상 컨설팅 등
- ASEM 산하 국제공동연구 전담기구로 신설하는 TEIN협력센터를 국내에 설립
 - 아시아·유럽간 인터넷·응용기술 등 방송통신 및 첨단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TEIN 국제연구망 구축 및 운영
- 유무선이 융합된 고품질의 실감형 서비스를 중점 개발하고 1,500개 시범가구에 제공하여 상용화 가능성 검증
 - WiFi·웹토셀 무선기술을 접목한 유무선 융합서비스 시범 도입, 3D멀티앵글 영상, 고화질 HD영상통신 킬러콘텐츠 발굴 등

□ WiBro 등 무선망 구축 및 통신사업자 투자 확대 유도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소모적 마케팅 비용 지출을 축소 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및 R&D 등 미래 투자 확대에 전환 유도
 - CEO 간담회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소모적 마케팅비 축소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
 - 2011년은 최근 3년 평균 투자액 이상(6.6조원)으로 투자 확대 유도

- 전국 82개 市와 주요 고속도로에 WiBro망을 차질없이 구축하여 서비스 제공 확대하고, 이행점검
 - WiBro망 구축을 위해 '11년 상반기에 1,787억원 등, KT 10,431억원, SKT 8,250억원의 누적 투자를 완료할 계획
- ※ 2010년말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5대광역시와 경부·중부·영동·호남 고속도로에 와이브로망 구축 완료 (KT)

- 국내 WiBro 기술·장비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속적 추진
- '11년 하반기 수도권부터 LTE를 도입 및 서비스를 개시하여 단계적으로 망 구축 확대 추진

<국내 LTE 서비스 제공 계획>

구분	SKT	LGU+	KT
주파수 대역	800MHz (5MHz)	800MHz (10MHz)	900MHz (10MHz)
서비스 개시(수도권)	2011. 하반기	2011. 하반기	2012. 1Q

□ TV 유희대역(White Space) 적극 활용

- 서비스의 도입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파급효과, 재원계획 등을 포함한 TV 유희대역 도입 추진계획 수립
- 지자체, 공공기관, 방송사, 통신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유희대역 활용 검증이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여 실험서비스 실시
- 유희대역 정책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

□ 방송의 디지털화 본격 추진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04시에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TV 방송으로의 전환을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

-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10조, 디지털전환 활성화 기본계획('09.6월)에 따라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TV방송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방송보조국) 디지털방송 커버리지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 보조국 구축 추진
 - '12.6월까지 100% 디지털방송 시설로 구축
- (제작·송출시설) 디지털전환율(SD포함) 92.8%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아날로그 제작·송출 시설 디지털전환 추진
- (HD 방송프로그램 제작확대) HD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확대하고 HD편성 비율을 '11년에는 70%, '12년에는 75%까지 확대 추진
-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에게 DTV구매비용(10만원) 또는 DTV 컨버터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TV 안테나 개보수
- (수신실태 조사) 전국민이 지역적, 환경적 여건과 상관없는 고품질의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국 400여개 도서지역과 158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방송 수신실태를 조사
- (난시청 해소) 노후된 공시청 설비 개선, 전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에 소출력중계기 설치, 마을공시청 설비 개선 등을 통해 농어촌 등의 난시청 해소
 - '11년부터 '12년까지 소출력중계기는 150개, 마을공시청 설비는 358개 개선
- (시범사업) 울진, 강진, 단양 3개지역 시범사업을 토대로 제주

지역의 아날로그 TV방송 종료('11.6.29.) 및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마무리

- (지원센터 구축) 방송의 디지털전환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디지털방송전환 추진본부와 시도별 디지털방송 전환지원센터 구축
 - 시도별 지원센터를 '11년까지 9개, '12년까지 25개 구축·운영
- (가상종료) 디지털전환 사전점검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아날로그 방송을 일시 종료하는 가상종료 추진
- (대국민 홍보) 온·오프라인 대중매체(TV, 전광판, 인쇄물 등) 활용하여 전국민에 대한 디지털전환 홍보 강화(노인 대상의 면대면 홍보 병행)

□ 우주전파 재난 관리 대응체계 마련

- 우주전파환경의 변화를 관측하여 예·경보 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우주전파 관측 및 예·경보 업무 근거 규정 신설
- 우주전파로 인한 재난발생 시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 및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로 유·무선 트래픽의 급증이 예상되며, 현재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고품질·대용량 콘텐츠 및

융합형·실감형 서비스 등 미래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음

※ 전세계 IP트래픽은 Video, P2P 이용 증대로 인해 '09~'14년까지 연평균 유선은 34%씩, 무선은 108%씩 증가 전망 (Cisco, '10)

- 광대역통합망(BcN)의 보급으로 IPTV, 인터넷전화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의료, 스마트워크, 스마트홈 등 광대역망 기반의 다양한 ICT 활용 서비스 제공 여건이 조성
- 주요 해외 선진국들은 무선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ICT 변혁을 준비 중이며, 각국 정부는 연관 산업 활성화 및 무선망 보급 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
-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의해 네트워크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서비스품질의 중요성 부각
-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 및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라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투자 확대 등이 중요 이슈로 대두
-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따라 WiBro, WCDMA(LTE), Wi-Fi 등향후 무선망 구축 및 추진 전략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TV 유희대역 활용을 위한 실험서비스는 지자체, 공공기관, 통신사 등 유희대역 서비스의 실제 이용기관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이용기관에 잘 알려지지 않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 갈등요인

- Giga인터넷 등 초광대역융합망(UBcN)으로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사업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수익창출을 위한 킬러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어려움

- 광대역망(BcN)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활발히 구축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는 경제성이 없는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여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 우려
- '11년 스마트폰 대중화 전망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 증가 요인과 네트워크 등 투자비 증가 요인이 상호 충돌될 소지
- 통신사업자는 기존 망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해 WiBro망 보다는 LTE망 구축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방송사는 현재 TV 방송용으로만 사용하는 TV 방송대역을 타 용도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
- '10년 말 현재 방송사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방송보조국의 디지털전환을 지연하고 있음('10년말 39% 수준)
- 직접 수신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시청이나 기타 사유로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의 반발
- '09~'10년 간 대국민 홍보 중점이 주로 수도권 위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정보접근이 취약한 계층 및 지역(군지역, 60대 이상)의 디지털 전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우주전파의 영향과 관련하여 일부 부처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대응체계 마련에 부정적인 부처가 있을 수 있음

(4)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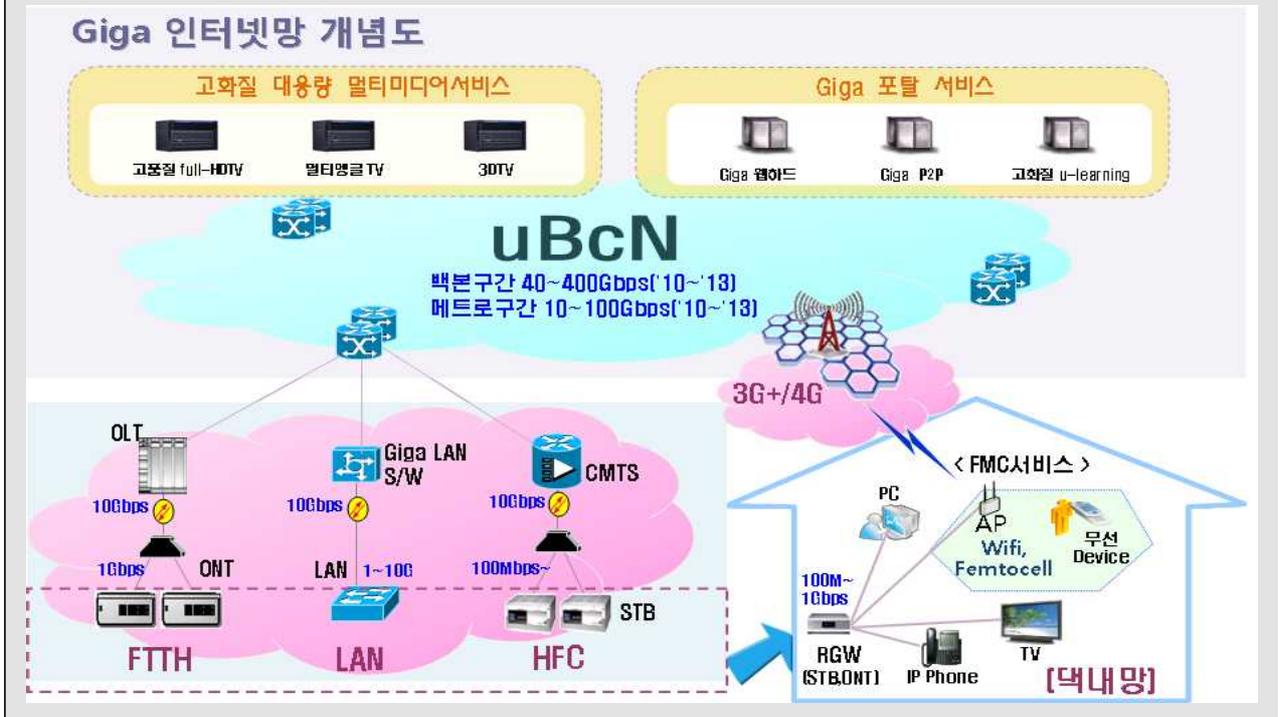
- Giga인터넷 서비스 개념

o Giga인터넷이란?

- 초광대역 가입자망 기술(FTTx, HFC, LAN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100Mbps를 초과하여 최대 1Gbps급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 BcN과 Giga인터넷 서비스 비교

구분	가입자망 속도	대표 서비스	특징
BcN	50M ~ 100M	영상전화, IPTV	방송통신융합
Giga인터넷	100M 초과 ~ 1G	3DTV, 멀티앵글TV, Giga P2P/웹하드	실감형 서비스



o 미래네트워크 연구시험망(KOREN)의 개념

o KOREN(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이란?

- 네트워크 기술 및 응용분야 등의 연구개발과 장비 및 서비스의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비영리 네트워크 인프라

o KOREN의 현황

- 연구시험망의 백본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수원 등 6개 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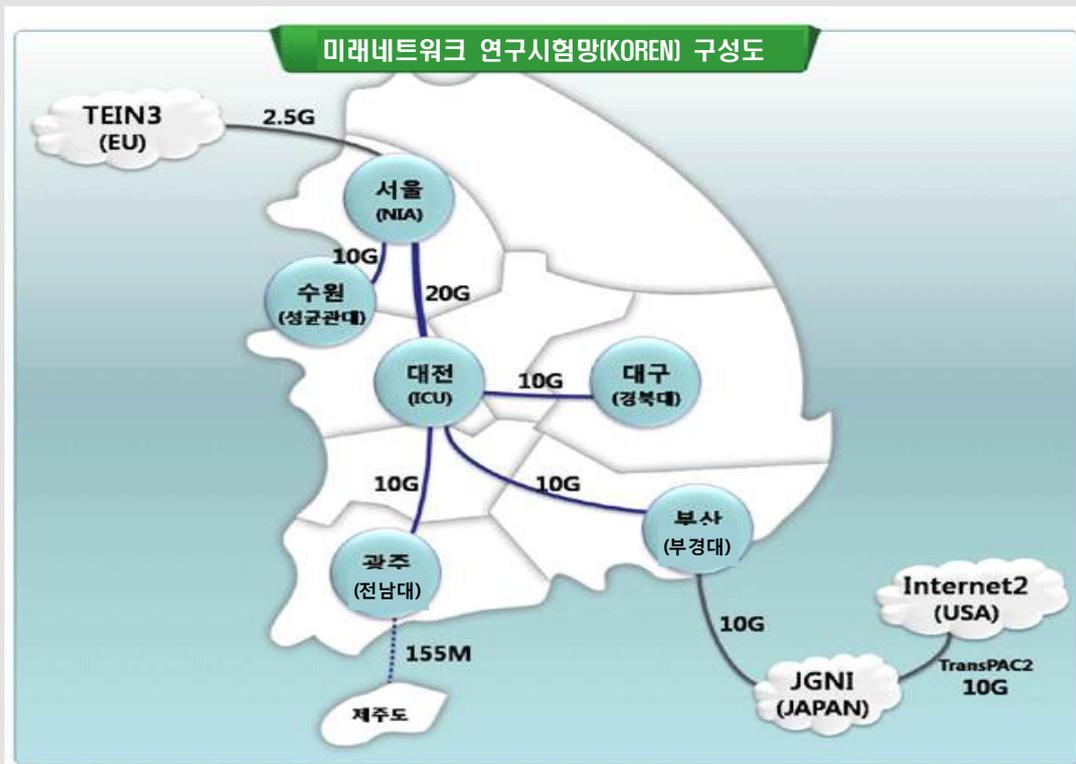
간 10G~20Gbps로 구성

- 이용기관 회선접속과 시험환경 지원을 위한 '공용접속시험센터' 6개소 구축

※ 접속점 : 서울(NIA), 수원(성균관대), 대전(KAIST), 광주(전남대), 대구(경북대), 부산(부경대)

-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100개 기관에 최대 1Gbps 회선서비스 및 시험환경 제공

< 국내 연구망 구성도 >



○ TEIN과 TEIN 협력센터의 개념

○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이란?

- 아시아·유럽간 차세대 인터넷 및 응용기술 개발을 비롯, 다양한 분야의 학문 연구와 교육을 위한 IT 기반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목적으로 구축된 아시아 유럽간 국제연구망
- 한국은 EC의 예산지원 없이 한국-홍콩-싱가포르 회선구간(2.5Gbps)을 구축하여 TEIN3 사업에 참여

< 국제연구망 구성도 >



○ TEIN 협력센터

- 제8차 ASEM 정상회의(브뤼셀, '10.10월) 에서 TEIN 협력센터의 한국 설립을 공식 승인

※ 방통위는 유럽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와 협의를 거쳐 TEIN4 사업계약 및 TEIN 협력센터 설립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 (서울 '10.11월)

○ 통신사업자 마케팅비 대비 투자비

(단위 :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잠정)
매 출 액	37.1	36.3	37.2
마케팅비	8.3	8.6	8.2
투 자 비	6.9	6.5	6.4

※ 매출액 : 서비스 매출액(단말매출 제외), 마케팅비 : 광고선전비 포함

○ 국내 WiBro 투자 계획

구 분	'06~'10	'11	누계
K T	8,944억원	1,487억원	10,431억원
SKT	7,950억원	300억원	8,250억원

※ 2011년 상반기 까지 총 18,681억원 누적투자 완료 예정

○ 주요국 TV 유희대역 추진 현황

- (미국) FCC는 '04년 도입 논의를 시작, '09년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 '10.9월 도입정책을 마련하고, 현재 상용서비스 준비 중
- (일본) TV 유희대역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위해 '09년부터 수요 조사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도입정책 마련을 추진 중
- (영국) '09년 전파조사 실시 및 기준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10년 가용채널 DB운용방안 마련 등 정책 도입 추진 중

○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전환 현황('10년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디지털 전환 예정일	'12년 12월 31일	'11년 7월	'07 ~ '12	'09년 6월
아날로그 방송종료 인지율(%)	70.8%	97.9%	68%	전환 완료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64.7%	90.3%	92.7%	전환 완료

※ 영국의 경우 순차전환 시행중, 비전환 지역에서의 조사

○ 방송사별 HD프로그램 편성 비율 현황('10년 기준)

방송국	KBS1	KBS2	MBC(본사)	SBS	EBS
비율	96.2%	86.3%	74.2%	82.1%	87.8%

※ 가중치 적용 비율임

○ 취약계층 지원대상 규모

구분		전체 규모	지원대상 가구수(직접수신 18.6%*)		
			'11년(25%**)	'12년(75%)	계
기초생활수급권자		88.3만 가구	4.1만	12.3만	16.4만
TV수신료 면제가구	시청각 장애인	20.4만 가구	0.9만	2.9만	3.8만
	유공자 등	7.5만 가구	0.3만	1.1만	1.4만
기타(차상위 계층)		41.6만 가구	1.7만	6만	7.7만
계		157.8만 가구	7만	22.3만	29.3만

* 지상파TV를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는 가구를 18.6% 적용

** 당초 '11년도에 전체 지원 대상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25% 지원으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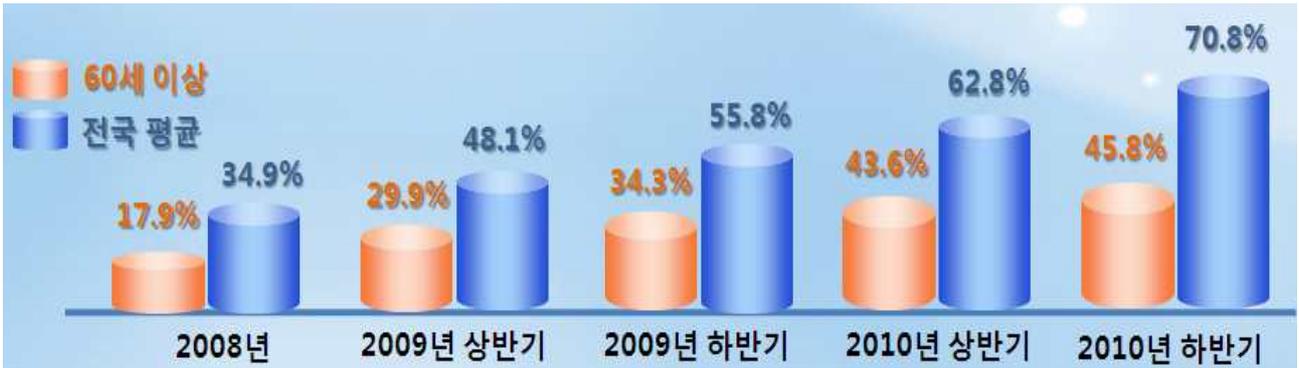
※ 서울 및 6개 광역시 41.8%(36.9만 가구), 기타 지역 58.2%(51.4만 가구) 거주

○ 해외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

구분	미 국	영 국	일 본
전체 세대수 (지원대상세대,%)	11,315만가구 (3,343만가구, 30%) ※ 인구 3억1천만명	2,560만세대 (450만세대, 18%) ※ 인구 6천1백만명	5,104만세대 (260만세대, 5%) ※ 인구 1억3천만명
지원대상	○ 국내 주소지가 있는 모든 가구 중 신청자 - 컨버터당 10불 자기부담	○ 노인(75세이상), 시각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저소득층 : 무료 제공 - 기타: 40파운드 자기부담	○ TV수신료 면제세대 중 - 공적부조 수급세대 - 주민세비과세 장애인 -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컨버터쿠폰 최대 2매 (5,979만개 쿠폰발행) ※ \$40 X 2매 (9.6만원)	○ 컨버터, 안테나 ○ DTV/PVR 구매보조 ○ 위성방송 가입지원 ※ 100파운드 (20만원)	○ 컨버터, 안테나 ○ 난시청지역은 위성방송, CATV 가입지원 ※ 5천엔 (6.5만원)
소요예산	21.5억달러(2조5천억원) (GDP의 0.015%)	6.03억파운드(1조2천억원) (GDP의 0.038%)	600억엔(7,800억원) (GDP의 0.014%)
시청자 지원센터	· DTV help center - AmeriCorps	· DSHS Ltd. · Digital UK	· 디지서포(전국 52개소) (총무성 TV수신자지원센터)
주요 업무	· 안테나 및 셋톱박스 설치 지원 · 쿠폰 신청 접수, 홍보, 교육, 홍보부스 운영	· 디지털 셋톱박스 및 안테나 설치 지원 · 지자체 미팅 주관 업무 등	· 홍보, 디지털수신기 구비, 안테나 공사, 공동수신시설 개보수 등 개별 방문 및 설명회 개최, 상담
인원 (구성)	· AmeriCorps회원 약 54만명 (디지털전환 준비 미비한 49개 도시 대상)	· DSHS(정규직 26명) · Digital UK - 총 65명(런던 : 40명, 지역 25명)	· 정규직 400여명 - 센터별 3~12명의 관리요원
실행	· (센터 주관) NTIA	· DSHS(BBC 자회사)	· (센터 주관) Digi suppo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기관	(정보통신관리청) · (실행) IBM 수탁	· Eaga plc(약 1천명) · (자원봉사훈련 및 1:1상담 등) · (홍보주관) Digital UK	· (실행) NTT-ME 수탁 (NTT 자회사)

○ 전국 평균 인지율 대비 60세 이상 인지율 비교



○ 국가별 우주전파 관련 연구 및 예보 현황

구 분	미 국	영 국	유럽	일 본	한국	브라질
기관명	NOAA/SWPC	RAL	ESA	NICT (정보통신연)	RRA	INPE
소속기관	상무부	과학 전파부	ESA(유럽 항공우주국)	총리직속 정보통신 관할	방송통신위	과학기술부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양한 디지털콘텐츠가 인터넷이라는 단일망을 통해 유통되면서 방송·통신·인터넷 등 산업간 장벽이 소멸
- 다매체·다채널 경쟁, 방송의 디지털전환, 신규채널의 등장 등에 따라 방송통신시장이 격변
- 사회와 시장의 성숙에 따라 공정사회의 실현이 주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이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상생, 공정경쟁질서 확립 필요성 증대

◇ 그간의 성과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
- 방송사업 소유·겸영규제 완화,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을 통해 방송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
- SO-PP간 콘텐츠 거래 가이드라인, 방송사와 제작사간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 합의 등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중점 추진내용

- 신규 방송서비스·MVNO·인터넷 비즈니스 등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시장경쟁 활성화

기 본 방 향

- 기업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 방송시장에 금지행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규제기반을 마련
- 대중소 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중기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상생협력 환경 조성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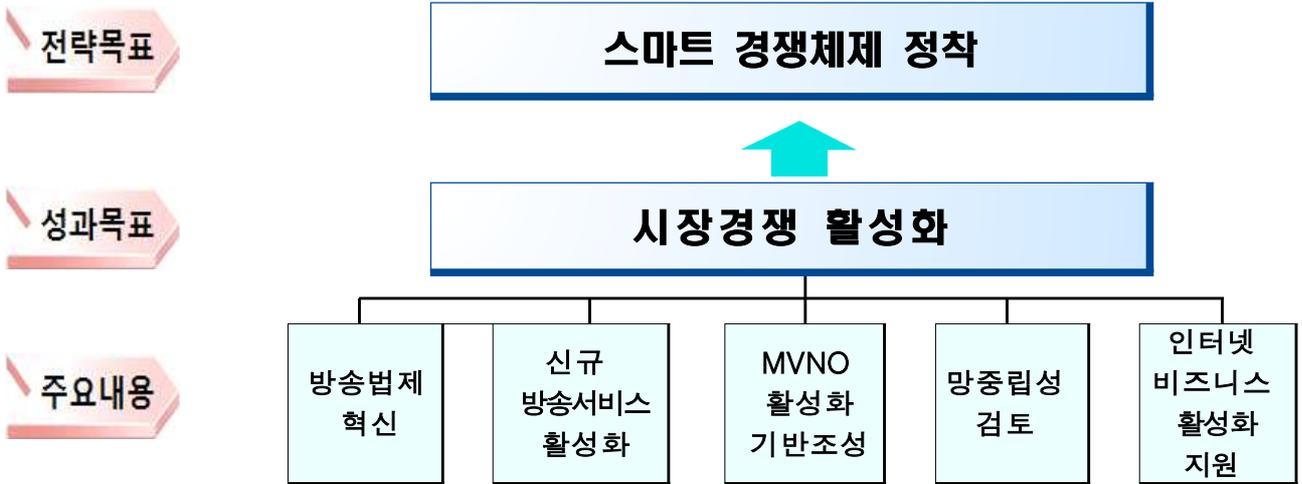
- 시장경쟁 활성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 경쟁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건설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략목표 II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4	'15
II-1. 시장경쟁 활성화						
①방송서비스산업 매출액(조원)	9.2	9.5	9.8	10.0	10.3	10.6
②통합방송법 제정 추진율	신규	70%	100%	-	-	-
II-2.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①방송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건수	5	5	5	5	5	5
②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개선건수	3	4	4	4	4	4
II-3. 상생협력 환경 조성						
①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이행률	신규	신규	100	100	100	100
①SO재허가 조건 이행률 (수신료의 25%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99	100	100	100	100	100

(1) 주요내용

- 스마트TV 시대를 대비해 방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법제 선진화 추진
-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성공적인 방송 개시를 위해 경쟁상황 평가 및 규제 수준 정비
 - 종합편성·보도전문 PP 선정 후 방송사업 승인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 MVNO의 원활한 시장진입 및 혁신적인 신규 데이터 서비스 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
-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제공·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소셜플랫폼기반의 새로운 소통(Social Browser, Social KMS 등) 및 비즈니스(소셜커머스, 소셜게임) 인프라로서의 소셜 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추진
- 신 인터넷광고시장 개척 및 인터넷광고 유통구조 선진화, 건전한 인터넷광고 이용기반 조성을 통해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완전한 한글 국가도메인(.한국) 도입을 통한 인터넷이용자 편의 증진과 차세대인터넷주소(IPv6)로의 전환 본격화



(2) 세부 추진계획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방송법제 혁신

-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위해 방송법, IPTV법 등을 포괄하는 방송분야 단일법제 제정
 - ‘방송’의 정의, 사업자 분류체계, 인허가 체계 등을 포함한 방송사업법 체계로 개편
 - 전광판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기존의 유사방송과 신기술·서비스 도입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유사방송 규제 체계 마련
 - 콘텐츠 동등 접근 등 방송사업의 공정경쟁 제도 도입
-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미디어기업 출현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구역 확대 및 M&A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송 분야의 소유·경영 규제 개선

- 방송플랫폼 시장, 방송프로그램 시장 등 개별 시장별로 수평적 규제 적용
- 플랫폼사업자 및 채널사업자 결합규제, 방송시장 전체 매출액 총액 규제 등을 개선
- 중복규제 및 SO 방송구역 수 제한 등 현 시장 상황에 불필요한 규제 폐지
-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 역량 확대 및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사업범위 제한 완화 추진

□ 신규 방송서비스 활성화

- 신규 종편·보도 PP에 대한 승인장 교부 등 후속 절차 진행 및 방송사업 운영 개시
 - 시청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시장안착을 위한 방안 검토
-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 방송채널 거래시장,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시장 등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
- 지상파 다채널 방송서비스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
 - 지상파 다채널 방송서비스의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필요시 지상파 다채널 방송서비스의 운영주체, 면허방식, 채널

구성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

□ MVNO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마련
 - 이통사의 데이터망을 활용한 신규서비스 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전용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
- 다량구매할인을 산정기준 마련 및 적용여부 검토
 - 이통사와 MVNO간 협의를 통해 다량구매할인을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적용여부를 검토

□ 망 중립성 정책방안 검토

-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 관리권한 부여 여부 및 인정범위 검토
 - 스마트폰, 스마트TV, 클라우드컴퓨팅 등 신규 융합서비스 등장으로 고품질·고용량 전송대역 보장(QoS)이 요구
 - 신규 서비스의 전송 용량과 품질을 보장하면서 ISP사업자에게 유해 트래픽 등의 합법적·경제적 트래픽 관리권한 부여 검토
 - ※ QoS(Quality of Service) : 다른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데이터 흐름의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데이터전송에 특정 수준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능력
- 네트워크 사업자의 투명한 망 관리 방안 마련
 -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이용자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비스제공·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 촉진) 새로운 소통 및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소셜플랫폼기반 서비스의 생산적 활용 촉진
 -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
 - 이용자 맞춤형 실시간 검색기술, 정보의 신뢰성 분석기술 등 차세대 소셜플랫폼 구현 기술 연구
 - 소셜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경제적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연구

- (정보의 개방 및 공유) 풍부한 공공·민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산업적 가치 확대생산을 위한 기초적인 활용 기반 마련
 - 산·학·연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계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분기별·지역별 교육 추진
 - 인터넷 기술 및 이용패턴의 변화에 대한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해 산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소통체계 마련
 - 인터넷 관련 정보활용에 대한 일반인의 참여와 전문가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개방형 상시 포럼 개최

- (모바일 창업지원) 모바일 창업지원을 위해 앱개발자 및 창업자 지원 강화
 - 모바일 앱개발자를 위한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smac.or.kr) 고도화, 위치기반서비스(LBS) 지원 강화
 - 스마트 모바일 창업자 애로상담, 위치기반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사업화 지원

- (인터넷광고 활성화) 인터넷광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체계 구축
 - 인터넷광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진흥협회(KIAA)' 설립 및 거래 선진화 가이드라인·표준규약을 제정하고,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인터넷광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성·운영
 - 국내 광고플랫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망 인터넷광고 플랫폼 인증 및 신유형 인터넷광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인터넷광고 비즈니스 지원센터' 구축
 - 인터넷광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광고 제작 가이드북 및 자문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여 공정경쟁환경을 조성
- (IPv6전환 본격화) 현행 인터넷주소(IPv4) 신규할당 중지 및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로의 전환 본격화, ISP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
- 완전한 한글 인터넷주소(예, 방통위.한국) 사용이 가능한 한글 국가도메인 서비스 개시
- 제3차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3개년('12~'14) 기본계획 수립('11.하반기)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통합 방송법의 제정은 정부(안) 마련 이후 국회 입법과정에 의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도입되고, 방송사업자 간 M&A가 증가하는 등 방송시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본격화
- 도매제공 제도정비에 따라 신규 MVNO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 세계는 스마트 폰 확산 등에 따라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으며 mVoIP, 스마트TV 등 신규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상의 트래픽 증가현상은 가속화될 전망
-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플랫폼을 이용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부재
 - 해외와 달리 국내는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이후 혁신적인 신규 인터넷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 인터넷광고는 지난 5년간 평균 30% 성장하여 주요 3대 광고 매체로 도약하였으며, 인터넷광고 글로벌 기업들은 앞선 광고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력을 강화
- 인터넷주소 할당기구(IANA, APNIC)에서 IPv4 신규 할당종료가 '11년도 상반기로 가시화되어 IPv6로의 전환 본격화되고, 국제 인터넷 자원관리기구(ICANN)로부터의 한글 국가도메인(.한국) 승인에 따라 완전한 한글 도메인 서비스 시행

□ 갈등요인

- 통합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소유·겸영규제는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정 내용에 대해 각 사업자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대립을 보일 수 있음

- 신규 방송사업자 도입에 따라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자의 반발이 예상
 - 기존 방송사업자는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신규 방송사업자가 도입될 경우 자신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 이통사는 소매요금에서 31% ~ 44%를 할인하여 도매제공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MVNO를 위해 더 이상 추가적인 할인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MVNO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요금인하를 위해 추가적인 할인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 유·무선인터넷상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여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을 통과하는 트래픽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과, 개방성·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네트워크 사업자는 자신의 망을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음
- 국내 인터넷 시장은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포털사 중심의 서비스가 일반적이며, 중소 인터넷기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은 저조
- 국내 광고시장의 성장 정체, 유통구조 및 자율정화 기반 미비 등은 인터넷광고 신시장 개척 및 광고 신뢰성을 저해

(4)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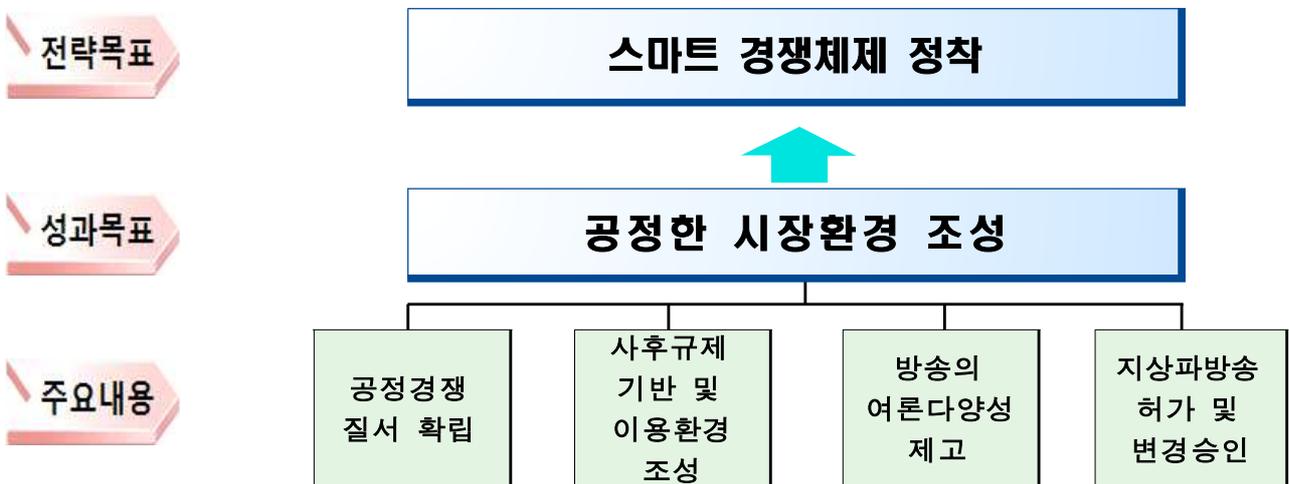
- 방송법시행령상 소유·겸영규제 현황

주체 대상	지상파	SO	위성	PP
지상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소유 : 7% ○ 쌍방소유 : 5% ○ 사업자수 : 10% (DMB제외) 	○ 33%(주식)	-	-
지상파 DMB	○ 권역별 사업자수 - 3-5(1/3), 6이상(1/5)	○ 33%(주식)	-	-
SO	33%(주식)	1/3(가입가구), 1/3(구역)	33%(주식)	1/3(구역)
위성	33%(주식)	-	33%(주식), 1개(사업자수)	-
PP	TV·R·D PP 별로 각 3%(사업자수), 6개 미만(6개 까지)	TV·R·D PP 별로 각 1/5 (사업자수)	TV·R·D PP 별로 각 1/5 (사업자수)	33% (매출액, 홈쇼핑 제외)

※ 특정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는 전체방송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 이내

(1) 주요내용

- 기업간 불공정 거래 및 이용자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정경쟁 효과 및 이용자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사 및 실태점검 전개
- 방송통신사업자가 회계정리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 등 투명한 회계정리를 통한 방송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이익 보호
- 방송시장에 새로운 규제수단 도입, 불공정행위 처리절차 기준 제시, 방송통신서비스 동향분석 및 조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방송통신시장의 사후규제 등 이용환경 기반 조성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 방송의 여론 다양성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 '11년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FM방송국과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신규 FM라디오 방송국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질서확립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단말기보조금 및 경품을 지급하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제재 강화
- 이통사와 CP간의 콘텐츠 거래, 통신사업자의 결합서비스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

○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

- 이통사의 요금연체 관리 등 사회적인 문제나 지속적으로 다중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한 집중적 감시 및 제도 개선

○ 방송통신사업자 회계검증을 통한 서비스 간 내부보조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 통신·IPTV사업자 등의 영업보고서 검증 및 관련 사업자 교육과 회계분리기준 해설서 발간

□ 방송통신 사후규제 기반 및 이용환경 조성

○ 방송시장의 금지행위 규제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 방송법 금지행위 도입을 위해 '금지행위 연구반' 구성·운영

○ 사업자 불공정행위의 처리절차·기준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 제정

-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피해금액이 구체적 산출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정조치 전 이용자에게 배상조치한 사업자에 대해 기 배상금액만큼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 등 검토
- 방송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 국내·외 사후규제 동향 관련 분석 보고서 발간
- 방송통신 관련 조사인력 역량강화
 - 법제도·조사실무 등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 및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 유료방송시장의 과오납금에 대한 이용자 환급추진

□ 방송의 여론 다양성 제고

- 시청점유율 조사 체제의 안정화 및 조사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조사기관 선정 및 조사 실시
-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을 산정하고
 -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사업자 허가심사 반영 및 시청점유율 제한규제(30%) 위반사업자 제재조치 실시
- 매체속성 등에 관한 전문가 및 수용자 조사를 통해 가중치 지표를 확정하고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마련

□ 지상파방송 허가 및 변경승인

-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FM방송국과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추진
 - ※ 지상파라디오 : 경인FM, 아리랑제주FM, 제주FM, 부산영어FM, 광주영어FM
 - ※ 공동체라디오 : 공주, 분당, 광주, 성서, 관악, 마포, 영주
- 신규 FM라디오 방송국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및 허가 추진
-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MBC 광역화에 따른 변경허가
- (주)경인방송 및 (주)경기방송의 현 최대액출자자의 소유제한 위반 해소를 위한 최대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 추진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방송통신시장은 가입자 포화로 인해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이 심해지고, 다양한 결합서비스 출시 및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 촉진으로 불공정행위 유형이 복잡·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
-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회계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매출액 3/100 이하 과징금)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0.9.22 시행)
- 방송통신시장의 과열경쟁으로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사례가 점차 복잡·다양화되는 등 국내·외 시장환경 급변
 - 그 동안 방송시장의 각종 규제와 관련하여 일반 규제기관인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 상존

- 방송시장의 금지행위 입법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국회 정치적 상황으로 법령 개정 지연
- 지상파 및 종합유선방송 등 다수의 방송사업자에 이어 최근 종편·보도PP 사업자의 등장으로 사업자 간 경쟁심화(예상)
-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실외·이동 시청행태 증가 등의 방송 시청환경이 변화되고, 방송매체의 증가와 매체간 융합 가속화에 따라 사업자 구도가 복잡해지고 콘텐츠 영향력의 전이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

□ 갈등요인

-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심화로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및 경품 제공 등의 불공정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상존
- 회계 법령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반발 요인 내재
- 그간 통신시장은 시장감시, 시정조치 등 불공정행위 포착 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반면 방송시장은 금지행위 제재 관련 조항이 없어 방송시장 질서 유지에 대한 대응 미흡
 - ※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는 일반규제기관인 공정위 협의 등을 통해 단일 법안으로 국회 제출되었으나 국회 정치상황 등으로 입법 지연
- 복수의 시청률 조사기관이 존재하고 있어 시청점유율 조사기관 선정과정에서 방통위에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이 높음

(4)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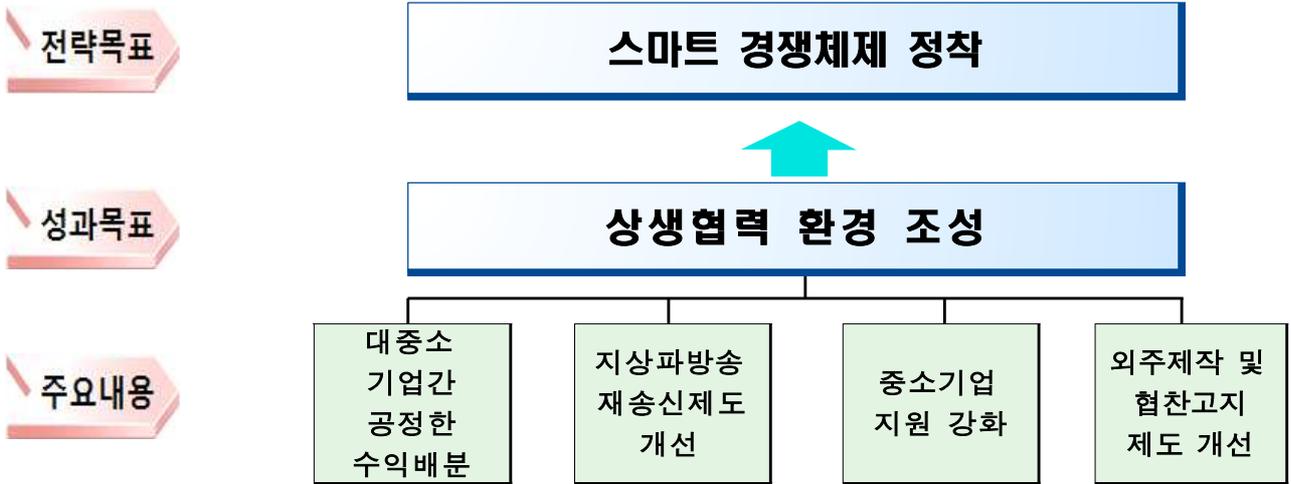
- '10년 시청점유율 조사 패널 확대 현황

구분	기존(TNmS)	2010년		
		10월	11월	12월
패널가구	2,000가구	2,500가구 이상	3,000가구 이상	3,300가구 이상

※ '10년 8월에 시청점유율 조사기관을 선정해 10월부터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했으며, '10년도 패널가구 확대 목표는 3,000가구 이상이었습니다.

(1) 주요내용

-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와 CP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지급대상 및 적정 지급비율에 대한 기준을 개선
 -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방송환경의 변화 및 재송신 관련 사업자간 분쟁 발생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분쟁해결 절차 보완 등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의 개선을 추진
 - 통신분야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 강화 유도
 -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합리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 중소기업의 스마트모바일오피스(SMO:Smart Mobile Office)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생산적 활용을 위한 지원
- ※ SMO(Smart Mobile Office)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형 고성능 네트워크 기기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
- 외주제작 및 협찬고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2) 세부 추진계획

□ 대·중소 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

- 콘텐츠사업자(CP)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CP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이통사 앱스토어와 CP간 판매수익 배분문제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
- SO의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적 점검
 - SO 재허가 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급실적이 미진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 ※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 전체에 대해 수신료 수익의 25%를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
- SO-PP간 수익배분 기준 개선안 마련
 - 「SO-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현행 25%)과 대상(VOD 포함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도출된 적정 비율을 최초 조건을 부여한 이후 재허가가 다시 도래하는 SO에게 적용

□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 '10년도 정책 연구과제 및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필요한 실무적 정비사항 검토
- (의무재송신 채널범위 재설정)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의무 재송신 채널범위(현재 KBS1, EBS) 재설정 추진
- (분쟁해결 절차 보완) 재송신 분쟁 발생 시 실효적인 해결 수단을 갖추기 위해 현행의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통신사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 강화 유도
 - 통신3사 용·투자 규모 : 4,400억원('10년) → 5,100억원('11년 예상)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
- 중소기업의 SMO 도입 촉진 및 생산적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SMO의 원활한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SMO 도입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하고, SMO 도입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기업 내 SMO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모바일 생산성 지수'를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SMO 도입 및 고도화 방향성 제시

※ 모바일 생산성 지수(MPI: Mobile Productivity Index) : SMO 적용 기업의 경영 효율화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체계(예: 고객만족도, 업무생산성, 총소요비용 등)

□ 외주제작 및 협찬고지 제도 개선

(외주제작 제도 개선)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상생협의회 구성을 통해 영세한 非드라마 제작사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활성화를 촉진
 - 기존 다큐 등 非드라마 분야에서 미사용된 촬영분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非드라마 제작사의 자립기반 확충
- 방송3사와 드라마 제작사가 합의한 '지급보증보험 가입'등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
- 외주제작비율을 드라마, 非드라마 등 장르별로 조정하여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
- 기획·연출 등 제작요소 투입 정도를 반영한 외주제작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 육성

(협찬고지 제도 개선)

- 방송사 자체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 외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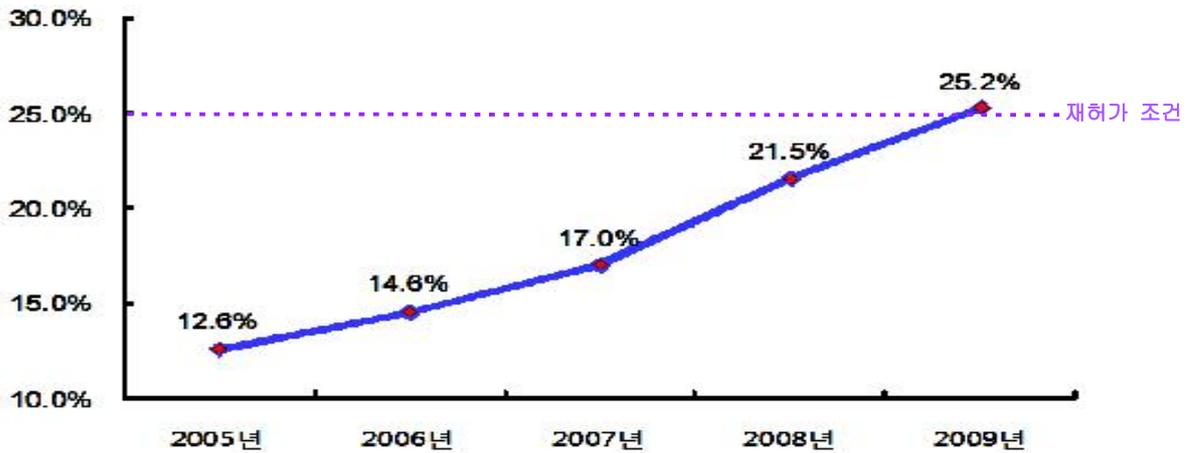
-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이 문화부의 모바일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와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어 부처간 협의 필요
- '08년 이후 PP 프로그램사용료를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 지급하도록 SO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 PP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총액이 증가
 - 그러나, 디지털 전환에 따른 VOD 지급비용 확대 등에 따라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대상을 비롯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
- 국민의 시청권 침해 우려, 지상파방송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행위,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저해 등의 문제 발생
-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합리적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PP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국회, 관계부처 등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스마트폰 확산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세에 따라 최근 통신 시장은 기기·콘텐츠·네트워크 등 개별 산업간 경쟁에서 생태계 경쟁으로 경쟁구도가 전환하는 추세
 - 국내 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이 필수적 요소가 됨
- 외주제작 제도는 국내 영상산업진흥과 방송사의 자율편성권 제한이라는 양면적 특성이 있어 제도정비에 어려움이 예상

□ 갈등요인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통사의 소극적인 참여로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존재
- 계약방식과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이 상이한 일부 PP(VOD, 유료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SO, PP 간 이견이 제기
- 유료방송사와 지상파사 간 분쟁발생 및 유료방송시장 수익의 지상파방송으로 이전 등의 문제발생
- 중소기업계는 기존 홈쇼핑 채널로는 판로가 부족하고, 홈쇼핑 채널을 이용이 쉽지 않으며, 기존 홈쇼핑 PP의 거래관행도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지속 제기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혜적 차원으로 인식할 경우 확산되기 어렵고, 급변하는 통신 생태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 필요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의 분쟁 및 관계부처 간 업무영역 충돌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 발생의 여지가 있음

(4) 참고자료

- 모바일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 추이
 -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제정('09.6월) 이후 전체 정보이용료 매출 중 CP 배분 비율이 개선되는 추세('08년 72.6%→'09년 82.1%→'10년 84.1%)
-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비율 추이



○ 국내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비교

국가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 EBS를 의무 재송신 -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음 ○ 이외의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의 경우는 승인 필요 - 신청 주체 : 수도권 SO 우선 적용 - 신청 대상 :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방송 ※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지상파방송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1, EBS를 의무 재송신 -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음 ○ 이외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경우는 승인 필요 - 승인 조건 : 지상파방송의 권역별 재송신(local into loca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방송사가 선택권을 가짐 - 의무 재송신(must-carry)과 자율계약(retransmission consent) 중 하나를 선택 ※ 협상력이 약한 지역방송은 의무재송신을, 협상력이 강한 지역방송은 자율계약을 선택하는 경향 ○ 의무 재송신(must-carry) 선택시 - 케이블방송사는 지상파방송 채널을 수용, 지상파방송사는 보상 요구를 못함 ※ 공영방송은 must-carry만 적용 ○ 자율계약(retransmission consent) 선택시 - 당사자간 협상 성공의 경우, 보상협약에 따라 지불 및 재송신 - 협상 실패의 경우, 재송신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재송신(local into local)이 원칙 - 권역 내 하나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권역 내 모든 지상파방송을 재송신(carry one Carry All)해야 함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재송신 채널을 지정(BBC1, BBC2, 채널 4, ITV1, Five)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음 ○ 시청기회 확대를 위해 역외재송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규제가 없고 당사자 협의에 의해 15개 방송권역을 광역화하여 4개 권역(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으로 재송신

국가	케이블 방송	위성 방송
독일	○ 모든 지역 및 전국의 공영방송을 의무재송신	○ 처음부터 전국방송이 실시
일본	○ 재송신을 법적으로 규제 - 지상파 난시청 지역의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 - 이외는 지상파방송사로부터 동의, 저작권이 적용	○ 재송신 관련 규제 없음 - 스카이퍼펙TV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하지 않음

○ 홈쇼핑 PP 현황

○ TV홈쇼핑 PP는 방송법 상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서 현재 5개 사업자가 운영 중

법 인 명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최대주주	(주)GS	CJ(주)	(주)현대백화점	롯데쇼핑(주)	(주)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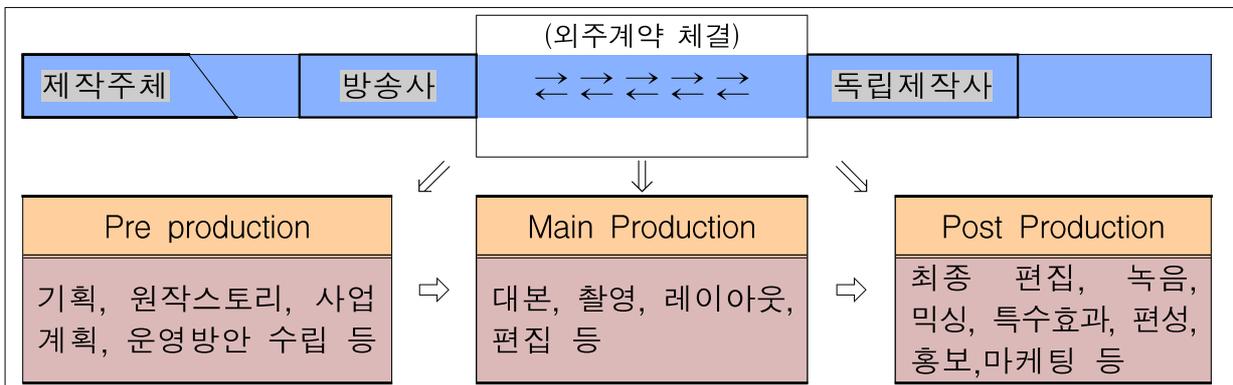
○ 승인제 하에서 홈쇼핑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03~'09년까지 매출은 1.9배, 영업이익은 7.5배)하였고, 수익 구조가 양호

- 매출액 '03년 1조3,679억→'09년 2조5,622억원, 영업이익 598억→ 4,502억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 주체 및 제작형태

제작주체	제작형태
방송사업자(지상파, PP, SO, 위성, 공동체라디오)	자체제작 프로그램
독립제작사	외주제작 프로그램

<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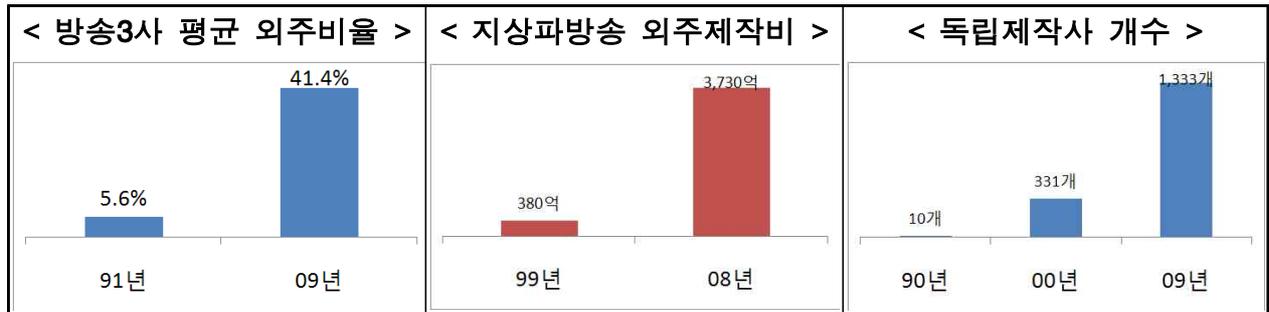
법 제도		협찬고지	간접광고	방송분쟁조정	심의책임
	외주제작 프로그램		○	×	×
자체제작 프로그램		×	○	○	○

○ 외주제작 관련 현황

< 방송사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

구분	KBS2	MBC	SBS	KBS1	EBS
의무 편성비율	40%	35%	35%	24%	20%
실 편성비율	51.8%	49.8%	47.3%	27.3%	20.8%

※ 실 편성비율 조사기간 : 2010.1~2010. 6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시대에는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등의 확산과 함께 이용자가 콘텐츠 창출·분배·소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환경이 조성
- ICT기술을 접목한 사회 전분야의 스마트화 촉진시키고, 국민 모두가 유익한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는 환경 필요

◇ 그간의 성과

- 대규모 DDoS 공격에 대한 대응, 불법스팸방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인터넷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 가입비 및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초당 과금방식 도입 등을 통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과도한 경품 등 시장에서의 이용자 차별행위 시정하는 한편,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
- EBS를 통한 공교육 보완을 지원하고,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및 방송언어교육 등을 통해 품격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

◇ 중점 추진내용

- 해킹·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 스팸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인터넷 사회 구현 추진

기 본 방 향

-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방송통신 이용자에 대한 권익증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따뜻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 KBS 및 EBS의 공적기능을 증진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하는 한편, 스마트워크 확산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방송통신의 사회적 역할 제고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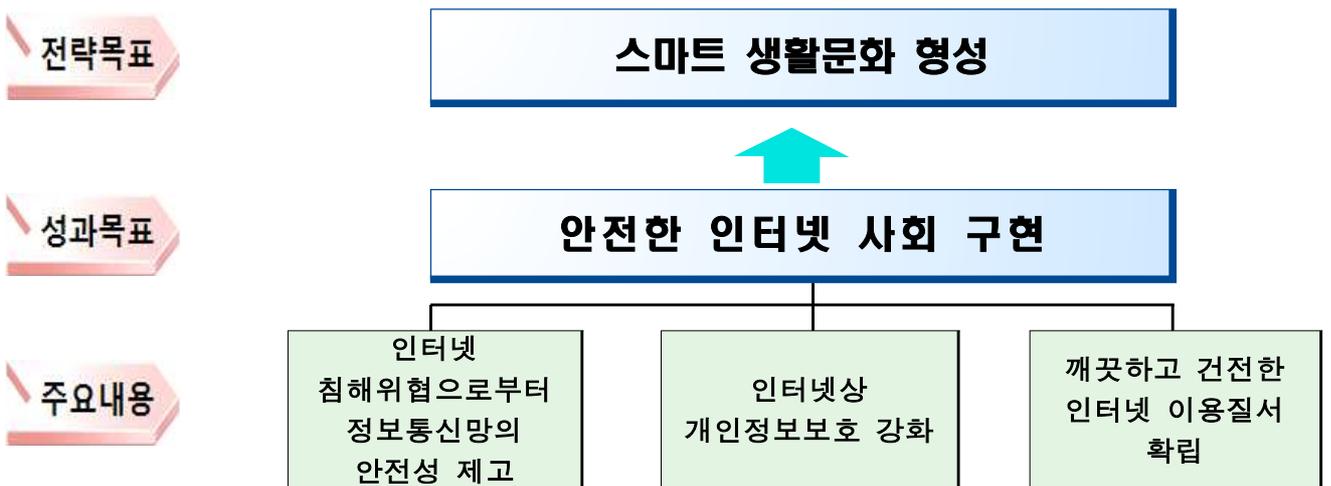
- 안전한 인터넷 사회 구현, 이용자 편익제고 및 보호강화, 방송통신의 사회적 역할 제고 등을 통해 보다 성숙하고 스마트한 생활문화를 선도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건설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략목표 Ⅲ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4	'15
Ⅲ-1. 안전한 인터넷 사회 구현						
①정보보호지수	80.5	81	81.5	82.0	82.5	83.0
②보안서버 민간 보급 대수	51,064	57,000	59,000	61,000	63,000	65,000
Ⅲ-2. 이용자 편익제고 및 보호 강화						
①이통사 통신요금 인하액(조원)	2.69	3	3.3	3.6	3.9	4.4
②방송수신기 누적 보급률	14	14.5	15.6	16.7	17.8	18.9
Ⅲ-3. 방송통신의 사회적 역할 제고						
①방송언어 및 저품격 드라마 제재율	신규	63	60	57	54	51

(1) 주요내용

- 안전한 인터넷사회 구현을 위해 해킹·DDoS 등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비하고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새로운 단말기기의 보안위협 대응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의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를 통해 사전적 예방체제에 주력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제 구축으로 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LBS 사업 진흥 및 위치정보 보호의 토대 마련
- 스팸전송 경로의 다양화, 명예 훼손성 악성 댓글 및 불법유해 정보 유통 등 정보통신망상의 다양한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및 예방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2) 세부 추진계획

- 인터넷 침해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제고

- 사이버 공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ISP, 백신업체, 이통사 및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모의훈련 강화
- 악성 프로그램 유포, DDoS 공격, 해킹 등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는 좀비PC 확산 방지
 -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PC가 신고·적발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감염PC 알림 및 백신 치료체계' 가동
 - 국가 사이버 위기시, 사이버공격 수단으로 동원된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차단 등 좀비PC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악성코드 일일점검 대상 웹사이트를 현재 100만개 수준에서 국내 전체 웹사이트(180여만개)로 확대
 - DDoS 방어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버 긴급대피소' 운영
- ※ DDoS 공격 트래픽은 분류·차단하고, 정상적인 트래픽만 전달
- 인터넷 사업자간 연동망에 대해 DDoS 탐지 및 차단 시스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침해사고위협 관련 신속대응력 제고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신규 단말기기 보급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보안위협 대응역량 강화
 - 스마트폰 백신 이용 안내서 보급, 스마트폰 보안상태 이용자 자가 점검도구 개발·배포 등 보안위협 대응능력 강화
-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불법유해정보 방지 등 안전한 인터넷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인력·조직 보강 추진

- 국민들에게 친숙한 TV,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보호 예보·홍보 활동 다각화
- 유·무선 환경에서의 악성코드 및 취약점에 대한 분석기술 확보와 신·변종 악성코드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침해사고대응역량 공동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APCERT 연례총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 및 국가간 침해사고 대응 협력체계 강화
- 인터넷전화(VoIP),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기술지원 강화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취득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인 인증 취득 환경 조성
- 방통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강화를 통해 관리기관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강화

- 이용자의 행태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등 향후 인터넷 기반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정책방안 마련
 - 현행 법률에 따른 이용자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활용 방식·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준 제시

- LBS 허가·신고 지원 및 일괄처리 등 사업자 지원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을 위한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 설치·운영
-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서비스활성화 간 조화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적용방안 연구, 해외기업에 대한 국내 규범 준수 유도
- 개인정보보호 교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교육,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교실 운영
-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 최소화 일원으로 아이핀 전환 캠페인 실시
-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시스템을 통해 웹사이트 상에 노출된 정보를 신속히 탐지·삭제하여 2·3차 피해 예방

□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 (스팸 최소화) 불법스팸 최소화를 위한 방지체계 구축 및 관리 감독 강화
 - 학계 및 유관기관·사업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팸방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사업자(휴대전화·이메일)의 스팸유통량 분석·공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스팸 유통량 파악 및 동향 분석을 위한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분석체계 구축
 - 이동전화 대리점/판매점의 가입 신청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준수여부 상시적으로 관리·감독 강화
 - 이통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 확대를 위해 계층별(초등학생 이하, 중·고등학생이하, 일반이용자)일괄·기본 가입추진
 - 초고속인터넷 대역 이메일 발송포트 차단

- 스팸 게시글 실시간 차단서비스 개발·제공
- 신규서비스 광고유형 조사 및 스팸대응방안 연구
- (인터넷 윤리교육 및 홍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 및 홍보의 체계적 추진
 - 전국 3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장·단기 인터넷윤리 교육 및 창의적 재량 학습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포털사 및 교육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인터넷 윤리의식 자가 진단 서비스 이용자 확대 모색
 - 초·중학생의 학부모 및 교사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 인터넷 윤리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사 대상 교육 실시
 - 단순한 TV 송출을 탈피하여 주요 포털사 연계 광고,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인터넷 윤리 홍보 추진
 - 「아름다운 인터넷 만들기 세상」 주간 행사의 연례화하여 인터넷 윤리 대토론회 및 각종 캠페인을 범국민적 문화행사로 추진
-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도박, 범죄 모방 정보 등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에 대한 대응 강화
 -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을 대상으로 불법유해 정보를 유포하는 웹사이트 차단 기술개발 등 해외 불법유해 사이트 대응 강화
 - 소셜플랫폼에서의 부정확한 정보확산 방지를 위한 자정체계 연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행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자 책임성 제고

- ISP사업자 대상 URL차단장비 운영실태 점검, 차단 미이행 시 행정지도 실시 및 신종 우회기술 파악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스틱스넷 등 신규출현 악성코드 수의 급증 등 사이버 위협환경이 부피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네트워크 및 사용자 전반에 걸친 대응체계 강화 필요
- 스마트폰 등 개인 단말기기 성능의 발전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로 DDoS 공격의 파급력과 위협이 크게 증가
-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매체(스마트폰, 스마트TV 등)가 확대 되고, 수집·활용되는 개인정보도 기존 신상정보 위주에서 기기 정보, 위치정보, 개인행태정보 등 다양화 추세
- 스팸의 주요 전송경로에 대해 규제와 대응을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느슨한 다른 경로를 통해 스팸전송이 증가하는 문제 반복
- 최근의 악성 스팸은 대포폰, 해킹 등 다른 불법행위와 연계 하여 이뤄짐에 따라, 발송자 추적 및 규제가 용이하지 않음
- 불법유해정보 심의·시정요구 등 공적 영역의 노력에 비례 하는 포털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 및 정보이용자들의 책임 의식과 의식수준 향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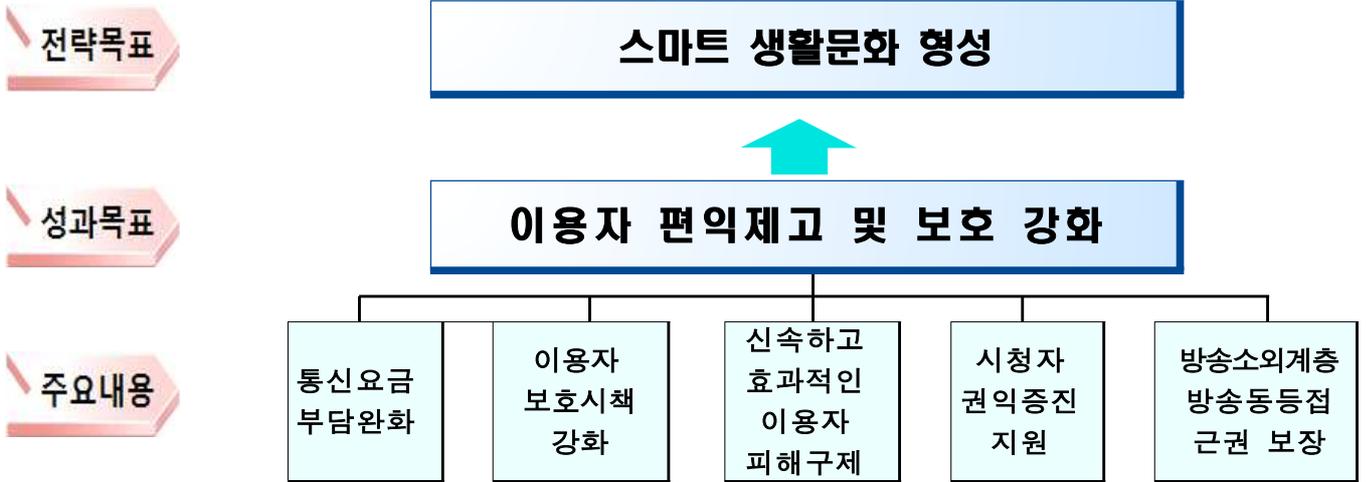
-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유해정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기관과 협력과 인터넷 윤리 교육 등의 필요성 대두

□ 갈등요인

- 좀비PC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 악성코드 전용백신 제작 및 보급 사업 추진시 민간 사업자 영역 침범 제기나 불만이 있을 수 있음
- 새로운 글로벌 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국내법규와의 충돌 등 갈등 발생
- 스팸 발송경로 봉쇄 및 스팸 차단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일부 네트워크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소극적임
-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기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처에는 한계
- 국내 실정법에 의거하여 규제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 발생

(1) 주요내용

- 이용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통신요금 부담 완화 추진
-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조치와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스마트폰 통화 끊김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품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음성통화 품질평가 수행
- 방송·통신 분쟁조정 시 역할을 강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방송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확대,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미디어교육 및 시청자 불만처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방송의 공공성 확보
-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을 위해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방송접근권 보장



(2) 세부 추진계획

□ 통신요금 부담 완화

-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무료음성통화량을 확대하여 실질적 요금인하 유도
- 이용료 인하, 문자메시지 확대 등 청소년·노인층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유도
- 이동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불요금제에 대한 인지도 및 가입 의사, 불편사항 등을 설문조사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불요금제 활성화 계획 마련
- 인터넷전화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번호이동 기술방식 변경
 - 영상통화 및 사진·동영상 문자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인터넷전화에서 가능하도록 유선전화 번호이동 기술방식 변경

□ 이용자 보호 시책 강화

- 통신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이용자 권익침해 등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추진

-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및 언론 이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용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개선

○ 스마트폰 품질향상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인구밀집지역, 외곽지역 및 주요도로 등을 측정·분석하여 통신망·단말기에 대한 품질저하 원인 분석
- 스마트폰 자체, 스마트폰과 일반폰의 품질측정을 통해 스마트폰 품질수준 파악
- 이용자 수 증가와 정차·이동 시 통화불량 현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품질측정을 수행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검증을 통하여 통화품질 문제 원인도출과 대책 마련

○ 통신과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이용자보호수준 평가방안을 마련

□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 방송통신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사업자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평가 종합계획 마련 및 평가 실시
 -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및 '민원 Q&A 집중 등록기간' 운영(2월)
 - 방송통신CS센터 접수 민원처리결과 분석(매월), 서비스별/유형별 민원동향을 분석 발표(연 2회)
 - 사업자의 민원처리 실태점검(6월), '방송통신민원협의회' 개최를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민원처리 향상을 유도

-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중재와
알선으로 사건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60일→54일)
-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
 - 전기통신사업자 및 IPTV 사업자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추진
 -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칭)로 개편
하여 통신재정과 방송분쟁 조정을 통합 운영하는 법안 마련
- 국제분쟁조정기구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고, 분쟁조정제도 현황과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국제방
송분쟁 포럼 개최
- 해외 방송통신분쟁 동향 분석을 위한 「방송통신 분쟁 이슈
리포트」 발간, 관련 사업자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현장 채널을
통한 이용자 피해 동향 파악

□ 시청자권익증진 지원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을 통한 시청자 권익증진향상
 - 참여프로그램 방송채택료 중복지급을 사전 예방을 위한 중복
검증시스템 구축
 - 시청자 방송참여 확대를 위하여 방송매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와 매칭으로 참여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연중)
- 시청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활성화 추진
 - 미디어교육,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및 방송통신 정책 홍보 등의 사업 추진(연중)

- 다문화가정의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미디어교육 교재 다국어 서비스 및 해외 미디어교육 교재 번역사업 지원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현장점검 및 상시 방송민원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청자 불만을 확인
- 확인된 시청자불만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로 시청자의 불만을 최소화(연중)

□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통한 방송접근권 향상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련고시 제정
- 시청각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방송수신기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급(연중)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이용자가 저렴하게 스마트폰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의 네트워크 보완 및 확충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사전규제 완화 및 사업자 간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유형이 복잡·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
 -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촉진과 시장활력 제고를 위한 사전규제 완화로 인하여 사후규제의 중요성이 증대
 - 통신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투자요구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는 가입자 모집을 위한 소모적 마케팅 경쟁에 많은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
- 스마트폰 음성통화 품질평가 및 개선에 관련 사업자의 자료 제출 등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
- 방송과 통신의 융합, 태블릿·스마트폰의 등장 등 방송통신 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다양한 유형의 민원이 증가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방송환경의 급격한 확대·변화, 다문화가정 및 인구의 노령화 추세 등에 따라 방송소외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지원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체계가 미흡
- 매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수는 각각 5%, 10% 가량 증가하는 반면, 자막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율은 미약
-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확보를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 시청 편의프로그램 제공의무가 방송법(권고조항)과 장애인차별금지법(강제조항)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실효성이 미약

□ 갈등요인

- 통신요금은 기업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위적으로 요금제 출시를 강요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는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요구
 -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는 인터넷전화는 주요 인터넷전화 사업자(KT, SKB, LGU+)가 매출 감소를 우려하여, 적극적인 인터넷전화 마케팅 자제
 - 가입비·기본료가 없는 선불요금제에 대해서도 수익 감소를 우려하여 통신사업자의 적극적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며, 후불요금제의 보편화로 선불요금제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높지 않음
- 사업자 신고 위주의 조사,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처벌 위주의 위반행위 제재방식으로는 불공정행위의 재발 방지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건도 다수 역무가 연관되는 등 복잡·다양해지고 실정
- 스마트폰 통화 끊김 현황을 두고 통신사와 제조사간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루고 있어 품질개선에 적극적인 대처가 힘든 상황
- 방통위 민원의 약 97.2%가 방송통신사업자 민원으로, 1차 사업자에게 제기하였던 민원을 방통위로 2차 접수하여 민원 해소에 어려움 발생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예산 축소에 따른 시청자 및 영세 방송사업자의 불만이 우려
- 시청자 주권에 대한 외부 인지도가 부족하여, 시청자 지원 및 미디어교육 등에 대한 이용자 공감임 부족하고, 시청자 지원시설인 미디어센터 설립지역 이외 시청자들의 역차별 제기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등 방송수신 보조기기의 지원예산 부족으로 방송수신기 보급률이 저조하며,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호 미흡
-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영세한 방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고, 즉시 강제할 경우 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참고자료

□ 인터넷전화 및 선불요금제 가입자 현황

○ 연도별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년말
가입자 (누적)	61만	248만	666만	914만

○ 선불요금제 이용 현황

- '98년 이동전화 3사가 선불요금제를 도입하였으나, 일반고객의 사용보다는 단기 체류 외국인, 신용불량자 등이 주로 이용
- 76.5만 명 (가입자의 1.5%) 가량이 선불요금제를 이용하며, 약 60%가 외국인 명의로 등록됨

※ 선불요금제 가입자 : SKT 39.7만명, KT 7.4만명, LGU+ 29.4만명 ('10.12월)

※ 국내체류외국인은 약 117만명이며, 이 중 단기체류자는 약 25만명 ('09년)

□ 최근 3년간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합계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수	126,572	142,623	179,750	448,945

□ 최근 3년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합계
KBS	편수	89	100	105	294
	집행액	414	416	415	1,245
지역 지상파	편수	65	328	522	915
	집행액	26	145	258	429
SO	편수	1,041	2,074	2,336	5,451
	집행액	734	1,422	1,313	3,469
위성 방송	편수	1,305	833	565	2,703
	집행액	1,399	922	500	2,821
합계	편수	2,500	3,335	3,528	9,363
	집행액	2,573	2,905	2,486	7,964

□ 연도별 시·청각 장애인 증감 추이('05~'11, 출처 :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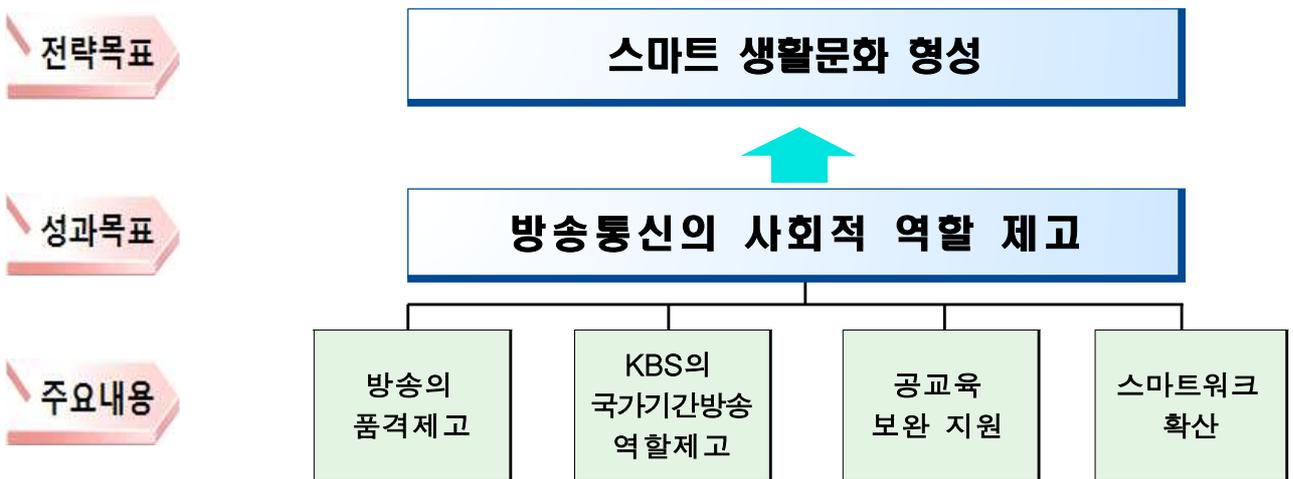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시각장애	189,933	206,151	196,507	228,126	241,237	256,194	272,590
증감율	-	8.5%	-4.7%	16.1%	5.7%	6.4%	5.9%
청각장애	160,565	182,361	203,324	223,102	245,801	273,331	304,217
증감율	-	13.6%	11.5%	9.7%	10.2%	11.2%	10.7%

※ '11년 현황은 '10년 추정치에 '07년~'10년 평균 증가율(시각 5.6%, 청각 10.7%)을 고려하여 산정

(1) 주요내용

- 방송사업자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 및 사후심의 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
-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대국민 공적서비스 확대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고품질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 및 사후심의 시스템 강화 등 추진
 - BBC 트러스트, NHK 경영위원회 등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기구 운영사례를 연구·검토해 국내 도입방안 마련
- 초·중학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스마트폰 등 신규매체를 통한 수능강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사교육비 대폭 경감 추진
-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및 모범사례 확산, 도입·운영 종합안내서 보급 등을 통한 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글로벌 스마트 강국 구현



(2) 세부 추진계획

□ 방송의 품격 제고

- 방송언어 순화를 위해 방송사, 관계부처 등과 국민적 언어순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집방송 프로그램을 제작·방영
 - 방송언어 순화에 기여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및 출연자를 발굴·시상하여 방송언어 순화 분위기를 조성
- 표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심의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하여 자체심의 활용 및 심의기능 효율화 추진
-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격 프로그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심의를 강화
 - 막말, 선정, 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상시 심의를 실시하고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징금 제재 실시

□ KBS의 국가기간방송 역할 제고

-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기구 운영사례 연구·검토 및 국내 도입·제도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 국내 공영방송사 운영현황 파악
- 전국민의 고품질 디지털방송 시청을 위해 디지털방송 수신실태를 조사하고, 공시청 설비개선 및 소출력 중계기 설치 등을 통해 농어촌 등의 난시청 해소 추진
-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격 프로그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KBS의 자체 사후 심의를 강화

□ 공교육 보완지원

- 초·중학 교육기능 강화를 위해 전용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편수 확대
- EBS 수능연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념·원리강의 및 수준별 심화강의 신설 등 수능강의 교육프로그램 제작
- 통신사와 플랫폼에 관계없이 이동 중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신규매체를 통한 수능강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 스마트워크 확산

- (시범사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워크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특화된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형 모델개발 및 이용확대 추진
 -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워크 모델 개발
 - 스마트TV, Giga인터넷 기반 홈 오피스 서비스 모델개발 및 시범적용
- (모범사례 확산) CEO 등 수요자 맞춤형교육, 도입 우수사례 시상 등을 통해 스마트워크 리더 발굴, 모범사례 홍보·전파
- (미래형 선도모델·기술개발) 초고현장감의 미래선도형 스마트워크 모델(Smart-Pot) 등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 (가이드라인 마련) 도입준비 기업을 위한 스마트워크 유형별 준비사항, 조직·업무절차 등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종합안내서 보급
 - 스마트워크 도입 관련 정보유출, 보안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심의 제재건수가 증가하고, 청소년 보호 등 방송관련 타 부처소관 법률 개정 등에 따른 막말 · 저품격 드라마의 제재처분 확대 가능성
- KBS에 대한 관리감독 체제 개선 및 경영효율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존재
- EBS 초·중학 콘텐츠 및 인터넷 서비스가 미흡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반면 사설 인터넷 강의 이용률 증가로 사교육비 절감효과 미비
 - '10.11.18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70% 이상 되었으나 연계난이도가 높아 또 다른 사교육 시장 조장 우려
 - 최근 EBS에서 수능방송용 모바일 앱(App) 서비스(개통일 : '10.5.29)가 특정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만 제공되어 형평성 문제 야기
- 저출산·고령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사회현안 해결을 위하여 스마트워크의 도입 및 확산이 필요
 - 39.2%의 경영자가 모바일 오피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전체 70%가 향후 3년 이내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스마트워크 도입을 희망하는 경영자가 증가하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회원 447명 대상 설문조사(2010. 4월)

□ 갈등요인

- 방송사업자는 방송이 공정 · 공공성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나, 과도한 심의 제재는 오히려 방송프로그램의 수준

제고에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

- KBS의 관리감독 체제 개선은 언론사인 KBS의 독립성 보장 문제와 충돌 가능성 존재
 - 사설 인터넷 강의에서 EBS 보다 풍부한 초·중학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체계적인 학습관리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유도할 가능성
 - 사교육업체는 EBS 교재 개념 분석, 한차원 높은 응용·심화 문제 출제 및 풀이 강의로 침체된 사교육시장 활성화 유도
 - 스마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법·제도 및 글로벌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스마트워크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많음
 - 민간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은 자본과 기술력이 우수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도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자본·기술 등의 이유로 도입율은 낮은 편임
- ※ 국내 기업 모바일오피스 도입률 : 대기업 16.2%, 중소기업 8.1% (전자신문 및 중소기업기술정보화진흥원 공동조사, '10.6월)

(4) 참고자료

□ 방송심의 행정처분 현황

구 분		합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 제재 건수		621	233	388	218
막말 (방송언어)	소 계	46(7.4%)	17(7.3%)	29(7.5%)	30(13.8%)
	사과·중지·징계	10	6	4	7
	주의·경고	36	11	25	23
저품질 (선정·폭력)	소 계	5(0.8%)	1(0.4%)	4(1.0%)	13(6.0%)
	사과·중지·징계	1		1	1
	주의·경고	4	1	3	12

□ 사교육비 및 EBS관련 통계

- 사교육비 규모(2009년말 기준)는 21조 6천억원이고, 그 중 초·중학교는 16조 5천억원(76.4%), 고교는 5조 1천억원(23.6%)
- EBS 사교육비 경감추산액(2010년말 기준)은 1조 299억원이고, 그 중 초·중학교는 3,773억원(36.6%), 고교는 6,526억원(63.4%)임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EBS 사교육비 경감추산액	7,100억원	7,564억원	1조 299억원
- 초등학교	1,086억원	1,328억원	1,350억원
- 중학교	2,522억원	2,285억원	2,423억원
- 고등학교(수능강의사업)	3,492억원	3,951억원	6,526억원

※ '08년 EBS 수능강의 만족도 조사(KEDI)의 사교육비 경감액 산출방식에 따름(연간 동영상 이용건수 × 사교육 강의당 평균값(3,495원))

□ 스마트워크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삶과 일의 균형을 통한 글로벌 스마트 강국 구현

추진 목표

[
'15년 근로자 30%
]
스마트워크 환경조성

- 민간 주도의 투자·개발에 의한 스마트워크 비즈니스 활성화
-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시장확대 등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

2011년 2012년 2015년

추진 과제

중점 과제

범국민 문화확산 및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워크 도입 촉진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1. 스마트워크 문화확산 및 여건조성	4. 스마트워크 확산모델 발굴	7. 정보보호 및 이용편의성 강화
2. 스마트워크 활성화 촉진법 제정	5. 취약계층의 스마트워크 이용 지원	8. 핵심 기술개발 및 표준화
3. 비즈니스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6. 영상커뮤니케이션 활성화	9.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10.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시대를 맞아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실현을 통해 국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방송통신행정의 구현이 필요

◇ 그간의 성과

- 직제개편을 통해 조직을 보다 안정화시키고, 예산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추진
- 총리실 주관 성과평가(정책만족도, 성과관리 수준진단)에서 부단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화
- 대국회 업무협조체계를 공고화하고, 규제개혁과제 및 입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 이슈별 중점·기획홍보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추진하고, 한마음체육행사 개최, 사무실 환경 개선 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중점 추진내용

- 신규 정책수요의 원활한 수행과 조직역량 제고를 위해 직제개편 및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성과관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성과 수준향상 도모

기 본 방 향

-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 결산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취재지원 및 의사운영 효율화 지속 추진
-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해 청렴문화의식을 확산시키고, 인적 자원 적재적소 배치 및 각종 행사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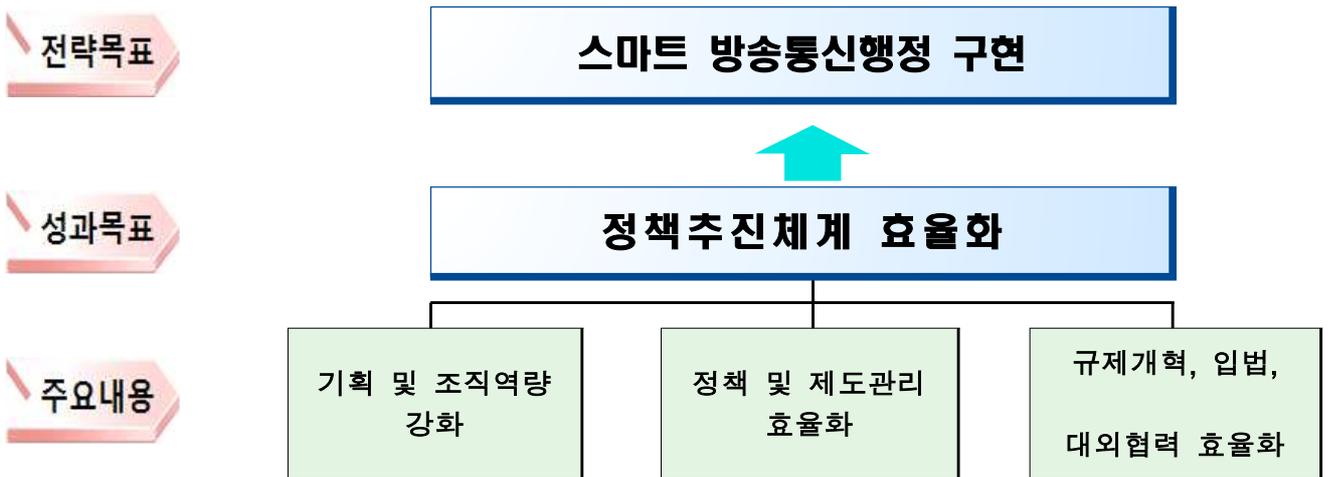
- 정책추진체계 및 정책지원 효율화, 행정지원역량 강화를 통해 보다 스마트 방송통신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건설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전략목표 IV : 성과목표 체계 >

성과목표	실적	목표치				
	'10	'11	'12	'13	'14	'15
IV-1. 정책추진체계 효율화						
①입법적시추진율(%)	100	100	100	100	100	100
IV-2 정책지원 효율화						
①세출구조 조정률(%)	10	10	10	10	10	10
IV-3. 행정지원 역량 강화						
①공공기관 청렴도 지수	8.53	8.54	8.55	8.56	8.57	8.58

(1) 주요내용

- 방송 콘텐츠·광고 등 부처간 업무 조정, 신규 정책수요의 원활한 수행과 조직의 성과향상·역량제고를 위해 관련 전담 부서의 신설 및 인력 확충 추진
- 동향 분석 및 정책소통을 확대하고, 성과관리의 체계적 추진, 행정제도 및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책성과 수준 향상 도모
- 대 국회 정책협력과 법안심사 적기 지원을 통하여 방통위 주요정책의 효과적 시행과, 일반국민, 경제단체, 지자체 및 다른 부처 등에서의 제도개선 건의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2) 세부 추진계획

□ 기획 및 조직의 역량 강화

- 위원회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보고 및 추진실적 점검(연중)
- 대통령 등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 이행실적 점검·관리(분기1회)
- BH, 국무총리 등 유관기관 요구 자료의 작성, 제출(연중)
- 우주전파환경 조사, 인터넷 침해대응 강화 등 신규 정책수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의 확충 추진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따른 중기 인력운영계획('11~'15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소요정원 협의

□ 정책 및 제도 관리 효율화

- 방송통신 동향과 정책수요에 대한 파악과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네트워크와의 소통 및 협력 확대
 - 동향정보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주간 주요동향을 작성·공유하고, 정책이슈 리포트 발간과 내부 정책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
 - 학계·연구기관·산하기관·업계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강연·포럼을 운영하여 현안 대응에 관한 협력 기반 강화
-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 이를 기초로 실적을 관리하고 각종 평가를 수행, 결과를 환류하여 위원회 정책성과 수준 제고
 - 자체평가매뉴얼 등 평가계획을 수립, '특정평가', '자체평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결과에 대한 성과 보상 등 환류 시행
-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통신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대국민 만족도 제고
 - 테마형 제안 공모, 민원 우수사례 공모 등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법정민원 구비서류 감축, 민원사무 온라인화 등을 통한 지속적 제도 개선 추진

-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효과적인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보안업무 고도화

□ 규제개혁, 입법 및 대외협력 효율화

- 정책현안별 정책간담회, 업무설명회 등 국회 상임위 및 사무처와 정책협력과 홍보활동 강화
- 정부입법계획 조기 수립 및 국회 법안심사를 수시 지원을 통하여 방통위 주요정책의 효율적 시행
- 하위법령 정비 및 방통위 관련 타부처 법령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일반국민, 경제단체, 지자체 및 다른 부처 등에서의 제도개선 건의를 검토하여 규제개혁 과제 발굴
- 내실 있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통해 불합리한 신설·강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효율적인 통제를 병행
-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제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등 홍보 독려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긴축 인력 운영, 유동정원제 실시 등 정부의 인력감축 기조 유지
- 스마트폰 확산, 차세대 기술 도입 등 방송통신 정책 환경의 급변에 따라 정책소통의 확대와 정책 성과의 효율성 강화 요구 증가
- 부처간 이해대립 등으로 인해 법령 정비일정에 많은 변수가 있고, 규제개혁의 방향 재정립 및 법령 정비는 관련 방송·통신시장이거나 이용자·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견이 많이 발생함

□ 갈등요인

- 조직의 효율성 제고 및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직제 개정 추진 시 주관/관련부처 및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견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진흥정책 관련 부처간의 소관 문제 및 사업자 등 주체간 갈등 및 분쟁 발생 가능
- 국회일정 등으로 인해 정시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규제 개혁의 경우 기존 규제권한부서와의 이해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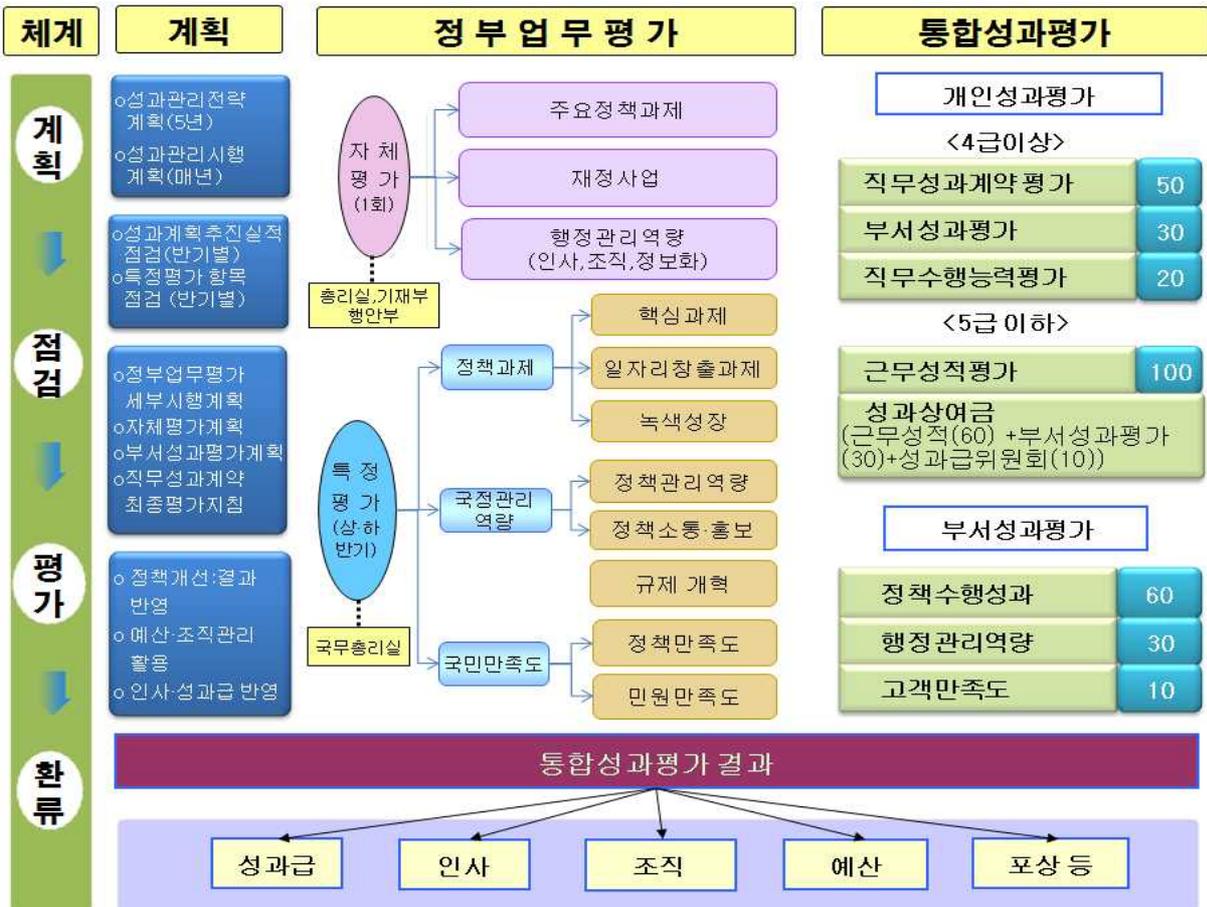
(4) 참고자료

- 직제개정 추진 현황

연 월 일	직 제 개 정 내 역
'08.2.29. 대통령령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08.2.29. 법률 제 8867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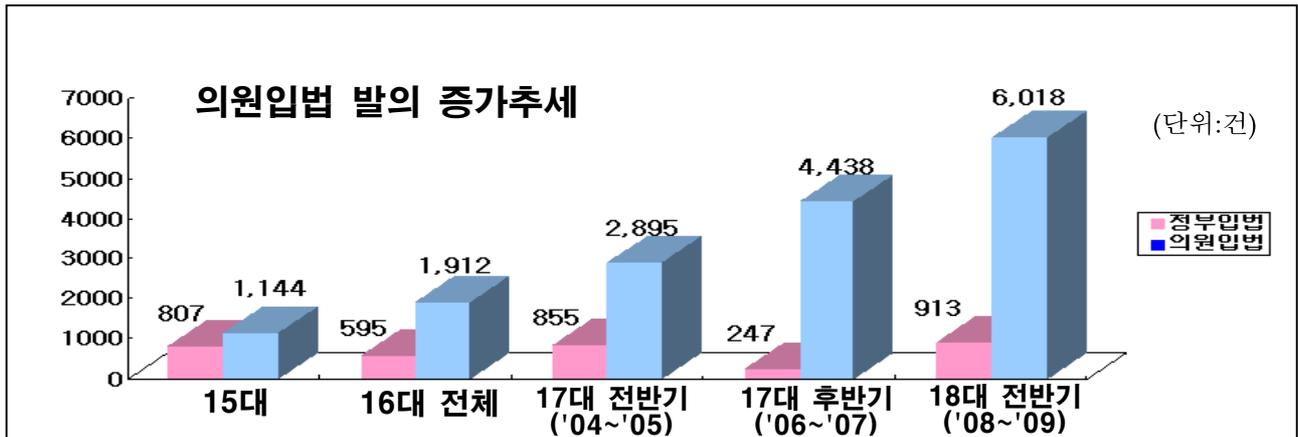
연 월 일	직 제 개 정 내 역
제2067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 하부조직 : 2실 3국 7관 34과 8팀
'08.7.3. 대통령령 제2089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 업무 및 인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217명) ○ 소속기관 정원 조정 : 일반직(811명), 기능직(335명)
'09.5.6. 대통령령 제2147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하부조직의 대과체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실 4국 6관 32과 3팀 - 소속기관 팀 신설 : 정보운영팀(연구소), 전파운용팀(중관소) ○ 정원 : 위원회(491명), 소속기관(1,121명)
'10.10.27 대통령령 제2246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변화하는 업무환경을 반영하여 기초실의 기능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실 4국 6관 32과 3팀

○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체계



○ 의원입법 발의현황

- 18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범정부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 18대 국회 전반기 2년간 6,018건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17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2,895건과 대비하여 2배 이상 폭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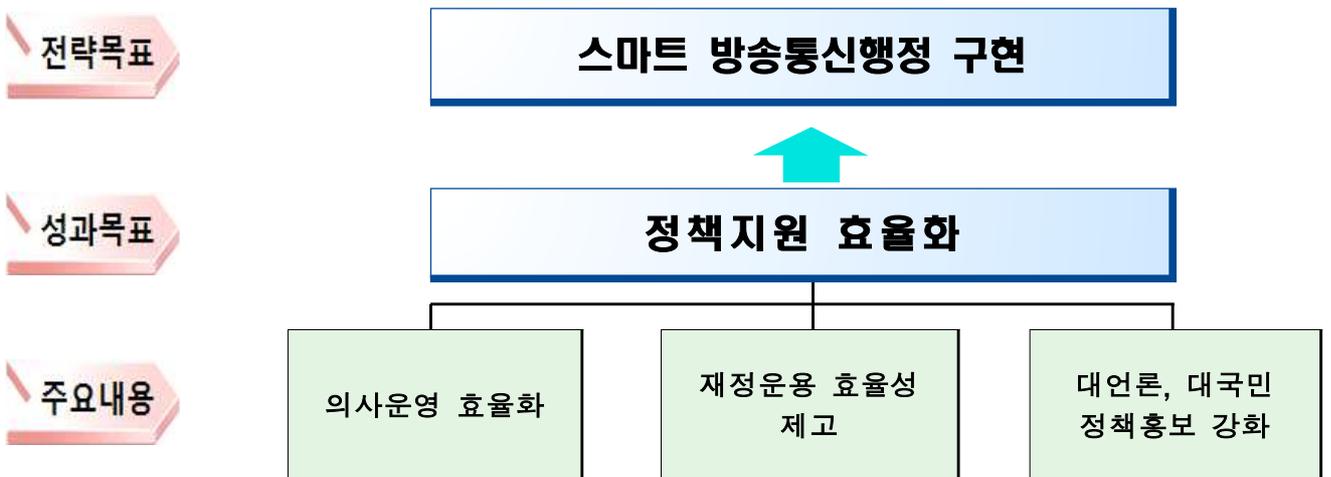


성과목표Ⅳ-2

정책지원을 효율화한다.

(1) 주요내용

- 중요안건 위주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서면회의를 활성화하고, 전자회의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개선
- 효율적인 예산 편성·집행, 결산 및 평가 환류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 2011년 對언론 對국민 홍보방향(PR Focus) 정립 및 방송통신 정책 취재지원 활성화



(2) 세부 추진계획

의사운영 효율화

○ 서면회의 활성화

-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은 가급적 서면회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서면회의 활성화

- 서면회의 개최횟수와 상정 안건수를 확대하여 대면회의에서는 중요안건 위주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의사운영 효율화
- 상임위원 티타임 및 워크숍 활성화
 - 중요안건·쟁점안건 등은 격의 없는 토론과 심층적인 검토 후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책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티타임 및 워크숍 개최를 활성화
- 전자회의시스템 기능 개선
 - 게시된 안건과 회의결과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 개선
 - 비공개 회의에 관한 각종 자료의 신청-승인-열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전자회의시스템 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안건상정과 관련한 각종 서식과 자료를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하여 안건작성의 편의를 향상

□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중기 중점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예산 소요 등을 반영한 중기('11~'15년) 재정계획 수립
- '11년도 재정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수시 집행 현황 점검·관리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12년도 예산안 편성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국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환류
- 국회 문방위 및 예결위원회의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서 제출, 국회결산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對언론·對국민 정책홍보 강화

(정책이슈별 기획·선제 홍보강화)

- 방통위 실국별 주요정책 및 사안의 홍보계획 수립·조정하고 계기별 주요홍보계획 수립
- 위원회 주요 정책이슈별 기획·선제 홍보 및 홍보 다각화 추진

(온라인 홍보 역량 확대를 통한 對국민 소통 강화)

-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정기 이벤트를 통해 블로그 순방문객 증가 및 정책고객 유인
- 트위터(이슈 & 여론 파악), 페이스북(소통 강화), 미투데이(정보 제공)는 SNS 특성에 따라 운영목표를 매체별로 차별화하고, 방통위 트위터와 홍보협의회 소속 각 기관이 운영하는 트위터를 연계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SNS를 적극 홍보
- 방통위 정책 관련 부정적 기사에 대해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와 정책포털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에 위원회 입장을 적극 개선하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SNS와 연계하는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도록 개편

(방송통신정책의 취재지원 활성화)

-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브리핑 실시, Q&A 작성 등 선제적 홍보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보도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체크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 추진
- 출입기자 취재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취재 매뉴얼 발간
- 방통위 직원의 홍보·공보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아카데미 운영
 - 홍보전략, 위기관리 전략 관련 대변인 및 외부 전문가 강연 등 직무교육 실시
- 간담회·워크숍·목요스터디·브리핑 등을 통한 주요정책현안 소통 강화 (연중)
-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국어사용 환경 개선, 국어능력 향상 등 국어책임관 활동 강화 (연중)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지침에 따라 재량적 지출 총액대비 10%이상 구조조정 추진
- 지난해 선정한 종합편성채널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 1개사가 올해 하반기에 출범 예정

□ 갈등요인

- 재정지원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시 사업 실/국·기관·민간 단체와의 재정지원 규모, 시급성 등에 대한 갈등 발생
- 방송매체가 신규로 5개 증가함에 따라, 기자실(브리핑실)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과도한 취재 경쟁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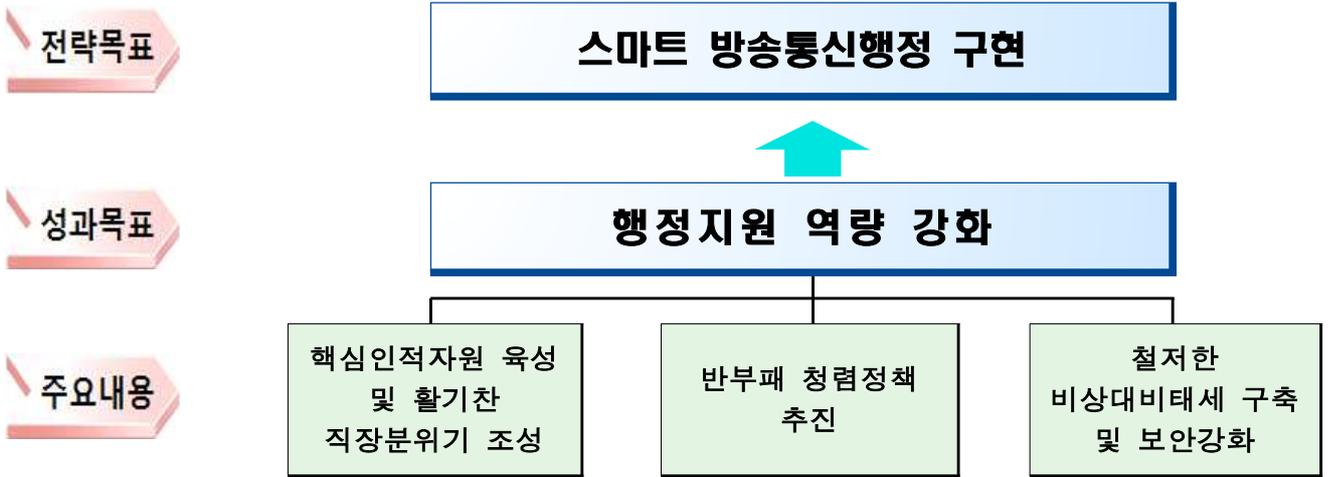
(4) 참고자료

○ 재정현황

구 분		'10년도 (A)	'11년도 (B)	증 감	
				(B-A)	%
총계 <I+II> (총지출=총계-내부거래-보전지출)		8,388 (7,757)	8,653 (7,669)	265 (△88)	3.2 (△1.1)
재 원 별	I. 예 산	3,321	3,208	△133	△3.4
	□ 일반회계	3,256	3,050	△206	△6.3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5	158	93	143.1
	II. 방송통신발전기금 (총지출=총계-내부거래-보전지출)	5,067 (4,436)	5,445 (4,461)	378 (25)	7.5 (0.6)
분 야 별	□ 통신분야	5,726	5,409	△317	△5.5
	□ 방송분야(문화 및 관광) (총지출=총계-내부거래-보전지출)	2,662 (2,031)	3,244 (2,260)	582 (229)	21.9 (11.3)

(1) 주요내용

- 직급별 역할 모델에 적합한 역량교육을 강화하여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발전에 기여
- 한마음 종합체육행사, 가족초청 문화여행, 동호회 활동 지원, 각종 나눔 행사 전개 등을 통해 활기차고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
-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행확산 및 기관별 실천노력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 청렴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선진 청렴문화의식 확산
- 공정사회 실현에 역행하는 법령상의 도덕적 해이 유발요소, 예산 낭비, 불공정·불투명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제거
- 효율적인 방송통신재난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신속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안정성 제고
-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총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지정업체에 대한 정확한 자원조사 실시 및 비상대비분야 확인·점검으로 평시 준비태세 확립
- 방송통신분야 국가기반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보안·경계 태세 확립 및 현장 점검 강화



(2) 세부 추진계획

□ 핵심인적자원 육성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 방송통신위원회의 규모, 업무특성, 현재 인력 구조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 주무관의 본부 전입 시,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직위공모 실시
- 공정한 사회, 저탄소 녹색성장, 공직가치 등 국정비전 공유 및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시책교육 실시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과정, 협상 능력 향상을 위한 협상 스킬과정, 독서통신, 방송통신융합과정 등 전문분야 교육과정 운영
- 한마음 종합체육행사와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여행 실시
- 동호회 활동경비 지원 및 중앙부처 대회 참가 지원
- 농촌사랑 일손돕기 및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이웃사랑 실천활동 전개
- 노후화된 OA책상 교체·환기시설 점검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및 TFT 사무실 지원 및 부서별 요구사항을 토대로 환경개선 공사 실시
- 노사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조직의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 청렴음부즈만 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렴 민관협의체 구성 및 연중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청렴분위기 조성
 - ※ 관련 규정 : 방통위 훈령 제71호, '10.6.29 제정·운영
 - 분기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회의 및 맞춤형 청렴교육·홍보를 통한 반부패 청렴 시책의 자율적 실천노력 강화
- 현장점검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
 - 예산누수 빈발분야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집중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및 공직사회 부패 방지
 - ※ 근거법령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공감법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

□ 철저한 비상대비태세 구축 및 보안 강화

- 효율적인 방송통신재난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신속한 재난방송으로 국민의 안정성 제고
 - 방송통신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재난 대비 예방·대응활동 전개, 신속한 피해상황 접수 및 전파 등 위기대응체계 구축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EDBS) 개선 및 신속한 재난방송 체계 유지
 - 재난방송협의회 운영을 통한 재난방송 체계 발전 및 국지적 재난 대응
-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총무계획 작성과 시행 및 실시계획의 승인
- 중점관리대상 지정업체 자원조사 실시로 우수 동원자원 발굴 및 비상대비분야 확인·점검으로 평시 준비태세 확립
- 상·하반기 비상대비분야 확인평가 및 동원지정업체 자원조사 실시로 문제점 개선과 우수업체 자원동원 지정

- 방송통신분야 국가기반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보안·경계 태세 확립 및 현장 점검 강화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인력운용계획 수립시 관련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인력운영에 대한 총괄 조정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필요
-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교육수요 증가 및 교육업체 다수 존재
-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직장내 행사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음
 - 사랑 나눔 실천 등 사회공헌 활동이 범사회적으로 확산 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자발적 참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조사대상국 178개 국가 중 39위(5.4점), OECD 30개국 중 22위로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국제투명성기구, '10년)
- 금년의 경우,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조직 및 인사, 자체감사활동 등이 새롭게 개편되는 시점
- 안보불감증에 가까운 사회적 분위기와 IT발전에 따른 보안 환경 급변
-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복구를 위한 상황실 개소 등 불규칙적 상황근무로 인해 기피부서로 인식

□ 갈등요인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매체, 방법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희망하는 모든 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없음
-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사무실 환경개선 시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음
 -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고 참여자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음
- 금년은 새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선 시기인데다, 4월 재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직기강이 헤이해질 우려가 있음
- 공공감사법 시행(10. 7월)에 따른 광범위한 감사대상에 비해 감사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
- 북한의 내부 불안정에 의한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국지도발 및 한반도 주변정세 불안
- 개방화·자율화 분위기에 따른 보안의식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해외발 사이버공격 지속증가로 국가중요자료 유출
-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재난 총괄기관인 행안부와 방재청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사업자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음

(4) 참고자료

□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

<국제사회의 평가>

○ OECD 평균 6.97점에 비해 1.57점 낮고 OECD 30개국 중 22위에 불과

<OECD 주요 국가별 CPI 현황>

구분	OECD 평균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미국	프랑스	스페인	한국	폴란드	이탈리아
2010	6.97	1위 (9.3점)	1 (9.3)	4 (9.2)	22 (7.1)	25 (6.8)	30 (6.1)	39 (5.4)	41 (5.3)	67 (3.9)
2009	7.04	1위 (9.4점)	2 (9.3)	3 (9.2)	19 (7.5)	24 (6.9)	32 (6.1)	39 (5.5)	49 (5.0)	63 (4.3)

※ '09년도 5.5점으로 180개국 39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정부의 교육·토착·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척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CPI 순위는 답보상태

<국내의 인식>

○ '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706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44점으로 외부청렴도는 약간 나아졌으나,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하락

<종합청렴도 개선도('08~'10)>



*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10.12. 9, 국민권익위원회)

○ 최근 5년간 통신재난 현황

유 선

사업자명	발생수	비 고
KT	3	
SK브로드밴드	3	
LGU ⁺	7	
드림라인		

무 선

사업자명	발생수	비 고
SK텔레콤	5	
KT	6	
LGU ⁺	6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2011~2015)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관리담당관실(02-750-1641, 16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